

기본소득

2019 겨울
#003

|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
| 발행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 편집위원장: 백승호 |
| 편집위원: 김교성, 류보선, 서정희, 이관형 |
| 편집디자인: 사과나무 |
| <https://basicincomekorea.org> |
| basicincomekorea@gmail.com |

BIK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Basic Income Magazine Issue No.3

C O N T E N T S

머리글	04	인간해방의 대안, 기본소득 실현의 디딤돌 _ 백승호
이 계절의 이슈 :	07	불성실한 오용과 창조적 오독: 농민기본소득 그리고 이후 _ 안효상
농민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11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그리고 과제 _ 박경철
위한 디딤돌인가?	16	녹색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민기본소득 _ 하승수
화제의 인물	20	[오준호 작가]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_ 인터뷰어 신형철
	32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90년대 생이 온다, 기본소득당이 온다 _ 인터뷰어 류보선
문학	48	[시] 혼자 올 수 있도록 - 오래된 기도 2 _ 이문재
	49	[공트] 발바닥이 간지러워 _ 윤성희
류보선의 종횡무진 기본소득 3	53	묵시록적 징후들과 정치개혁의 원리로서의 기본소득 _ 류보선
동향	67	[학술 동향] 기본소득인가 일자리보장인가 _ 이건민
	81	[국내 동향]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 _ 백승호
	85	[현장스케치] 2019년 한국기본소득 포럼 “우리 사회의 현실과 기본소득” _ 이관형
	94	[현장스케치] 사진으로 보는 “국제기본소득행진” _ 박선미
기본소득과 나	104	기본소득, 새로운 사회복지 _ 송상호
친절한 교성 씨의 기본소득 QnA	106	기본소득의 재정적 가능성 _ 김교성

인간해방의 대안, 기본소득 실현의 디딤돌

백승호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장

1991년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는 좌파에게 보편적 인간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의 종말로 받아들여졌다. 그 이후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동안에도 좌파는 속수무책이었다. 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약 30년이 흘렀다. 그 사이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주도했던 금융자본주의를 지나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진화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진영은 전통적 사회변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다 할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해왔다. 그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막아내지 못했으며 불안정성은 우리의 삶 깊숙이 일상화되어왔다. 사회적 위험은 비정규직과 같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액체근대 시대의 위험은 유동적이다. 정규직이라고 안정적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소위 ‘내부자’로 분류되었던 대기업의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들조차도 정리해고의 파도 앞에서는 미끄럼틀식 사회경제적 지위의 추락을 경험한다. 기존의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만으로는 이러한 유동적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 기존의 복지국가에 새로운 변혁적 대안이 더해질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좌파진영의 새로운 변혁적 대안으로 **기본소득**이라는 파도가 속도감 있게 밀려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뿐 아니라, 토지, 빅데이터와 같이 애초에 모두의 것이었던 자원들로부터 생산되는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장치로서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인간해방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해방적^{emancipatory}’이란 ‘인간에 대한 억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풍요란 물질적 박탈로 인한 욕구가 충족된 상태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 아마도 기본소득 그 자체가 본질적이고 필연적으로 해방적인 상태를 담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에릭 올린 라이트는 새로운 대안이 해방적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첫째는 바람직성이다. 대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사회정의와 정치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함을 의미한다. 사회정의는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물질적, 사회적 수단에 대해 대체로 평등한 접근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수단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유부 배당의 기본소득은 바

람직하다.

둘째는 실행가능성이다. 한 사회에서 대안의 실행가능성은 한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부수적 조건들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커질 때 실행가능성은 높아진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의 설계는 사회적 믿음을 확장시켜 사람들의 심리적 실현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비판에 기초한 바람직한 대안은 사람들의 심리적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상적이라고 받아들여질 경우, 그 대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며 실행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로 해방적 복지국가의 대안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대안이 아무리 바람직하고 실행가능하다 해도, 지속될 수 없다면 대안으로서의 생명력은 사라진다. 대안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방적 대안을 지지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의식적 이행노력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힘이 있어야 하고,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의 실행가능성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수정된 기본소득 유형들이 제시되어왔다. 대상자 선정에서 인구학적 조건만 부여하는 사회수당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소득형, 정치배당형, 생태배당형, 농민기본소득형, 급여형태의 변형으로 지역화폐형, 급여지급방식에서 상속자산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적지분급여형, 급여의 경제적 목표달성을 강조하는 경기조절형 기본소득 등이 그것이다. 계간 『기본소득』 겨울호는 기본소득이라는 사회 변혁적 대안의 실행가능성과 관련된 하나의 제안으로써 ‘농민기본소득’을 다룬다. 인간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소득 실현의 디딤돌로서 농민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함이다.

[기획]

농민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위한 디딤돌인가?

- 불성실한 오용과 창조적 오독: 농민기본소득 그리고 이후 안효상
-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그리고 과제 박경철
- 녹색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민기본소득 하승수

불성실한 오용과 창조적 오독: 농민기본소득 그리고 이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창립자 가운데 하나이며, 여전히 기본소득 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가이 스탠딩은 『기본소득』 한국어판을 이렇게 시작한다. “한국은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일을 이끌 수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그는 근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편주의적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든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등 변죽만 울리는 느낌이었다. 도리어 이렇게 말했다면 호소력이 있었을지 모른다. ‘한국은 부족하면서도 잡다한 패치워크 같은 사회보장 체제가 있으며, 이제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고, 따라서 서구 복지국가 건설 과정을 반복할 게 아니라 기본소득을 주요한 축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인 일로 보인다.’ 여기에 이런 말을 덧붙였을 수도 있다. ‘한국에는 대중의 열망에 반응하면서도 이를 적당히 이용할 줄 아는 정치가들이 적지 않으며, 이들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서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을 여는 사람들이 나타날지 모른다.’

범주형 기본소득의 난점과 가능성

실제로 2017년 대선 기간에 여러 후보가 기본소득을 자신의 정책을 포장하는 이름으로 가져다 썼다. 청년, 아동, 노인 등 다양한 범주의 인구 집단에게 주는 사회수당을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들은 현금 급여 방식의 복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점에서 성실한 대중 정치가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기본소득제를 당장 실시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더 중요하게는 기본소득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을 단번에 실시한다고 주장할 경우 무책임한 정치가로 낙인 찍힐 것

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내놓았던 국토보유세 기본소득이었다. 하지만 금액이 매우 적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불성실한 오용이었다. 우선 포괄적인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부당하게 전제했다.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가 제대로 돈을 걷고, 이를 제대로 분배하는 것을 조건이자 목표로 한다. 따라서 조세 개혁을 포함한 자원 마련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풀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인 셈이다. 한편 기본소득으로 분배된 돈은 낭비되는 돈이 아니라 경제 순환에 들어가는 돈이며, 이는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다시 적절한 자원 마련의 토대가 된다. 두 번째로 인구 집단의 일부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급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왜 청년이지? 왜 농민인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청년이나 농민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묻게 되고, 이는 거의 틀림없이 이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럴 경우 권리로서의 복지,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의 원리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며, 기본소득 진영에서 그렇게 비판해온 낙인 효과가 뒷문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상황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을 두 개의 전선으로 내몰았다. 하나는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실행하기 위한 고유의 노력을 펼치는 전선이며,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는 정책들의 적절한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 싸우는 장소이다. 물론 두 개의 전선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일상적인 ‘전격전’ 속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된 농민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왜 농민기본소득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있다. 다시 말해 이 정책에 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하는가인데, 이는 이미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농민이나 청년 등 특정 인구 집단에게 현금 급여를 하는 것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쓰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기본소득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 무조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소득에서 말하는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어떻게 다른 지에 관한 논의를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여기서는 그저 현실에서 무조건성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여기에는 최근 한국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다. 무상급식에서 아동수당까지 선별 복지가 아니라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복지 급여를 지급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를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며, 따라서 지금부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농민기본소득의 배경과 혼란

이런 의도가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나중에 따져 보기로 하고, 우선 농민기본소득이 제기된 배경을 살펴보자. 다시 말해 왜 농민인가?

사실 농민에게 소득 지원이나 보상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이번 호에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 대해 쓴 박경철이 오랫동안 수행해 온 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 농민기본소득이 아니라 농민수당을 주장하는 전농의 근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독특한 이름의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 등

을 잠깐만 살펴봐도 누구나 동의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민의 삶이 파탄에 빠졌으며, 이 속에서 농민 인구는 급감했다. 또한 농업소득은 정체했으며,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부문이기에 포기할 수 없으며, 이런 이유로 유럽 등지에서는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농업은 생태계 보존 등 상당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런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등등.

물론 현재에도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직불금 등 다양한 지원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70퍼센트가 넘는 농민이 1헥타르 미만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받는 직불금이 고작 4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2헥타르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12퍼센트가 직불금의 50퍼센트를 가져가고 있어 농촌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이는 농촌 공동체 자체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계기로 하여 정부는 이른바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공익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직불금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예컨대 생태계 보존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가 소농인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서 면적과 상관없이 일정 액수를 기본으로 지급하고, 여기에 면적 비례로 추가 지급하는 계획이다.

'공익형 직불금'으로의 제도 변화는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농업, 농촌, 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라는 관점에서 그렇고, 무엇보다 농업과 농민 자체의 의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점에서도 맞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농민이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가이다. 하지만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대로 0.5헥타르 미만의 농가에 연간 100만원의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다. 사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양이 아닐까?

그런데 농민기본소득 논의가 떠오른 것은 지방에서부터였다. 작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로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급여를 하는 정책이 농민단체의 요구와 단체장의 화답 속에서 들불처럼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와 주장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된 과정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추측만 가능할 뿐인데, 몇 가지 흐름과 의도가 겹쳐지면서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진기한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앞서 언급한 박경철 같은 연구자, 정책가의 노력이다. 그는 오래 전부터 농업, 농촌, 농민(3농)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기본소득적 방식이야말로 소득 보장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노력이 농민기본소득이 호소력 있는 의제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2017년 대선 시기와 비슷하게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에서 일부 정치가나 정책가들이 어떤 호소력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말했듯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급여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들에게는 적절해 보였다. 세 번째로 무조건성에 대한 강조는 사실 복지를 권리로 보는 인식 상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이는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에 대한 전농의 입장 표명에서도 뒤집어진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 이 입장문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말실수나 농담 같은 위상의 글이다. 이 입장문에는 기본소득(윤소하 의원의 기본수당을 기본소득과 같은 것으로 취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 시혜를 베푸는 정책"으로 "소득 보전을 통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농민수당은 농업

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민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기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농민기본권)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다. 수당과 기본소득의 원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쓴 글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여기서 할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농민수당은 정당한 몫 혹은 권리에 대한 주장이며, 이는 시혜와 대비된다는 것이다. 농민수당을 이런 근거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소득도 권리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것인데, 굳이 뜻을 왜곡하면서까지 기본소득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물론 이 자리는 그 이유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복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정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겠다.

농민기본소득과 포괄적 기본소득

사실 현대 국가에서 복지는 시민의 권리이다.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진전 속에서 권리로서의 복지가 형해화되었고,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에 새겨진 문구와 상관없이 복지가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복지 정책의 권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창조적 오독처럼 보인다.

사실 더 강렬한 창조적 오독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현금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위배’라고 하기보다는 ‘미달’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미달’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그 이상의 몫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렬한 창조적 오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남는 문제는 농민기본소득과 같은 ‘범주형 기본소득’이 포괄적인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이다. 사실 ‘알 수 없다’가 이에 대한 가장 솔직한 대답이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거나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이점은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정도이다. 물론 여전히 기본소득이 낯선 아이디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도 적은 효과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포괄적 기본소득의 도입은 전반적인 복지 체계의 재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체제 및 개인들의 경제 생활의 변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 속에서만 가능하고, 또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포괄적인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가 건설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형성에 비견할 만한 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복지국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그리고 그만큼 커다란 필요성 속에서 탄생했다. 국민국가와 총력전 시대에 커진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이 진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회 해체의 징후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체되는 사회를 다시 살려내는 일은 새로운 보편성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어야 하며, 이때 기본소득은 이를 상징하는 기표이자 정책일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그리고 과제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기억이 흐릿하지만 ‘농민기본소득’을 처음 생각했던 것은 IMF 금융위기 때인 것 같다. 1998년 8월, 9년 반 만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부가 시행하는 3개월짜리 청년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어머니는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서울로 다시 올라와 청년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 주된 일은 서울 서초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고서들을 꺼내 그 자료들을 DB화하는 작업이었다. 작업을 하면서 진기한 고서들도 많이 보았고 그러한 진기한 고서들에 대해 조선총독부 시기 이후 거의 처음으로 정리 작업을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청년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3개월짜리 일자리를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목적은 3개월 간 일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실업급여라는 것도 사실 취직을 한 사람한테 주는 자격이었는데 IMF 금융위기 당시에는 취업 자체가 어려우니 우선 공공근로를 통해 3개월간 일을 하고 퇴직 후 최대 6개월간 실업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완화해 주자는 취지였다.

그 시절 처음으로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들었다. 굳이 청년들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만들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구직 활동을 (허위로) 증명하지 않아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돈, 청년기본소득이 청년공공근로보다 낫다는 글을 어디에서인가 읽었다. 그러면서 그때 한참 농업직불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농업직불제도 기본소득형태로 농민이면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쌀시장 개방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도 막겠단 김영삼 정부가 결국 쌀시장도 개방하겠다고 선언한 후 농민들은 격렬한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정부는 ‘세계화’ 시대에 개방은 막을 수 없는 대세라며 밀어붙였다. 그러다 결국 IMF 금융위기를 맞았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을 위해 농업직불제 도입을 시작했다. 그 설계자는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었다.

대통령을 설득하고 재정경제부 관료들을 설득해 농민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농업직불제 도입을 시작했다.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1999년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을 도입했다. 현재까지 농업직불제는 이들을 포함해 총 10가지가 된다.

하지만 1993년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1995년 WTO체계가 출범하고, 이후 FTA(자유무역협정)이 시작되었다. 다자간 협상체계인 WTO 협정이 진전되지 않자 양자 간 협정인 FTA 협정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16건의 FTA 협정으로 57개국과 자유무역을 실행하고 있다. 거의 모든, 전세계 농업대국 혹은 농업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 위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서구선진국과 같이 오랜 시간을 거쳐 농업의 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진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개방을 추진하고 자유무역을 추진하다 보니 경쟁력이 없는 우리나라 농산물은 외국의 값싼 농산물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농자재 가격은 급등해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도 소득 창출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농민들은 하나둘씩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농가 인구는 약 1,000만 명이었으나 지금은 231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도시가구와 농가 간 소득격차는 63.5%(2018)로 떨어졌고 곡물자급률은 21.7%로 하락했다. 농촌사회는 붕괴되고 농업은 몰락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농업의 최후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WTO 개도국 지위마저 지난 10월 25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포기’를 발표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유독 농민에 대해 박하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농업, 농촌, 농민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든다. 농민들은 “이전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미FTA 추진으로 농민들을 어렵게 하더니 현 정권에서는 농민 무시 정책으로 일관한다”며 성토했고 있다. 과거 보수 정권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분노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이 왜 이렇게 몰락했고 농민은 갈수록 힘이 드는가. 그것은 제도의 잘못에 있다. 우리나라와 서구선진국 간 농업과 농촌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이전에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인식과 철학이 크게 다르다. 서구선진국은 농업과 농촌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가 철저히 지원한다. 사실 서구선진국 농민들도 힘들다. 그들도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지만 그들은 농사를 계속 짓는다. 왜 그럴까? 농사를 지으면 각종 보조금 형태의 직불금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잘 살지는 못해도 농촌에 살면 어느 정도 여유있게 살 수는 있다. 그들은 보통 농가당 평균 40~70헥타르의 면적을 경작하기 때문에 1헥타르당 40만원의 직불금을 주어도 농가당 평균 약 1,500~2,500만원의 직불금을 받는다. 이것을 ‘기본직불’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친환경농업, 경관농업, 생물종다양성농업, 마을공동체활동 등을 할 경우 추가 직불금을 받는다. 이것을 ‘추가직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럽의 농민들은 직불금만으로도 평균 몇천 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농산물 판매 수익까지 합하면 더 늘어난다. 이 때문에 유럽의 농민들은 국토 어디에 있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의 아름다운 농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직불금을 주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이처럼 아름다운 농촌은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관광객의 휴식처이자 안식처가 된다. 국가가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고 농민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유럽 농정 예산의 약 70%, 스위스 같은 나라는 약 85%를 농업직불제 형태로 농민들에게 직접 지

원한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에서는 그림 같이 아름다운 농촌이 만들어지고 이곳에 많은 도시민, 관광객 등이 찾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어떤가. 개방화 추진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맹신하며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규모화, 효율화를 추진하다 보니 소수의 농민만이 살아남고 다수의 농민은 농정에서 배제됐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소농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에 집중되는 농정을 펴다 보니 다수의 소농은 설 자리를 잃고 도태되어 갔다. WTO체제 하에서 허용하는 보조금마저 소수에 집중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농가인구의 70%는 1헥타르 미만 농가인데 이들이 받는 연간 평균 직불금은 30~40만원에 불과하다. 상위 12%의 농가가 전체 직불금의 절반을 차지하며 농업직불금의 약 82%는 쌀재배 농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농가 내 양극화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는 2005년 약 10배에서 2015년에는 약 15배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상하위 20%간 소득 격차가 대략 8~9배인 점을 감안하면 농가 간 소득 격차는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만한 농민들은 직불금이라도 많이 받기 위해 농사 규모를 계속 넓혀야만 하는 구조이다. 이렇다 보니 소규모 농가는 생존이 어려워 농사를 점점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업과 농민을 산업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 공공재적 관점에서 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토를 가꾸는 농민들에게 월급(기본소득 또는 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가 ‘공익농민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후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은 ‘공익 농민 월급형 기본소득제(농민기본소득)’(2014),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농가 기본소득제’(2015), 김종철 녹색평론 편집인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필자도 2014년 충남연구원 내 ‘농민기본소득연구회’를 조직해 농민기본소득 공론화에 나섰다. 2015년에는 ‘충남도 농촌주민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농민단체 진영에서는 ‘농민수당’ 추진에 적극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민민중당에서는 대략 2017년부터 농민수당제 도입을 최우선 순위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전면적인 활동을 펼쳤다. 희망이 사라진 농촌 현장에 그나마 농민수당이 농민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고 이를 통해 농정개혁의 밑불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은 현재 농촌 현장에서 최대 화두가 되었다. 2018년 강진군, 2019년 해남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창군, 봉화군도 이미 지급을 완료했고 화순군, 함평군, 부여군, 청송군도 올 겨울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에서 시작한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은 광역지자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가 2020년부터 도내 전 농(어)가에 농(어)민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있고, 강원도도 2020년 농민수당 지급을 거의 확정지었고 충북도에서도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2020년부터 6개 시·군 지자체 농민에게 개별 단위 농민기본소득제 실시를 준비 중에 있다. 이처럼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원칙에 가깝게 가고 있다.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은 이제 전국 의제화가 되었다. 정의당과 민중당에서는 각각 ‘농민기본수당’,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고 <농민기본소득 추진 전국운동본부>도 지난 11월 7일에 발족되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농민수당(농민기본소

득)을 적극 지원 및 추동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등의 기회를 통해 농민기본소득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추동할 계획이다. 2020년 총선 때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농정 분야 최고의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아무리 대세라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첫째,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근본적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보통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은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하지만 농민기본소득의 관점은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희생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강하고, 농민수당의 관점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많게는 252조 원으로 평가되기도 한다(농진청, 2012년) 현재 농민운동 진영과 전문가, 진보정당 간에도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암튼 두 관점은 크게 보면 하나로 수렴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결국 농민을 위한 대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개별 농민단위 지급과 농가단위 지급 간에 논쟁이 존재한다. 현재 농민수당을 실시하거나 실시를 준비하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농가단위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불안한 통계시스템, 행정 편의, 예산 제약 등의 이유로 지자체는 농가단위 지급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 특히 여성농민단체, 전문가그룹에서는 농가단위 지급 시 여성농민, 청년농민 등이 배제되기 때문에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선 농가 단위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통계시스템과 재정이 마련되면 개별 농민단위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별 농민단위 지급은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2020년부터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민 개별 지급의 농민기본소득제를 추진할 계획이라서 기대가 많다. 다른 지자체들도 점차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관계 설정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면적 기준에 따른 농업직불금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영세소농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기본소득 개념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논밭 구분 없이 일정 면적(예, 0.5헥타르)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80~100만원의 직불금을 지불하고 그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점증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생태환경 증진을 위한 조건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지만 아무튼 정부에서도 기본소득 개념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준비하는 만큼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실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등 관계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 논의는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은 암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기본소득이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농민기본소득 이외에도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농산물 가격 안정, 열악한 의료·복지와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농지 소유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농정의 화두로 대두되는 것은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 생존권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정도 각종 보조사업, 공모사업, 개발사업 등과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선진국

처럼 농민에게 직접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농민이 살 수 있고 농정 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수당제를 처음 도입한 해남군을 찾았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었냐고 물으니 그는 “일반 농정예산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이 제도 도입의 기술적인 문제는 부차적이라는 뜻이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근 LAB2050에서도 ‘전국민기본소득제도 당장 마음만 먹으면 추가 세원 확보 없이 개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농업과 농촌이 붕괴되고 농민이 사라진 사회의 위험은 고스란히 도시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농촌의 아름다움도, 안전한 먹거리도,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주권국가의 기능도 상실할 것이다. 선진국치고 자국의 식량을 자급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농민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다. 농민기본소득, 그것은 우리 사회가 농민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외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국가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녹색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민기본소득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은 2012년 3월 4일 창당한 직후에 치른 18대 총선에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당시에 녹색당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농민부터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채택했던 것이다.

당시에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을 지키고 농지를 보전하는 농민의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으로 제안되었다. 농민이라면 누구나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농민기본소득’의 재원은 부채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후에 보유세(가칭 경자유전세)를 걷고, 그 외에도 토건예산을 줄여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녹색당은 2014년에도 농민기본소득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2016년 총선에서는 농민과 함께 청소년, 청년, 장애인, 노인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하는 것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그 전인 2015년 3월, 녹색당은 대의원대회에서 보편적 기본소득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은 녹색당의 정책이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라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사회적·공익적 기여를 인정하여 지급되는 돈이다. 따라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데, 어느 단어를 사용하든 농민기본소득 지급의 정당성은 농민의 사회적·공익적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농민은 보편적 기본소득 + 농민기본소득을 받는 것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보편적 기본소득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면, 더욱이 이런 개념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후위기가 빠르게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서 농업을

지키는 것은 농민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가뭄, 홍수, 슈퍼태풍, 이상기후 등은 결국 먹거리위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농업의 전환도 필요하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농업이나 공장식 축산은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온실가스를 되도록 적게 배출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곡물자급률이 20%대에 머무르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더욱 먹거리주권 Food Sovereignty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지를 사람이 있어야 하고,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에게 농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후자의 문제는 제2의 농지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비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경지면적 167만 9천 헥타르 중 비농업인 소유는 43.8%(73만 5천 헥타르)로 나타났다(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그러나 실제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60%를 넘을 것으로 농업계는 보고 있다. 이처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대거 소유하게 되면서, 헌법에서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온 탓도 있다. 기득권층들이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례가 많은 것이다. 최근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3분의 1(99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상속 같은 이유 때문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을 리 없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농지전용도 늘고 있다. 매년 서울 면적 3분의 1 규모(2만 헥타르)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다. 1949~1950년에 했던 농지개혁처럼 제2의 농지개혁을 해야 한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처분명령 제도가 있지만, 예외 사유가 광범위하고 실제로 법집행이 잘 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약하다. 처분명령 제도를 강화해서 비농민 소유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과거 농지개혁 때처럼 국가가 장기 상환증권(가칭 먹거리주권증권)을 발행하고 유상몰수·유상분배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처분하지 않는 농지를 의무적으로 농지은행에 맡기게 하되 임대료는 없게 하는 방법이다. 무상위탁·무상임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임대료가 없는 이유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반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농지은행이 농지를 관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를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빌려줄 때에는 최소 5년 이상 장기로 빌려줘야 한다.

물론 지금도 농지은행 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효성이 약하다. 전체 비농민 소유 농지의 일부만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되는 것인 데다, 임차하는 농민이 임차료를 내는 방식이다(임차료 수준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 이런 방식이 아니라,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처분하지 않는 농지는 무상위탁·

무상임대 방식으로 농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농지문제는 이렇게 해결한다고 해도,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짓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보장해줘야 한다. 그 방법은 농민기본소득 또는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월 40만~5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모든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도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미 농민들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1일 기준으로 전체 농가는 102만1천 가구까지 줄었고, 농가인구는 231만 5천 명으로 줄었다. 전체 농민들에게 월 4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해도 1년에 10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다.

농민기본소득 재원의 일부는 기존의 농업예산을 조정해서 만들 수도 있고, 토건예산 등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서 마련할 수도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여전히 토건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당연히 근절해야 한다. 그 돈을 농업을 살리고 먹거리 주권을 실현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토건사업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원천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정부가 만든 특별회계 중의 하나인데, 시민들이 휘발유·경유를 넣을 때 붙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여기로 흘러 들어간다. 연간 15조 원 정도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걷히는데, 이 세금의 80%가 자동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다(2018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는 15.3조 원이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돈의 비중을 73%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의미 없는 변화이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 공항, 철도, 항만 건설에만 쓰게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 특별회계가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 불필요한 사업이라도 벌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 부처 몫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낭비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만, 정치인들은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서 자기 지역구의 토건사업 예산을 따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통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면 12조 원 정도의 돈이 매년 생기게 된다. 그중 3분의 1 정도는 기존 토건사업 뒷마무리(민자사업 등 때문에 들어가야 할 돈이 있다)에 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분의 2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외에도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는 너무 많은 토건사업들이 들어가 있다. 문화예술 예산 등 다른 명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건물 짓는 돈들도 많다. 이런 토건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줄여나가려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토건예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게 만들어야 한다.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논란이 있는 토건사업의 경우에는 추첨 등의 방식으로 뽑힌 시민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토건사업 시민심사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일본에서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증세도 해야 한다. 토지보유세 강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금융(이자, 배당, 주식양도차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상속·증여세 강화 등의 증세 방안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강력한 환경세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낳는 미세먼지 배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국가 차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이미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에 덧붙여서 지역 차원의 농민수당(현재는 연 60만원 수준)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농민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농산물개방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가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셈인데, 이를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업은 여러 산업 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존 기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오준호
작가를
만나다

인터뷰어
신형철
문학평론가,
조선대 교수

논픽션 작가 오준호를 독자 여러분께 소개한다. 그가 이 지면에 소개되기 적절한 인물이라 판단해도 좋을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중 하나다. 둘째, 그는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를 펴낸 기본소득 전문가다. 셋째, 이것은 가장 간접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가 조지 오웰 같은 작가이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이 훌륭한 논픽션을 쓴 적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나는 왜 쓰는가』에서 작가가 글을 쓰는 데에는 네 가지 동기가 있다고 했다. 순전한 이기심, 미학적 열정, 역사적 충동, 정치적 목적. 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천성적으로 앞의 세 가지 동기를 마지막 네 번째 동기보다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었지만 스페인 내전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네 번째 동기를 위해 쓰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말을 옮겨보자.

“나의 출발점은 언제나 당파성을, 곧 불의를 감지하는 데서부터다. 나는 앉아서 책을 쓸 때 스스로에게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쓰는 건 폭로하고 싶은 어떤 거짓이나 주목을 끌어내고 싶은 어떤 사실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나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남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나는 왜 쓰는가』, 이한중 옮김, 한겨레출판, 297쪽)

내 짐작으로는 오준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폭로하고 싶은 거짓과 알리고 싶은 진실, 바로 그것이 그를 쓰게 했고, 특히 그의 좋은 책들을 쓰게 했을 것이다. 오웰도 오준호도 될 수 없는 나는 모종의 경외감을 품은 채로 그를 만났다. 그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눈 것은 25년 만이다. 실은 그는 나의 선배다. 사적 안부로 말문을 열고 있는 것에 대해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1995년에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얼굴이 검붉은 선배 하나가 동향 출신이라는 핑계로 불온한 공부를 권유한 것이 벌써 25년 전이다. 나는 실감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어처구니가 없다. 그날 이후로 25년을 살았다니 말이다.

- 1995년 초 나는 2학년으로 새내기 사업 ‘과책’이었다. 새내기를 잘 이끌어(?) 국문과 학생회를 활기찬 진보적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의욕에 불탔었다. 새내기들과 매일 어울리고, 밤새 술 마시고, 수업보다 학회 세미나를 챙기고, “데모도 해보야한다”고 열심히 후배 꼬드기고 말이다. 한 95학번 친구가 나보고 “형은 과방에서 살아요?”라고 묻기도 했다. 그렇게 열심이었던 건, 대학에서 보낸 그 전 한 해가 나를 완전히 흔들었기 때문인 듯하다. 자유, 해방, 공동체 같은 가치에 푹 빠졌다. 후배에게도 똑같은 경험을 전해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당신과 만나 세미나도 하고 데모도 하러 다녔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다. 지금은 복개된 도림천(녹두거리 앞) 아래 내려가 밤이 이슬할 때까지 노래패 동아리 사

람들과 민중가요 부르고 술 마시고 하던 기억. 우리는 함께 <청계천 8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얘기도 했다. 누가 보면 젊은이들의 객기 같았겠지만, 영혼의 밀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인지, 20년도 더 지났는데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 밤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1995년, 아니면 1996년의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21세기 이후에는 서로 근황을 알지 못한 채 살게 됐다.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학생 신분을 연장했고 당신은 학교를 떠났으니까. 그간 궁금했으나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던 ‘이력’을 오늘은 좀 물어봐도 될까? 21세기 이후 첫 십년을 대략 어떻게 지냈는가?

- 실은 학교를 ‘완전히 떠난’ 것은 21세기 들어서고도 꽤 지난 2005년 2월이다. 졸업을 그때 했다. 94학번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했고, 휴학하고 ‘전국학생회협의회’



라는 운동 조직에서 일했다. 2000년에 학생운동 동지들과 울산에 가 자동차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운동도 잠시 했다. 느지막이 군 복무를 하고 나니 스물아홉 살이었고, 결혼을 하고 학교에 복학해 학업을 마쳤다. 이십대 초에 매일매일 성전에 나서는 기분으로 대학 시절을 보내다가, 복학해서 공부하고 책 읽고 후배들과 탁구도 치며 보내는 대학 시절은 참 평화롭더라. 결혼을 했으니 생활비에, 학비까지 벌어야 해서 방학에 과외를 대여섯 개씩 해야 했지만 말이다.

당신이 서른 무렵에, 게다가 학부 졸업도 하기 전에 결혼을 했다는 것이 좀 놀랍다. 왜일까? 내게 당신은 긴 호흡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주어지는 상황에 일단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기억돼 있는 모양이다.

- 함께 운동하던 동료와 연애를 했다. 물론 미래가 불확실하던 때였지만, 결정을 미루면 모든 게 더 불확실해질 것 같았다. 과감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아내의 역할이 컸다. (웃음)

2005년 졸업 후에는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청년진보

당, 사회당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은 것 같다.

- 그랬다. 당연한 진로라 여겼다. 졸업 후에 사회당에서 일했다. 사회당은 1998년 창당한 청년진보당을 전신으로 2001년에 창당한 좌파 정당이었다. 주요 간부가 30대로 젊었고, 주요 행사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수자 배려에도 민감했다(그 당시엔 일반적이지 않은 문화였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하고(2004년) 세력을 넓히는 동안 사회당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지 못했다. 2007년에 당의 도약을 도모해보겠다고 사회당 서울시 당위원장이 됐고, 그해 대선에 사회당 금민 후보를 모시고 선거운동을 했다. 이때 사회당은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잘 정돈된 공약은 아니었다. 사회당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불평등과 불안정은 커지는데 서구 복지국가가 걸어간 길을 한가로이 뒤따라갈 수는 없다고, 시민의 삶의 토대를 보장하는 급진적 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는 그때 기본소득을 처음 접했다. 득표 결과는 별로 안 좋았고, 그 여파로 2008년에는 당이 분열됐다. 당의 간부로서 당을 수습하고 나니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시

작했다. 2016년 탄핵 촛불시위의 예행연습 같았던 2008년 촛불은, 2016년에 비하면 과하게 체력전이었다. 시위를 매일 했다. 나는 사회당 동료들과 매일 촛불 들고, 피켓과 선전물 배포하고, 경찰 물대포에 대항해 싸웠다.

한편 첫 아이가 2006년에, 둘째 아이가 2008년에 태어났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고민이 많았다. 복합적이었다. 경제적 고민도 있었다. 부양을 해야 하는데 활동가 급여로는 안 되니까. 진보정당 상근 활동가, 아니 사회 운동가로서의 삶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힘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나한테 있는 어떤 다른 욕구 때문이었다. 작가의 욕망. 좋은 책을 써서 세상에 보이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에서는 글을 쓰는 이유로 자기표현 욕구, 미학적 충동, 역사적 충동(진실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정치적 충동(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욕구)을 드는데, 첫째와 넷째 이유가 오래 전부터 내 속에 있었다. 사회당 간부 임기를 마치고 2008년에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사했다. 아이를 키울 좀 넓은 집을 구했다. 논술학원에서 가르치며 돈을 벌었다. 그러면서 소설을 습작했다. 공모에 보내기도 했다. 떨어졌지만.

안산으로의 이주 이후 당신의 직업은 논픽션 작가가 되었다. 내가 갖고 있는 당신의 명함에는 더 심플하게 ‘작가 오준호’라고 박혀 있다. 번역 일도 하고 있으니 번역가이기도 하다. 여하튼 글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벌써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작가로서의 직업적 자의식을 갖게 된 것은 언제쯤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재는 ‘전업 작가’인 셈인가?

- 미지박스 출판사의 제안으로 역사 논픽션 『반란의 세 계사』를 써서 2011년에 냈다. 첫 책이었다. 되게 기뻐했는데, 신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놀랐다. 책을 내면 여기저기서 작가라 불러주고 찾아주는 줄 착각했다. 책 내고 석 달쯤 되어, 신림동에 있는 서점 ‘그날이 오면’의 사장님과 유정희 현 서울시의원(두 분은 부부다)이 ‘북 토크’를 열어주었다. 첫 ‘행사’였다. 한 다섯 명 왔다.

2013년에 『노동자의 변호사들』을 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님(현 법률원장)과 협력해서, 이전 10년 간 우리 사회에 큰 흔적을 남긴 주요 노동 사건들을 기록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KTX 여승무원 해고 사건 등. 나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면서 노동기본권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건 당사자인 노동자들을 인터뷰해서 실었다. 책은 꽤 호평을 받았다. 권 변호사님의 영향력 덕분이지만,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노동법 참고 서적으로도 활용됐다.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고, 안산에 살던 나는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에 들어갔다. 무엇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유가족과 여기저기 동행하고 그들의 말을 기록하다가, 유가족과 같이 세월호 선원 재판이 열리는 전남 광주 법원에 갔고, ‘여기다’ 하는 마음에 법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는 너무 엄청난 나머지 어디서부터 진실을 찾아야할지 알 수 없었는데, 법정에서 피고측, 검사측, 여러 증인들이 증언하고 공방하는 걸 보면서 여기를 제대로 기록하는 것이 진실규명의 출발점이라 여겼다. 1심 재판이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하루에서 많을 땐 사흘 동안 공판이 열렸는데 거의 빠짐없이 방청하면서 매번 수첩 한 권 분량을 꽉 채워 기록했다. (노트북 사용은 소수의 기자들만 허용됐다.) 공판이 열리는 날은 안산에서 새벽 5시에 유가족과 함께 출발해, 9시에 도착해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나 7시까지 공판을 보고 다시 안산으로 올라왔다. 재판부가 안산의 유가족을 배려해, 9월부터는 안산지원에 실시간 중계 법정이 열렸고, 그래서 광주까지 가는 부담을 좀 덜었다.

세월호 선원, 선사(청해진) 간부, 해경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자, 그때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책을 썼고 2015년 3월에 ‘법정 르포’ 『세월호를 기록하다』를 출간했다. 법정 기록을 토대로 세월호 참사가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재구성한 책이다. 유가족들이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했는데,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님이 원고를 먼저 읽으시고 격려해주시면서 가족들에게 모두 읽히고 싶다고 하셨다. 그래서 주변의 후원을 받아 책 4백 권을 유가족들에게 한 권씩 전했다. 세월호에 관해, 이제는 내 책보다 더 새롭고 풍부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법정을 기록한 유일한 책이고, 그때까지 수집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가장 많이 망라한 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재판 기록만 2만 장 넘

게 읽었고, 재판 현장의 생생함을 책에 담았다.
질문에 답하려고 서설이 길었다. 『노동자의 변호사들』과 『세월호를 기록하다』를 쓰면서 직업적 자의식이 분명해졌다. 세상에 필요한 글쓰기를 했다고 느꼈고, 그런 글쓰기를 앞으로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웰 식으로 하자면, ‘진실의 충동’도 갖게 됐다. 작가로서의 소명의식 같은 것이 생겼다.
세월호 기록을 하던 시기에, 생계수단인 논술학원 강의를 그만뒀다. 기록 작업과 학원 강의를 병행하는 게 무리였다. 그러나 ‘전업 작가’는 더 무리더라. 생활이 불안정해지면서 힘들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책을 계속 쓰니, 책과 관련한 강연 요청이 이어진 덕이다. 2019년 12월 현재 열 세 권의 책을 냈다(공저 네 권). 죽기 전까지 백 권 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꼭 기본소득이 실현되어야 한다. (웃음)

당신이 준 명함 뒷면에는 세 권의 책 표지 이미지가 프린트돼 있는데, 방금 특히 애정을 담아 언급한 두 권의 책 『노동자의 변호사들』, 『세월호를 기록하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할 기본소득 관련 책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2017)가 그것이다. 이 세 권의 책이 현재로서는 작가 오준호의 대표작이라고 해도 좋겠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소개란에는 “기본소득이 한국에 처음 알려질 무렵부터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라고 적혀 있다. 기본소득 개념이 한국에 처음 알려진 때가 정확히 언제인가? 아까 2007년 대선에서 사회당이 기본소득을 공약했다고 했으니, 최소한 그때 이전인 것은 알겠다.

- 2000년대 초 몇몇 연구자들이 처음 개념을 소개했고, 정치세력으로는 사회당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공약을 냈다. 같은 시기 광노완 교수, 강남훈 교수 등이 본격적으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연구 결과를 내면서 사회적 담론이 되기 시작했다. 출판으로서는, 2009년과 2010년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두 권의 책을 펴낸 게 최초다.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강남훈·광노완·이수봉, 민주노총, 2009),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엎어라』(강남훈·광노완·권문석 외, 매일노동뉴스, 2010). 내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회원이 된 건 그 뒤인데,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하 BIKN)가 창립된 것은 2009년 6월이다. 현재 BIKN 홈페이지에서 당신의 이름은 운영위원 중 하나로 기재돼 있다. 정확히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가?

- BIKN 운영위원회는 범위가 꽤 넓다. (웃음) 구체적 역할이 정해져 있진 않다. 2019년 4월에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가 발행한 시민용 가이드북을 내가 집필했다. ‘당신의 삶에 기본소득이 생긴다면’이라는 손바닥 크기 소책자로, BIKN에 가입한 회원에게 나눠주거나 캠페인을 할 때 배포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참 단순하고 쉬운 개념인데, 그 속에 담긴 철학이나 기본소득의 정치경제적 효과 또는 실현 경로는 아주 많은 논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 설득하는 데 흥미가 있고, 다른 일보다는 잘 하는 것 같다. 소책자 집필도 그래서 맡겨진 게 아닐까.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를 쓰고 나서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알리는 강연을 많이 했다. 크고 작은 시민단체와 모임, 중고등학교, 협동조합, 노동조합, 공무원 단체 등 다양한 청중을 만나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득한다. 그것도 내 역할인 거 같다. 한국네트워크 연구자와 활동가들로부터 열심히 배워, 기본소득이 낯선 시민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다리 역할.

우리가 2000년대 이후 연락을 못하고 지내다가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 2013년이였다. 내가 2014년에 터전을 광주로 옮기면서 또 한동안 연락을 못하다가 지난 2019년 봄에 수원의 모 특강 자리에서 재회했다. 2013년에 당신은 이미 나에게 기본소득에 관해 말해주었지만 나는 당시에 그 개념을 그저 ‘한 번 들어본’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다. 그러다가 2019년에 다시 만났을 때 당신은 그를 계기로 나를 BIKN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데까지 성공했다. 덕분에 나도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얼떨결에 이런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고 말이다. 요컨대 나를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혹은 운동으로 인도한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공이다. 어쩌자고 그랬던 것인가?(웃음) 지금까지 주변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세계로 ‘전도’하였는가?

- 예수님도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라’고 하시지 않

나.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다. 존엄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못 받는 시대에, 이래선 안 되지 않은가 질문하고 답을 찾던 사람이 처음 기본소득 개념을 접했을 때 거기에 매료되는 게 아닐까. 다행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지금 상황이 위기라고 느끼고 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평생직장’은 아득한 옛날 일이 됐고,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의 말처럼 “제 자리에 있으려고 해도 두 배로 빨리 달려야” 한다. 개인이 게을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님을 사람들도 안다. 이게 사람들의 인식 변화라면, 기본소득이 그저 황당한 주장으로 들렸던 시절부터 담론을 만들고 정치 행동을 조직해온 많은 분들이 있다. 그들 덕분에 기본소득이란 단순한 아이디어가 내용적으로 풍부하고 논리적으로 탄탄해질 수 있었다. 그 배경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제도권 정치에 속해 있으면서도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정치인이 등장했고, 그들이 기본소득을 현실 정책(청년배당, 청년기본소득)으로 도입하면서 대중적 기반이 확 넓어졌다.

내 책은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더 알아보고 싶어 할 때 그 니즈(needs)를 충족시켜준 책이 아니었을까. 기본소득이라고 어디서 들어봤는데 책을 읽고 설득되었다, 책을 읽고 자기도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욕구가 생겼다, 기본소득이 좋다고 여겨 주변에 설득하고 싶던 차에 책에서 좋은 근거들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뿌듯하다. 이 분들을 내 힘으로 이 세계(?)로 이끈 것은 아니지만, 옆구리를 쿡 찢어 일어나게 하는 역할은 한 것이 아닐까?

방금 바람직한 만남의 상황을 묘사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았을 것 같다. 문외한인 이들과 기본소득에 관해 처음 대화를 나눌 때 자주 겪게 되는 곤란은 어떤 것이 있었나.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

-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아무 데서나 기본소득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웃음) 기본소득을 아예 모르는 분들과 갑자기 기본소득 대화를 나누는 일은 드물지만, 그런 분들이 섞인 곳에서 강연을 해야 할 때는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강연하는 자리였는데, 강연 후에 어떤 분이 “돈



이 어디서 나느냐, 세금 폭탄 아니냐”며 화를 내셨다. 강연 중에 기본소득은 고소득자와 부동산 부자들의 부를 재분배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분이 그 사람들 입장에 빙의되어 말하신다. 기본소득 운동이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을 매료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뼈아프다. 어렵게 선별복지 자격을 얻은 수급자들 중에는 기본소득 도입이 자기들이 가진 그만큼의 보장이거나 흔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 기본소득이 그들의 삶을 선별복지보다 더 나아지게 만든다고 설득해야 한다.

강연하다 보면, “말은 좋은데, 가능하겠느냐”는 질문 혹은 비웃음도 종종 접한다. 정말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말하는 분도 있지만, 애초에 세상은 안 변한다고 냉소하는 분도 있다. 이런 질문은 내 식으로 바꿔서 대답한다. 백퍼센트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만드는 데 선별복지가 유리한가, 기본소득이 유리한가? 불평등에 맞서는 데 기본소득과 다른 제도

중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선별복지에 서는 중산층 서민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증세에 소극적이고, 덕분에 부자들도 세금을 안 낸다. 기본소득은 국민 구 십 퍼센트가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증세라는 정치적 선택이 더 쉽다. 증세하면 부자들이 더 낼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을 주자고 하면, 토지와 데이터 등 주요 자원을 사유하지 말고 공유하자는 요구에 힘이 실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 면서 기본소득을 설득하는 논리도 다듬게 된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는 그동안 당신의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를 중간 정리한 책이다. 개론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 내는 아주 잘 쓴 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마음 같아서는 온 국민이 한 권씩 읽었으면 싶다. 준비 과정은 어땠는지, 집필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3년 동안 얼마나 팔렸는지?

-1만 권을 못 팔았다. (웃음) 그래도 온라인 서점 포인트를 보면 기본소득 주제 책 중에는 베스트셀러에 속하는 것 같다. 책을 구상한 건 2013년부터고, 출판사와 계약한 건 2014년 초다. 그런데 조금 진행하다가 세월호 참사를 접했고, 출판사에 양해를 구해 집필을 미루고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에 참여했다. 세월호 책을 내고 나서 2015년 여름부터 다시 작업에 들어가 2016년 초에 초고를 썼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더라. 그해 3월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으면서 기술과 노동의 미래가 화두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내가 쓴 초고는 그런 현재적 사회 변화나 분위기를 잘 담고 있지 못했다. 작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본소득이 아직 사회 주변의 이슈라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개설서를 쓴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리듬이 달라졌고 거기에 맞춰야 했다. 초고를 던져 버리고 다시 구상했다. 2016년 7월 서강대에서 열린 ‘16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해외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발표를 듣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다. 정신을 재정비해 여름 내내 빠르게 썼고, 그해 가을에 탈고했다. 강남훈, 박노완 교수님을 비롯해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연구자,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도 작업에 큰 도움이 됐다.

책은 네 파트로 돼 있다. 기본소득 운동의 어제와 오늘(1장),

기본소득에 대한 선입견 논박(2,3장), 기본소득의 당위성에 대한 강조(4장). 내게는 2장과 3장이 가장 흥미롭게 읽혔다. 거기에서 인간이 들여다보였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은 자원 조달 같은 현실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 거부감이다.”(74쪽) 정말 그렇다.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대해 열에 아홉은 ‘그런 발상은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자신이 왜 곤란하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는 금방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심리적’ 거부감이고, 심리적 거부감은 언제나 힘이 세다.

당신의 책은 그 심리적 거부감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살핀다. 첫째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타락해서 경제가 붕괴할 거라는 불안감, 즉 인간에 대한 불신이고(2장), 둘째는 노동은 신성한 의무이므로 노동의 대가로서만 돈을 주어야 한다는 믿음, 즉 노동윤리의 문제이다(3장). 당신은 이와 같은 생각들에서 기인하는 거부감을 반박하기 위해 2장과 3장에서 여러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동원하여 독자를 설득한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공들여 수집해 놓은 그 사례들에 큰 감명을 받았다.

특히 인간에 대한 불신과 관련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해야만 했다. 기본소득은 인간을 타락시킬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이들이 ‘타락’이라는 말로 뜻하는 바는 ‘이미 망가진 인간은 자기를 더 망가뜨리는 길로 나아가게 마련이고 멀쩡한 사람조차도 덩달아 그렇게 되고 말 것’이라는 뜻이겠다. 음주나 도박 등으로 말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수행된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커녕 오히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보면서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내게도 인간에 대한 불신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도 어디선가 비슷하게 말했던 것 같지만, 나도 내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정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 인간은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에만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아주 약간의 희망만이라도 주어진다면 누구도 자기 삶을 스스로 파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를 곱씹게 됐다. 인간을 믿지 않으며 계획되고 시행되는 정책이 왜 그 대상자들을 근본적으로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재생산하는 데 이르고 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여타 기부나 지원과는 다르다.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잠시 위안거리를 찾는 데 쓰이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없어 현재마저 없어진 인간에게 미래라는 시간을 증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나를 벅차게 했다. 근래 이런 벅참을 경험해본 적이 별로 없다. 당신은 십 년쯤 전에 기본소득운동으로 이끌어 간 것도 이런 벅참이었나?

- 인간에 대한 믿음이 기본소득을 주는 근거라기보다는, 기본소득을 준 결과가 인간에 대해 믿음을 가져도 좋다고 말하는 것 같다. 올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수령자들을 면접 조사한 연구(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를 보니, 처음에는 왜 이 돈을 주느냐며 의심하던 수령자가 나중에는 노인이나 아이들에 대한 사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까지 공감이 커지더라. 자기가 혜택을 받아보니 남들도 같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다. 지난 성남시 청년배당에서도 내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는 자격 연령이 지나더라도 앞으로 다음 사람들이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설문조사 응답자 90% 이상이 그렇게 답했다.

심지어 성남시에선 20대 투표율이 50대보다 앞서기도 했다. 기본소득의 경험이 정치 참여의 욕구를 만들어냈다. 최근 기본소득당 창준위는 “당신이 누구든 60만원”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온라인으로 1만 명의 당원을 모았다. 대부분이 20대다. 그들은 생애 첫 당으로 기본소득당을 택했다. 20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보기 좋게 깼다. 기본소득이 가능하리라는 믿음만 가지고도 이런 변화가 생긴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를 주고 있다.

그렇다. 더 나은 존재/세상에 대한 믿음에 근거를 제공한다는 말이 적확하게 들린다. 문득 옛날 생각이 또 나는데, 이십년 저쪽의 당신은 그때 이미 인간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던 것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대부분 주기적으로 운동에 대한 회의로 멜랑콜리한 상태에 빠지곤 했었는데, 당신은 언제나 ‘외강내강’인 사람으로 보였다. 물론 오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당신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고 할까. 당신은 어쩌서 그럴 수 있었는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가?

- 오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람 잘 안 믿는다. (웃음)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선의를 갖고 있다고 해서 꼭 좋

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서 항상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 편이다.

질문의 취지에 맞게 답하자면, 나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협력하고자 하고 윤리적으로 정의로운 목표를 추구하려 한다고 믿는다. 사회적 동물로 진화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관념적으로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회적 조건과 관계를 빼고 선하거나 악하다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사회운동은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서 출발해, 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사람들의 의지를 자극하고 촉발시키는 것이 아닐까. 다만 나는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작가로서 내 역할을 하고 싶다. 기본소득이나 세월호 진실규명이라는 사회운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작가로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다.

앞서 당신의 이력을 정리할 때 빠뜨린 것이 하나 있다.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했다는 것 말이다. 짐작하건대 당신은 21세기 이후에도 마르크스를 내려놓지 않고 꾸준히 읽은 이들에 속할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을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생각하는가? 이론과 운동으로서의 ‘기본소득’은 당신의 마르크스주의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혹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다. 당신은 마르크스주의자로서 기본소득 운동을 지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적 비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운동을 받아들인 것인가?

- 과거의 나를 잘 아는 사람과 인터뷰하는 건 앞으로 좀 피해야겠다.(웃음) 그런데 우리가 참 오랜만에 만나기는 한 모양이다. 이전에 내가 공부하고 선택하고 한 모든 것은 내 안에 쌓여있겠지만, 그게 쌓인 결과로서 나는 또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나는 마르크스의 통찰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여긴다. 사태를 사회적 관계와 역사적 과정 속에서 바라보고, 계급과 권력의 투쟁이 갖는 영향에 주목하는 건 마르크스의 훌륭한 통찰이다. 하지만 나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어떤 이즘ism의 유의미성을 인정하는 것과 이스트ist가 되는 것은 다른 것 같다. 나는 꽤 전부터, ‘○○주의자’라고 자기를 호명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고민했는데, 답을 아직

못 찾았다. 마르크시즘의 어떤 통찰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마르크스주의자로 불리거나, 혹은 스스로를 그렇게 불러야 할까?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주의자라고 호명하는 사람들을 존중한다. 하지만 나는 ○○주의자라는 단일한 기호를 받아들이는 대신 여러 이즘들을 넘나들고 결합하는 시도를 하고 싶다.

내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은 인간이 존엄하게 살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자연과 사회의 부가 공동의 유산인 만큼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안의 어떤 도덕 감정과 기본소득이 통한다.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 한 토막. 뉴욕 브루클린의 지하철 안에서 한 남자가 봉투를 들고 돈을 세고 있었다. 그 돈은 남자가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이었다. 지하철에 탄 한 노파가 남자에게 다가와 “젊은이, 딸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대요. 조금만 기부해주지 않으려오?”라고 말했다. 남자는 노파를 도와줄까 생각했지만 결국 거절했다. 역을 몇 개 지나고 남자가 내리자, 지하철 안에서 계속 그를 주시하던 세 명의 갱도 따라 내려왔다. 갱은 남자를 쫓아가 으스스한 곳에서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이 그 갱을 붙잡았지만, 갱은 그 남자를 본 적도 없다고 잡아땀다. 이때 지하철의 그 노파가 경찰서에 나와 증언했다. “내가 봤어요! 저들이 그 남자를 따라가는 것을!” 이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일까? 브루클린의 지하철은 위험하다? 불쌍한 노파를 도와야 한다? 아니,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지하철을 타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책임이 있다.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다. 그럴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에 나오는 모든 사례를 놓고 일일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참아야겠지. 혹시 책에서 가장 공들여 쓴 부분, 독자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권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망해하지 말고 직접 말해 달라. 기본소득운동과 관련하여 당신 자신의 고유한 이론적 기여라고 할 만한 것이 이번 책에 있는가? 혹시 개정판을 낼 때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 그 책을 쓸 때 많이 고민했던 것이 세 측면인데, 하나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핵심 논리를 최대한 명쾌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기본소득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근거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 셋째는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논증해내는 것이었다. 어떤 독자는 사례가 풍부해서 좋다고 하고, 어떤 독자는 정당성을 설득하는 부분이 좋았다고도 하더라. 어떻게든 독자들을 기본소득으로 한 발 다가오게 하고, 설렘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조금은 그렇게 됐을까? 그렇다면 작가로서 뿌듯하다.

한국의 제도권 정치인 중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당신은 계간 기본소득 1호에서 직접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한 바 있다. 그 인터뷰에서 당신은 인터뷰어로서의 역할만을 충실히 했다. 그를 만난 소회나 그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도 궁금했는데 쓰여 있지 않더라는 말이다. 당신은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좀 성급한 질문이 되겠지만 다음 대선에서 당신의 선택은 기준은 무엇보다도 기본소득 관련 공약이 될까?

- 물론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참조 사항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지사는 이를테면 실행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2015년 성남시장 시절에 기본소득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아이디어를 접한 이후 곧바로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의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를 또 ‘지역화폐’ 방식과 결합시켜 지역 상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도 그의 정책적 창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배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기본소득 관련 강연을 많이 했으니 아마 청년들 앞에서 강의할 기회가 가장 많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는 40대 중반이다. 청년세대라기보다는 기성세대에 속한다는 뜻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청년정치를 ‘마케팅’하고 있는데, 청년들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특별히 느낀 바가 있는가?

- 뭔가 이뤄야 기성세대인데, 아직 이루려면 멀었으니 ‘장기 청년세대’다.(웃음) 청년들이 기본소득 받으면 무얼 하고 싶은지 쓴 걸 보았는데, “보일러를 더 튼다”라고 한 걸 보고 먹먹했던 적 있다. 보일러 트는 만큼 돈이 들고 그 돈은 그

만큼의 알바 노동 시간이다. 몇 시간의 자유 시간을 가지려면 밤에 홀로 추위를 견뎌야 한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뢰나 공동체니 하는 가치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기본소득 50~60만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입에 넣을 수 있는, 절실한 인간 존엄성이다. 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존엄의 요구라면, 그것이 정치적 요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에서 청년을 2+1 상품처럼 둘러리로 세우려고 할 텐데, 기본소득을 내걸고 정치의 판을 바꾸는 청년들이 등장하길 바란다. 특히 기본소득당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나는 당신의 책을 읽었고, 이제 막 가이 스탠딩의 『기본소득』과 필리프 판 파레이스의 『21세기 기본소득』을 읽기 시작한 사람이다. 나와 같은 초심자에게 조언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 달라.

- 당신이 언급한 책들은 일반 독자가 읽기에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국내 저자의 책 중에서 권한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특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펴내는 기본소득총서 시리즈를 권한다. 최광은의 『모두에게 기본소득을』(박종철출판사, 2011)을 1권으로, 현재 강남훈의 『기본소득의 경제학』(박종철출판사, 2019)까지, 총 네 권이 나와 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책은 무엇인가? 기본소득 운동과 관련하여 향후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실천이 혹시 있는가?

- 2017년 초에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를 낸 후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슈들이 빠르게 늘었다. 마침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기본소득 입문서를 써보자는 제안을 받아서, 최신 이슈를 포함해 『기본소득 쫘 아는 10대』를 2019년 11월에 출간했다. 물론 10대만 읽는 책은 아니고, 10대부터 위로도 다 가능하다. 물론 아래로도. (웃음)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와 더불어 이 책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제 청소년 교양서로 ‘평등과 공정’에 대해 다룬 책이 나올 예정이다. 또 기본소득과도 조금은 만나는, 암호화폐 경제에 대한 책을 그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작업 중이기도 하다. 새로운 주제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작가로서 응당

할 일이기도 하고 재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책을 쓰게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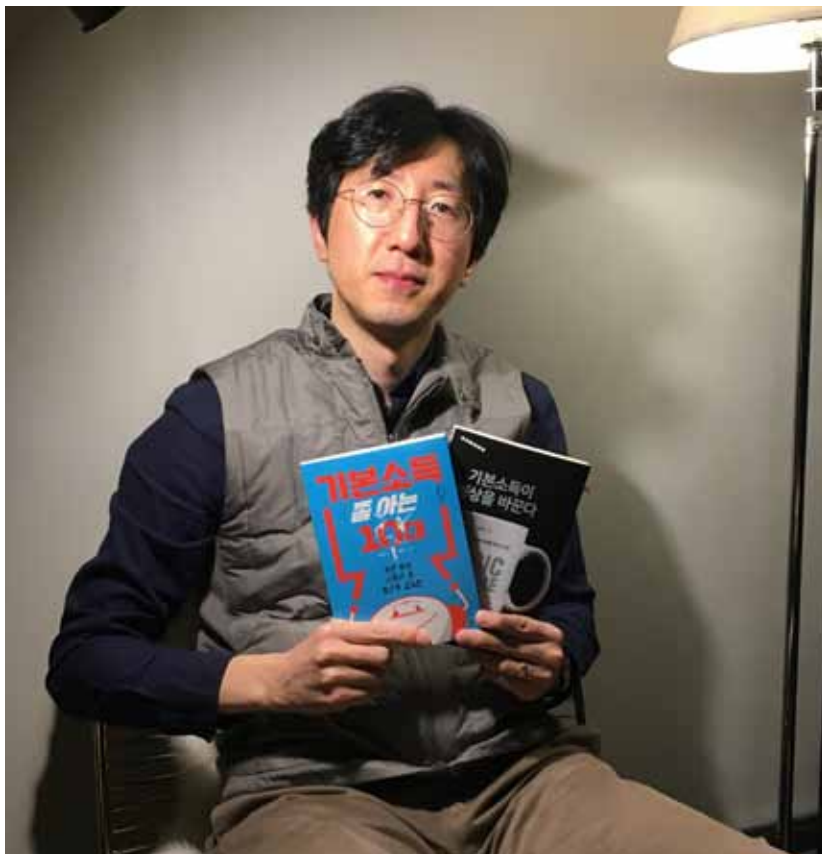
물론 기본소득 운동에서 할 수 있는 몫은 계속 할 생각이다. 강연 요청이 있으면 가고, 기본소득을 다른 인문사회적 주제와 융합한 강연도 구상해보려 한다. 가령, 지난여름에 서울시 민청에서 ‘기술혁명과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생명공학, 블록체인 등 기술이 변화시킬 미래를 전망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도 함께 다루는 5주 강연을 열었다.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두 권 썼는데, 장차 삼부작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기본소득 3부작의 세 번째 책은 물론이고, 평등과 공정에 대한 책이 특히 기대가 된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나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조만간 갖겠다는 계획을 아내와 세워둔 터다. 물론 뜻대로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말이다. 그런데 아동학대에 가까운 교육 현실과 신분제에 가까운 노동 환경을 보다 보면 정말이지 주기적으로 회의감이 밀려온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 게 가당한 일인가 하는 생각 말이다. 주변에서 보고 느낀 바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은 두 아이의 아빠니까, 나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묻고 싶다. 정말 희망을 가져도 좋을까? 기본소득이라는 희망의 근거가 있으니,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직무유기가 될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본소득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 이반 일리치가 말했듯이, 기대^{expectation}와 희망^{hope}은 다르다. 기대란 계획하고 통제된 대로 나오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라 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캔커피가 나올 거라 기대하듯이 말이다. 반면 희망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경이로움에 관한 것이다. 완벽한 부모가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물려줄 수도 없다.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보려고 한 사람들 덕에 세상은 이만큼 나아졌다. 기본소득의 소리가 개울물에서 폭포로 커진 것이 그 사람들 덕이다.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또 즐거움이 아닐까.



서론에서 작가 오준호를 일러 조지 오웰 같은 작가라고 하면서 글쓰기의 정치적 동기를 강조하는 오웰의 말을 인용했는데, 사실 그 말 뒤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진다.

“하지만 나는 미학적인 경험과 무관한 글쓰기라면, 책을 쓰는 작업도 잡지에 긴 글을 쓰는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작품을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이라면, 노골적인 선전 글이라 해도 전업 정치인이 보면 엉뚱하다 싶은 부분이 꽤 많다는 걸 알 것이다. (...) 나는 계속해서 산문 형식에 애착을 가질 것이고, 이 지상(地上)을 사랑할 것이며, 구체적인 대상과 쓸모없는 정보 조각에서 즐거움을 맛볼 것이다”(같은 책, 297~8쪽).

말인즉슨, 글쓰기의 네 가지 동기 중 ‘정치적 목적’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유년기부터 자신을 사로잡아 온 ‘미학적 열정’ 또한 그는 버릴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 열정이 그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는 또 하나의 진정한 축이라는 것이다.

앞에서의 공통점에 이어 이 점 역시도 작가 오준호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것임을 나는 알게 됐다. 대담이 끝나갈 무렵 그가 문학(성)에 대한 오래된 꿈 혹은 애착을 슬며시 내게 고백해 왔기 때문이다. 그가 언젠가는 아주 웅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한 책을 써낼 것임을 나는 믿는다. 물론 웅고도 아름답다는 것은 그가 쓰게 될 책만이 아니라 25년 전부터 우리가 함께 꿈꾸어 온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다.



90년대 생이 온다, 기본소득당이 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만나다

인터뷰어

류보선

문학평론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2019년 겨울 계간 『기본소득』이 주목한 화제의 인물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이다. 2019년 9월 8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 30일 서울 기본소득당 창당대회, 2019년 12월 1일 경기 기본소득당 창당대회, 2019년 12월 14일 인천기본소득당 창당대회, 2019년 12월 19일 광주 기본소득당 창당대회, 2019년 12월 21일 부산 기본소득당 창당대회를 거쳐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기본소득당의 기세는 한마디로 세상 전체를 바꿀 듯 어마어마하다. 모든 것이 새롭고 혁신적이다. 이렇게 젊은 정당도 없었고 이렇게 정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든 경우도 없었다. 아직 완성태가 아니라 완성 중인 까닭에 지금은 말을 아낄 수밖에 없으나 나중에 완성태가 되면 기본소득당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새로 등재할 기록은 하나둘이 아닐 것임에 분명하다. 비유컨대 기본소득당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태풍의 눈이다.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이 거대한 변곡점을 항상 웃는 얼굴로 차분하게 만들어가는 이가 있다. 바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이다. 1990년생으로 생애 최고의 기억을 지녀야 할 시기에 1997년의 IMF 위기를 겪었고 대학에 입학할 무렵 외환위기 사태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할 그 시기에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는 등 1990년대생들의 실존형식을 가장 앞에서 겪은 용혜인 대표는 1990년대생들의 희망과 절망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표현해온 존재자이다. 열린 사회라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온전한 사회라면, 그것은 바라지 않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일찍부터 겪어온 용혜인 대표는 우리 사회의 영역에 만연해 있는, 그러나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라면 정말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여러 부조리에 대해 ‘하지 마’라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다.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수많은 부조리들 각각과 싸우던 중 용혜인 대표는 어느 순간 이 모든 부조리가 용납되지 않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선회를 하기에 이른다. 이때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정치적 상상이며, 이 정치적 상상이 결국은 기본소득당 창당이라는 한국 정치사에 있어 신기원을 개척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기본소득당 창당으로 한국의 정치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에 뒤바꿀 태풍의 눈을 만들어가고 있는 용혜인 대표를 만났다. 인터뷰는 2019년 11월 29일, 세상을 바꿀 날갯짓으로 활기가 넘치는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의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이루어졌다.



창당이라는 두렵고도 즐거운 모험

요즘 기본소득당 창당 준비로 한참 바쁘실 것 같다. 진행사항을 알려주셨으면 한다.

- 오늘이 2019년 11월 29일이니까, 9월 8일 발기인 대회를 한 지 80일이 조금 넘었다. 발기인 대회 이후 2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9,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모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창당의 요건, 5개 시도당을 창당하는 일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내일이랑 모레 서울, 경기 창당대회가 예정돼 있고, 인천, 광주, 부산 이렇게 순차적으로 12월 중순까지 지역 창당대회를 마칠 예정이다. 5개 시도당 창당 대회가 끝나고 나면 1월 19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할 예정인데, 순항하고 있다.

옆에서 보기엔 하나의당을 만든다는 일이, 그것도 전례가 없는당을 만든다는 일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니 개인적으로 반갑다. 창당 준비 과정에 전에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장면이 많이 있다고 들었다.

- 매우 놀랍게도 9,000명의 당원 중에 80%가 10대, 20대 당원들이다. 20대가 절대 다수이고, 여성과 남성 성비에 서도 여성 비율이 높다. 65% 정도가 여성이다. 당원의 가장

많은 수가 청년 여성인 거다. 우리도 이렇게까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첫 정당으로 기본소득당을 선택하고 입당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서 깜짝 놀랐다. 너무 바랐던 점이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니 놀랍다. 또 다른 특이점은 경기도민이 가장 많다는 거다. 9,000명 중에 경기도민이 2,000명 정도 된다. 경기도는 일찌감치 1,000명 요건을 충족해서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민 중 특히 만 24세 나잇대 언저리, 그러니까 만 23세에서 만 25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직접 기본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더 높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받아본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부모들이 많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받아본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들을 적극 가입시키는 일도 특이한 점이라면 특이한 점이다.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개하고 싶은 흥미로운 에피소드는 없나?

- 재미있는 일은 사무실로 전화가 많이 온다. 하루에 5통에서 10통 정도? 하루는 온라인으로 가입한, 성남 살고 이태원에서 일하는 동화작가가 전화를 했다. 창작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수입이 적다. 가장 수입이 낮은 직업을 캐

보면 1위가 수녀고, 2위가 시인이고, 3위인가 4위가 신부이고 하다. 그런데 이 분이 전화를 해서 대뜸, 본인이 생활하기가 어렵고 생계 문제가 있는데 기본소득 60만원을 지급하니 너무 좋아서 가입을 했는데, 나는 뭘 하면 되냐고 물어보더라.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이고, 총선에 출마도 해서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기본소득 법안도 만들고, 기본소득을 실현시키려고 한다, 그런 과정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럼 내가 뭘 하면 도움이 되겠냐고, 유튜브로 뭘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뭐든 하고 싶은데 내가 뭘부터 하면 좋을까 물어보더라.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분, 일면식도 없던 분이었는데, 너무 적극적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본인이 모르는 공간에 전화를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면 되는지 직접 물어보는 적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게 창당 준비를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다.

저도 제 나름으로는 정치에 관심이 많다 자부하는 편이지만 선뜻 정당 가입까진 하게 되지 않는다. 나의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요새 청년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들 한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 요즘 청년 세대들이 오히려 더 아주 일찍부터 자기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욕구나 사회적 욕구를 표출하고 반영시키려는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 기존 정당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느꼈다가 기본소득 60만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의 이름이 주어지고 이게 실현되면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고 상상할 수 있어서 그런 적극성이 발휘되는 것 같다.

90년대생이란 누구인가, 이 치열한 불안을 사는

창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먼저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 봤으면 한다. 1990년생이다. 최근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용어가 유행하면서 90년대생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신인류랄까 신종족이랄까 이전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삶의 자세나 철학을 가진 사람들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90년대생’이라는 개념이 실체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나.

- 그건 좀 있는 것 같다.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경험과 사회에 대한 감각이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예전에는 사회 변화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예컨대 80년대처럼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는 삶을 살더라도 더 잘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에서 살았다면 지금 90년대생, 그중 97년~98년생들이 이제 22~23살이 되는데, 이들은 IMF 이후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정상성인 삶을 살고 있다. 불안정성이 정상성인 이 세대들은 사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갖기도 어렵다. 이 세대는 사회 변화를 꿈꾸는 커녕 오로지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데도 아주 불안정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 불안정성이 나중에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영원히 정상적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상정하고 살아간다. 이전과는 아주 다른 사회적 감각의 세대가 탄생했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헤쳐온 현실적 조건은 지금 청년이 겪고 있는 현실적 조건보다 열악했다. 물론 지금에서 돌아보니 기성세대에게는 미래의 가능성이 훨씬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보다 자신 있게 각자의 미래에 대해 적극성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지만, 기성세대가 오늘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각자가 행한 불안정한 미래와의 처절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보자면 비록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하더라도 현재가 상대적으로 풍족하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말고 다른 세대감각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 예전에 비해서 모든 가족이 한 끼를 쫄쫄 굶어야 한다거나 하는 절대적인 가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으니 그때에 비해서 풍요로워졌다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20대 청년 대부분이 핸드폰도 쓰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풍족하다고 보기 힘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우선 지금 청년 세대들이 실제로 풍요롭게 살아가는가의 문제다. 오늘 『중앙일보』에서 다루었던 청년무료 급식소 얘기를 보면 청년세대들 중엔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의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무료급식소에 찾아가서 아침을 먹고 오는



이들이 다수다. 그런가 하면 최근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든가 관악 새터민 모자 사건이라든가 하는 일이 이젠 충격적이지 않고 오히려 익숙하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그때 잠깐 안타까움에 휩싸이지만 그런 사건마저도 이제는 충격이 되지 않은, 익숙한 일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실제로 청년세대가 풍요로운가는 의문이다. 물론 풍요롭게 사는 청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여전히 그 미래를 불투명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청년세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요즘 청년세대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미래가 없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삶을 꾸려가고 구상해 가는 과정에서 이 시점이 되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어떤 고통이라거

나 지금의 어려움도 참을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이나 미래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노력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한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이 기성세대들의 세대감과 큰 차이점인 것 같다. 그런 차이 때문에 요즘 청년들은 극복 불가능한 조건 앞에서 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절망감을 크게 느끼는 것 아닐까 한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음에는 ‘온몸으로, 온몸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력을 모아 보았더니 정치 입문이 빠르더라. 일찍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

-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때 지금과 같은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 아주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했다. 집에서 구독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매일 읽었다. 촛불이 한참이었던 2008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은 야자 째고 서울까지 집회하러 나가고 그랬었는데, 나는 그 친구들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다.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일정 부분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 뉴스도 열심히 보고 미래에 대한 뭔가를 꿈꾸고 했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정치활동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정치외교학과로 대학을 진학했다.

- 정치외교학과에 갔던 것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정치 뉴스를 꼭 챙겨볼 정도로 정치 영역에 흥미가 많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한 가지 개인적인 사정을 덧붙이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보고 나서 ‘여자는 선생님이 되는 게 최고야’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 그 말이 싫어서 사회과학을 전공하리라 마음먹었고 그쪽으로 대학진학을 결정했다. 원래 관심이 있기도 했고 여성에겐 ‘이게 최고야’라는 말 속에 담긴 굳건한 벽을 깨고 싶기도 했다.

2010년에 진보신당에 입당했다.

- 사실 진보신당에 입당할 때는 제가 정치외교학과고 사

회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당이든 하나는 가입해야지 하는 생각 정도를 했다. 정당 활동을 위해서 가입한 건 아니었다. 당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한 달에 5천원 후원하는 마음으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정당 가입이라는 게 덜 부담스러웠다. 2010년에 야권연대, 지방선거 때 바람이 불면서 야권연대를 하지 않은 정당들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졌는데, 한나라당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의 본래 의미를 봤을 때 저런 진보정당이 더 필요한 거 아냐, 그런 마음으로 입당했다.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 파업 사건에 동참했다.

- 2011년에 희망버스에 올라 한진중공업 투쟁 현장에 갔었다.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걸 봤다. 그전까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논조에 익숙해서인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죽음으로 투쟁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운동권 이런 건 옛날 얘기, 낡은 얘기고 뭔가 이전과는 다른 세련된 방식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심지어 청년은 진보적이고 나이 들면 보수적이다, 이런 것도 낡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보수적인 청년’ 이렇게 규정하려 했다. 당시 학교 선후배랑 같이 희망버스를 타고 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 죽음으로 투쟁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는데 제 앞에는 죽음의 흔적들이 널려 있었고, 아주 조그만 크레인 위의 조종실에서 김진숙이라는 여성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 크레인이 김진숙씨의 동료가 목숨을 끊었던 그 크레인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마음도 잘 가늠이 안 되고 왜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하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많이 깨져 나갔다. 그 사건을 계기로 2011년 이후에 진보적인 정치 활동이라든가 사회 불평등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나는 세속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그런지 만약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 정치적 꿈을 실현해야겠다 결심했을 때 우선 거대정당의 진출을 떠올릴 것 같다. 그런데 대표님은 줄곧 소수정당, 진보 정당의 길을 걸어왔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

- 글썄, 거대정당이라고 불리는 정당에 들어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본격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기로 했을 그 당시에는 진보신당이 국회의원인 것은 원내 정당이었기 때문에 진보 정당에서도 내 꿈을 펼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기도 했고, 내가 직접 뭔가 기여하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나한테는 비록 소수이지만 진보정당이었다. 지금은 정당별로 청년위원회도 많고 학생위원회도 많고 하지만 그때는 내가 정치활동이나 아니면 정당의 당원으로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기성 정당들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였다.

이 시기에 알바연대 쪽을 일을 하기도 했다. 사회에 관심을 늦춘 적이 없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으면서도 나는 요즘에서야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이구나를 실감, 아니 절감하고 있다. 내가 너무 늦게 세상을 알게 됐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 지도 모르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찍 프레카리아트의 문제나 그를 해결하기 위한 알바 연대 등에 관심을 가진 편이다.

- 프레카리아트에 대한 다양한 담론에 대해서는 후에 알바연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접하게 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알바노동자’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위험 계급이라는 걸 감지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일단 그때 내가 알바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10년 전에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음식점 알바를 했다. 주로 스테이크를 날랐는데 이 스테이크 하나에 7만원이었다. 구두 신고 머리 올리고 화장을 하고 하루에 열다섯 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5만원을 못 받았다. 3,800원,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시급 3,800원?

- 그렇다. 3,800원. 어떨 땐 3,500원. 좀 더 잘 쳐주면 4,200원 받았다. 하루 종일 일해도 5만원을 채 못 버는 날이 많았다. 그게 이상하다기보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배가 고프는데 뭘 사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돈을 쓰기 너무 아까워 배고픔을 참은 적이 많았다. 내가 하루에 못해도 스테이크 100개는 나를 텐데, 100개를 나르면 700만원, 700만원의 스테이크를 나르는데 일당은 5만원이 안 되고, 그런 현실적인 계산을 계속 곱씹기도 했다. 알바를 하러 강남에 있는 호텔에 처음 갔는데, 그때가 수능 끝나고 겨울

이었다. 호텔 매니저가 겨울이라 모피 코트를 많이 입고 오니 만약 음식을 쏟으면 세탁비가 여러분 일당보다 더 나간다고, 쏟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지금은 그게 모멸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런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기분이 나쁘지만 왜 기분이 나쁜지도 모르겠고, 치사하네 생각하는 정도였다. 그 외에도 레스토랑이나 뷔페 알바를 많이 했었다. 제 주변에도 알바는 너무 흔하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게 어색하진 않았다. 당연하게 우리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었어? 되묻는 경험을 여러 번 해야 했고 이런 이유로 ‘알바연대’ 일을 시작했다. 스스로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알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입학 전부터 알바를 열심히 한 편이다.

-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대학에 들어왔는데, 당시에 학자금 대출받고, 이자가 7%였다. 아빠가 사업이 잘 안 될 때여서 알바를 열심히 했다.

어느 인터뷰를 보니 공무원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 그런 적이 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뭘 하고 먹고 살아가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딱히 하고 싶은 일도 마땅치 않았고 대학원에 가자니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적이 있다. ‘여자는 선생님이 최고야’라는 말은 싫었지만 막상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최고지 하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아주 잠깐, 1년 정도.

세월호 사건과 산산조각 난 국가와 법 밖의 사람들

대표님이 세상에 존재를 알리고 이름을 각인시킨 게 세월호 사건 때였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름의 침묵시위를 주도했다. 내겐 그 침묵시위를 벌인 시기가 세월호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는 게 놀라웠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 충격에 휩싸였고, 안절부절 못했고, 이게 도대체 나라인가 그런

분노를 느끼면서도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럴 때에는, 이런 시점에 침묵시위를 시작했다.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궁금했다. 하나는 세월호 사건의 발생과 구조 사이에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모순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아주 빨리 읽어낸 셈인데, 어떤 지점에서 그 징후를 읽어낼 수 있었는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시위를 주도한 건데, 그러니까 침묵을 통해서 무엇보다 강한 항변과 저항을 한 것인데, 그런 시위 형태를 택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었는지 하는 거다.

- 첫 행진을 4월 30일에 했던 걸로 기억한다. 지금도 날짜를 다 기억하고 있다. 나한테는 인상깊었던 장면들이어서 다른 기억에 비해서 디테일하다. 나도 처음에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계속 뉴스를 팔로우업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뭔가 좀 이상한데 생각했던 건 4월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가는 밤이었다. 그날이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었다. 시험 기간이어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날에 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시간에 갑자기 SNS를 통해서 진도 상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실종자 가족들이 행진을 한다고 하고, 우리 애를 살려내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진도에서 걸어서 청와대까지 가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경찰들이 실종자 가족들을 막아서서 영상이 SNS에 숨가쁘게 올라왔다. 그게 너무 이상했다. 내가 대통령이면 이건 엄청난 일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고, 그 부모들의 분노에 찬 함성이고 행동이니, 제스처를 취하면서 적당히 마무리하고 싶어할 텐데,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건 이상하다 생각했다. 경찰버스 열 대 정도의 병력이 실종자들의 부모를 완강하게 막아 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막 그 새벽에 갑자기 진도 체육관에서 생존자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실종자 가족 중 일부는 체육관으로 뛰어가고 아수라장이었다. 뭔가 이상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헬기 몇 대, 특수 구조대가 몇 명, 조명탄이 몇 백 개, 계속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왜 실종자 가족들이 저럴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그런 실종자 가족들을 왜 경찰들은 왜 그토록 지독하게 막을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을 4월 19일에서 20일 넘어가는 시점에 했다. 사



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사회의 구조적인 무엇이 문제다 생각했던 건 아니다. 그런데 사회가 너무 조용한 거다. 사람들이 300명 넘게 실종됐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들이랑 뭐라도 하자 해서 추모의 의미로 침묵행진을 시작했다. 처음부터 사회 비판적인 의미를 담았던 건 아니고 단지 추모의 의미로 시작했다. 그 이후에 뉴스들 나오는 걸 쪽 보면서 추모 외에 다른 의미가 추가됐다. 청해진 해운에서 1년에 안전교육비 56만원을 썼는데 접대비로는 6,000만원을 쓰고 광고비로는 3억을 썼다, 이 배가 엄청 낡은 배인데 일본에서 헐값으로 사 왔고 이명박 정권 당시에 규제완화가 있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뭐야, 이걸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뭔가 사회에 세월호가 단순히 운 나빠서, 재수 없어서 사람이 죽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구조의 문제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

그동안 사고가 안 일어난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한국 사회 전체에 구조적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했다는 결론에도 달한 셈이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라는 시위는 어떤 관점으로 봐도 평화적이었고, 따라서 법의 보호를 받을 만한 권리 선언으로 보이는데, 탄압이 만만치 않았다. 어떻게 보면 법

을 앞세워서 법을 정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한편으로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데 오히려 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상황이, 그래서 내 행위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공포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우리 사회의 월변화시키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결심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해준다면……

- 처음 경험해 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놀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때 4월 30일 마지막 행진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작해서 종로의 광고에서 끝났다. 행진이 끝나고 친구랑 집에 가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스타렉스 한 대가 와서 서더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봤는데, 차 안에서 빨간 점이 보이는 거다. ‘뭐야?’ 봤더니 그 안에는 남성 둘이 타고 있었고,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찍고 있었다. 지금이면 그 순간 차를 붙잡고 ‘당신 뭐야’ 했을 텐데, 너무 놀라서 ‘뭐지?’ 손가락질을 하며 친구한테 ‘저것 봐’ 하니까 가더라. 그때서야 쫓아갔는데 사라졌다. 그 차 넘버는 아직도 기억난다. 1120 은색 스타렉스였다. 그런 일도 있었고, 경찰에 연행되거나 이런 일도 있었고, 처음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본 일도 있었다.

나로선 처음 경험해 보는 일들이 순식간에 너무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사실은 공포보다는 억울한 게 너무 컸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하는 억울함과 분노가 더 컸다. 아마도 주변에 침묵 행진을 함께 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였을 거다. 혼자 있지 않아서 그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다.

세월호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다. 2014년 5월 8일 어버이날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적다'는 말을 하자, 유가족들이 안산에 있는 합동분양소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여의도로 올라왔는데, 나도 그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급하게 여의도로 갔다. 도착했을 땐 이미 여의도 KBS는 방송차로, 경찰 버스로 다 막혀 있었고, 그 앞을 경찰들이 막고 서 있었다. 그날 유가족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있었다. 머리 위로. 그게 못해도 7~80개 정도는 되었다. 무슨 일로 고개를 들었는데 그 영정사진의 눈들이 다 엄마, 아빠의 머리 위에서 경찰들을 내려보고 있었다. 순간 고개를 못 들겠더라. 그 사진들을 도저히 볼 수 없고. 그 장면이 나한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다. 그 기억이 2014년 4월 30일에 세월호 침묵시위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길게 진보 운동을 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후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보인 행태는 정말 전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기도 했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게 하기도 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단식도 했었다.

- 단식은 짧게 해서 좀 부끄럽긴 하다. 당시에 유민 학생 아버님이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는 중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당시 새누리당이었나, 한나라당이었나, 새누리당이었던 거다,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이 합의안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이런 야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사를 점거하고 있었다. 나도 무언가를 해야겠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돗자리 하나 깔아 놓고 앉아서 단식을 잠깐 했었다. 그때 내가 되게 분노했던 포인트는 그거였다. 유

가족들을 만나면 지난 대선 때 박근혜를 찍었던 분도 많고, 원래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도 많았다. 그런데 이완구씨였나, 세월호 유가족과 박영선 원내대표 사이에 앉아서 자신들과 협상하려면 유가족들이 협상권의 전권을 박영선 의원한테 주라고 훈계를 하는 거다. 아니, 유가족들도 다 국민이고, 본인들은 국민의 대표자인데, 마치 뭐랄까, 협상 상대의 하위 파트너 정도로 대하는 걸 보면서, 진짜 그 전에 TV에서 국회에서 치고 받고 싸우는 것과 차원이 다른 기성 정치에 대한 한숨을 느꼈다. 그래서 단식도 하고 그랬다.

기본소득이라는 진리의 빛; '~하지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로

돌아보니 그 시기에 정말 일이 많았다.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이 거듭 반복되었다. 대표님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대열에 참여했고 앞장섰다. 그러니까 도저히 민주 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세상을 꿈꾸는 정치인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지마!' 하며 참여했던 셈이다. 그런데 '~하지마!'에서 '이걸 (해야) 해!'라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그 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인식론적 전환이 일어난다. 겉에서 보기엔 그 중요한 계기가 '기본소득'과의 조우이다. 맞나?

- 맞는 것 같다. 계속 '안 돼' '하지 마' 하다 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유가족이 '삼풍백화점 참사 때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내 자식이 이번에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죄책감이 든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한진중공업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사람보다 중요한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소 잃고 외양간이나 고칠 거냐, 그것도 제대로 못 고칠 거면서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 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게 뭘까에 대해서 고

민할 때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들려왔다. 돈을 위해 사람이 일을 하고, 때로는 돈을 위해 해서는 안 될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먼저 주고 이것으로 사람들 각자가 자기의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갈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기본소득은 바로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으로 다가왔고, 그때부터 기본소득이 나한테는 매력적이고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기본소득과는 어떻게 만났나?

-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 알바연대 활동하면서 주변에서 만났던 이들로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네, 이 정도였다. ‘돈 주면 누가 싫다고 하겠어? 다 좋지, 그런데 되겠어?’ 하는 마음이었다가 생각이 바뀌면서 ‘주면 좋지’ 같은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하게 됐다. 사회의 전제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기본소득을 보면서,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이전인 지금 사회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뭐라도, 뭐든지 해야 되는 사회라면, 기본소득은 그 간단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제가 사라지는 사회를 만드는 첫 단추로 다가왔다.

이후 정치활동은 기본소득 운동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 노동당 비례대표 선거에 나서서 비례대표 1번이 되었다. 그때 최저임금 만원, 기본소득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선거 운동을 벌였다.

- 그때 총선에 꼭 출마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우선 세월호 이후에 정신이 없었고, 거기에 이제 뭘 하고 살지 고민하던 시기였다. 어떤 활동이나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출마에 대한 생각은 크지 않았다. 그렇다고 정치를 할 거야, 말거야 하는 근원적인 고민을 했던 건 아니고 내가 지지하는 이 정당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많은 당원들이 ‘출마를 하면 좋겠다’ ‘너라면 노동당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해 주셔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번 해봅시다’ 라고 하게 됐다. 해서 당시 청년 당원들이 모

여서 선거운동 방법이나 전략들을 집중적으로 짰다. TV토론회에도 처음 나가보고, TV토론 발언문도 아무도 안 도와줘서 직접 써서 친구들과 피드백하고 이랬다. 당일에 급하게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 물론 득표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덜 나왔다.) 나와 선거운동을 함께 했던 친구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선거 기간 동안 토론회를 여러 번 했다. TV토론회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하는 토론회도 많이 나갔는데, 어느 토론회에서도 우리 주장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 일반적인 의미의 현실적인 게 아니라 급진적일 수 있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유일하게 제시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까지 연계한 정책 패키지의 완성도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다. 그 내용을 어떻게 잘 언어화해서 쉬운 말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걸 나름 잘 해냈다고 본다.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즐거운 선거운동이었다. 이건 여담인데, 그때 같이 선거운동했던 친구들이 너무 젊었다. 너무 젊어서 저지른 불법도 있다. 선거법에는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선거운동 다 같이 했다. 선거운동한 친구들 대부분이 미성년자이다 보니 운전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후보인 내가 운동원들을 태우고 강원도까지 운전해서 가고 했다. 지금은 주변에 운전자가 많이 늘어서 이번 총선은 다르겠지만.

다행이다. 아직도 운전자가 없으면 나라도 나서야 하나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2017년 개헌 논의 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를 결성, 새로운 개정 헌법에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개헌 논의 자체가 어느 순간 멈춰 버려서 그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스스로 평가할 때 그 캠페인의 성과가 있었다면?

-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넓혀서 기본소득이 국민의 기본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걸 기억과 기록에 남겼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직속 개헌특위랑 면담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당시 국가위원회에서 냈던 개헌안에 기

본소득이 포함되기도 하고, 우리가 제시했던 기본소득 개헌안이 보도가 되기도 하면서 기본소득이 국민에게 돈 몇 푼 주는 정책을 넘어서 기본소득이 국민의 기본권리로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확산된 것이 온국민 기본소득운동본부의 하나의 성과라고 본다. 두 번째 성과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킹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전국을 거의 다 다녔다. 아버지차를 빌려서 청년 4~5명이 전국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찾아다녔다. 그 결과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다양한 분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흩어져 있었는데,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캠페인을 계기로 이분들과 네트워킹이 되었다. 소속 정당이 다른 사람들이 캠페인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소속된 곳이 없지만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된다거나 해서, 아주 대중적으로 기본소득 개헌을 요구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각 지역별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좀 이뤄냈던 것은 일정 부분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계속 진지한 이야기만 했으니 잠깐 여담을 해보자.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활동을 하면서 아버님을 차를 썼다고 하는데, 아버님이 차를 잘 빌려주시는 편인가?

- 그렇다. 아버지 차가 36만킬로를 탄 오래 된 차다. 사람 많이 탈 수 있는 9인승 차여서 필요할 때마다 잘 빌려서 쓴다.

아버님이 그 이전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열렬한 구독자라고 했었는데 최근 용 대표가 하는 정치 활동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나?

- 내가 하는 일을 많이 지지해 주신다. 정치적,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나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정치활동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시고, 많이 지지해주시기도 한다. 기본소득도 그렇고, 최저임금 1만원도 그렇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지지자이시다. 기본소득당 당원도 되셨고, 당원도 많이 모아주시고 있다.

노동의 신성성 VS 기본소득이라는 신성한 노동의 보호막

기본소득당 창당에 나서기 전에도 꽤 오랫동안 열렬하게 기본소득 운동을 해온 셈이다. 노동당에 속해 있으면서 말이다. 그런데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굳게 믿는 사람들 중에는 기본소득이 인간을 노동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당에서도 그런 경계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 사실 조심스럽다. 탈당한 당대표가 자꾸 이전의 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 노동당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분명히 이견들이 있었다. 이전에 하나의 부문 의제처럼 기본소득이 논의될 때는 좋은 일 이니까 열심히 하면 좋지라고 익스큐즈 되던 것들이 내가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이것이 노동당이 가져가야 할 전망이며 그래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반응은 ‘이것은 노동의 폐기다’였었고,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진보 정당 혹은 노동운동을 다 무시하는 거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얼마 전 블로그를 검색하다가 봤는데, 어느 부대표 후보가 알바를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출마 의견을 밝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바나 했던 사람이 노동에 대해 얼마나 알겠냐?’라는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다고 하더라. 이걸 보면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정말 달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내가 주장했던 건 노동을 폐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노동이 어떤 노동이어야 하는지, 어떤 정치세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의 어떤 진보운동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만 지금 임금노동 안에서의 존중과 그 안에서의 권리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치세력으로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제대로 하고 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였다. 노동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노동을 버리자는 것이었다. 이 노동에 대한 입장 차이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아직도 노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본소득은 노동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노동의 반복이 아닌 자기를 실현하는 노동의 조건을 만들자는 것인데…….

- 어느 토론회에서 ‘노동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엄한 것입니다’라는 말을 했었다. 그것이 페이스북에 올라갔는데 바로 당사에 항의 전화가 왔다. ‘인간이 존엄한 것도 노동하기 때문인데,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나? 나이가 적지 않은데 생각 좀 신중하게 해라.’ 진짜 다르구나 했었다.

전국민 기본소득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동당을 떠났고, 지금은 기본소득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당을 만든다는 일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혹시 다른 길을 고민해 보지 않았나.

- 고민했다. 꼭 정당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창당을 마음먹을 때부터 많이 했다. 사실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아니라 기본소득 시민운동단체나 다른 방식들도 가능한데 왜 이 시점에 창당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논의했다.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정당은 하지만 총선 이후에 당을 만들자는 사람도 있었고, 총선 전에 만들자는 사람이 있었고, 대선 직전에 만들자는 사람도 있었다.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오랜 고민과 논의 끝에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랑 많이 연결돼 있긴 하지만 정치라는 영역에서 시민권과 발언권을 가지려면 정당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해본 결과 정치라는 영역에서 뭔가 세력화와 발언권과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당이라는 틀이 좋겠다, 선거라는 게 정치적 의제의 담론화에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창당을 하자고 마음먹었다.

기본소득이라는 모험, 그리고 기본소득당이라는 모험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원 이슈 정당을 선언했다. 하지만 세상사란 다 얹혀 있다. 예컨대 기본소득당이 내건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조건도 없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정의로운 경제’ ‘배제 없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안보에 이르는 전방위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원이슈다. 나머지 영역의 문제들은 어떻게 대응해나갈 생각인지 궁금하다.

- 기본소득이란 단순히 전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주

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기본소득이란 전국민 모두에게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조건도 없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 실질적 자유가 확고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경제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를 혁신적으로 재구성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기본소득 운동의 궁극적인 도달점이라고 한다면 전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정책을 관철시키는 한편 다른 한 편에서는 각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 각 방면의 민주주의적인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기본소득당 창당 준비위원회에서도 정책팀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의 개혁 정책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중 삼중 부담에 가까운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성들의 출산휴가는 물론 남성들의 출산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들을 만들고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맺음을 형성하고, 각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전제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 더해서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만 명 가까이 모여 있는 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각 사안들에 대해서 당원들과 다양한 민주적인 토론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도 지금 기본소득당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창당 이후에는 무엇보다 각 사안에 대해 당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토론의 틀,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에 힘을 예정이다.

상상하는 것만 해도 즐겁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이 가장 발랄하고 도발적인 사상과 감정을 끊임없이 소통해가며 어떤 의제나 정책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젊은 세대들의 에너지와 그 에너지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맛볼 수 있는 감동적인 장면일 거다. 때론 격렬하고 또 때론 웃음이 넘치는 그 과정을 일반 대중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들이 여럿 있다. 그 당들의 기본소득 관련 공약과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관련 공약의 차이가 있다면?

- 원내에 있는 정당들의 기본소득 공약과 비교해 보자면 기본소득당의 공약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범주형 기본소득 정도는 기존 정당들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다른 정당들이 아동수당이라거나 청년기본소득이라거나 조금 다르지만 농가수당 등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면,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것을 정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차이이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본질적이라고 본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주느냐의 차이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국민은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이 힘드니까, 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데 돈이 드니까, 농민들이 잘 못 버니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권리이자 약속으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실질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거대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는다.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이 다른 당과 차별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원외 정당들까지 합쳐서 지급 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거다. 기존 한국사회에서 논의된 기본소득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최고치였다.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충분하지 않은 기본소득부터 출발하는 현실안이 대세였다. 하지만 기본소득당은 생계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을 하나의 정책이자 공약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다. 부분적 기본소득을 넘어서서 생계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을 제시했다는 것, 이것이 다른 정당이 제시한 기본소득 정책과 다른 점이다.

‘보편적이면서도 충분한 기본소득 지급해야 한다, 바로 지금’

이런저런 자리에서 모두의 것인 만큼 그것을 잘 거둬들이고 정의롭게 배분해서 모두에게 골고루 준다면 월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것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는 걸 봤다. 파격적이다. 이와 관련 궁금한 것이 여럿 있다. 우선, 이 안에 대한 반응들은 어떤가?

- 양극단의 반응이 있었다. 진보진영에서는 계량적이라고 비판을 받은 반면, 보수 쪽에서는 반대로 저건 빨갱이다, 공산주의하자는 거다, 북한으로 가라는 반응이 많았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사회주의 하자는 소리지 하고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 싶은데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너무 비현실적인 정책 아니냐, 막 던지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제법 많은 편이어서 사실은 좀 놀랄 때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기본소득당의 당원으로 입당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 그분들 중 상당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러니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내린 정의에 대해 잘 알거나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전에 충분히 들어 봤거나 하지 않은 분들인데,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60만원을 매 월 준다는 것이 너무 좋다 해서 입당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2019년 11월 29일 현재 기본소득당에 입당한 9,000명 중에, 이중 이전부터 접촉했던 분들은 500명도 안 될 텐데, 조건 없이 매월 주어지는 60만원이 너무 좋아서 입당한다고 밝히는 분들이 많았다.

우리 국민, 아니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월 60만원을 지급하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나? 혹시 구체적으로 그려본 상이 있나?

- 전국민에게 60만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디테일은 부당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장면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시급 6,000원, 7,000원, 8,000원 주는 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장이나 손님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기본소득 60만원이 주어진다면 부당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여유들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60만원이라는 기본소득이 있으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그 기간이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거고 또 일터에서의 관계 맺음도 달라질 것 같다. 옛날에 경남 쪽에 기본소득 강의를 하러 적이 있었다. 주된 분들이 4~5대 여성분들이었다. 너무 좋다, 60만원 주면 이혼해야겠네 라고 말씀하시더라. 이혼을 조장하는 거냐 할 수 있지만 기존의 가장이라는 경제권을 쥔 사람을 중심으로 억압적으로 구성돼 왔던 가족관계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번에 인터넷에 홍보물을 올리면서 그런 걸 하나 썼다. 친구들 만나서 오늘 내가 커피 쏠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그 정도는 하다가 누군가 카푸치노를 고르면 눈이 번쩍 떠지는 장면을 만들어봤다. 아주 사소한 몇백 원의 차이인 것 같지만 되게 사소한 곳에서 느껴지는 어떤 결핍이나 상대적 빈곤이 많은 사람을 자괴감에 빠뜨린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사람의 자존감이나 이런 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는 인간관계의 관계 맺음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요즘 1.5평짜리 고시원에서 살면서 사실 다 돈이니까 친구도 못 만나고, 커피 한 잔 하고 밥 한 번 먹고, 영화 한 번 보는 것도 다 돈이니까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감각을 가져다줄 것 같다. 옛날에 알바연대 활동할 때 하루에 야간 알바를 매일 12시간씩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맨날 맨날 알바만 하는 거다. 알바연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편의점으로 찾아가면 이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반갑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좋아하더라. 사실은 그게 지금 알바를 하면서 혹은 돈이 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대부분의 감각일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파편화된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크다. 개인적으로는 매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지금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가족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결혼한 지 3년차인데, 물론 양가 부모님들께서 압박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지금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자녀계획을 세우거나 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60만원씩 매월 지급되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60만원이 계속 지급된다면 그런 계획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실의 벽을 잘 깨기와 설레임의 정치

기본소득 월 60만원 지급, 저는 이게 정말 맘에 든다. 빨리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한다. 더불어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 월 60만원 지급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면 한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반대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떤 반대 움

직임이 예상되며,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이 총선에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가 만만치 않으면 정말 기쁠 거 같다.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이 핵심 이슈가 되면 물론 많은 반대 움직임들이 예상이 된다. 이 상황이 되면, 내가 정치라는 영역에서 오래 잔뼈가 굵은 건 아니지만 짧은 기간 동안 느낀 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주 논리적인 담론이나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하는 구체적인 모델, 재정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각자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이것을 선택하면 정말 바뀌겠구나 하는 설레임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성 정당들은, 지금 있는 진보정당, 보수정당 할 것 없이 그런 설레임을 주는 정치를 다 잃어버린 것 같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설레임을 줄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한다. 논리로써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최근 허경영의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연일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뒤섞어 놓은 듯한 터무니 없는 정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이것이 자칫 기본소득이라는 설레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정책을 회화화시키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지까지는 잘 모르는 상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가 기본소득 관련된 거 올리면 허경영 지지하는 분들이 댓글을 다는 걸 본적이 있다. 며칠 전 LAB2050에서 기본소득에 관해 언급하는 내 영상을 올렸는데 밑에 ‘허경영보다 금액이 적네’, ‘허경영 공화국에 대해서 공부하라’ 라는 댓글이 달리더라.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기존 국가 시스템이 지독하게 비효율적이니 그런 곳에 들어가는 돈을 기본혁명배당금으로 주자는 게 핵심 정책인 거 같았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복지 제도를 다 해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다음 선거에서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기본소득당은 더 설득력 있고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으로 선거에 임할 결심이다.

나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고리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꾸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세상이 바뀌어야 기본소득이 원래의 목적인 실질적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도 기본소득 세상은 오고 있지 않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분배한다는 이 정의로운 정책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 한 두 가지를 꼽아본다면?

- 내가 보기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노동에 대한 신성성을 과잉으로 강조하는 게 가장 큰 장애물이다. 사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불변의 신성한 테제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본소득, 한마디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급하는 소득이라는 것에 대한 반발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노동당에서 이런 저런 논쟁을 할 때도 바로 그게 문제였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일해야만 먹고 살 자격이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끔 우리가 자매품과 유사품이라는 비유를 자주 쓰는데, 노동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행할 의향과 의지가 있는 인간에게만 사회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고한 관념이 기본소득과 비슷하게 현금을 주지만 각종 조건들이 붙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붙는 기본소득의 유사품들이 난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면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거나 자기 존엄을 느끼거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극소수 일자리가 그럴 뿐이다. 편의점에서 12시간 동안 바코드를 찍는 일이 과연 자아실현일까?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한 노동권을 찾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매일 같이 매연에 몸 상하고 성희롱, 성폭력에 시달리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거기서 동전을 거슬러 주는 일을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하는 것이 과연 자아실현이냐 했을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노동은 신성하며 그러므로 노동하는 인간만 인간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견고한 벽 그것을 잘 깨는 것이 기본소득 실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노동은 신성하므로 무조건 노동을 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해 신성한 노동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고, 그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때 강요하지 않더라도 사회구성원 거의 대부분이 자아실현을 위해,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한 노동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말처럼 들린다.

- 그렇다. 그때 노동은 근로,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 그러니까 한 개인을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소모시키고 탈진시키는 노동이 아닌 인간 각자의 자아를 실현하는 진정한 신성한 노동이라 할 수 있을 거다. 기본소득은 그러한 진정한 노동을 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만들어줄 거라 생각한다.

기본소득의 미래,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미래

시간이 많이 흘렀다. 마무리하자. 곧 총선이다. 목표도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들도 세웠을 거다.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 목표에 도달하려 하는가?

- 첫 번째 목표는 원내진출이다. 두 번째 목표는, 의석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의석수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노동이 신성하다고 하고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디테일한 입장만 다른 기존의 진보와 보수가 아닌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제3세력, 제3지대, 제3정당으로 기본소득당이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전략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등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에는 권역별, 투표율 다 연동돼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그것과 별개로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잘 이어받아 온라인 공간을 적극 활용하려 한다. 기본소득당은 거의 모든 것을 온라인을 공간을 통해 만들어낸 정당이다. 온라인을 통해 기본소득, 기본소득당에 대해 알렸고 이것에 동의한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당원으로 가입해 주셨다. 이제는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조직된 단체, 단체의 조직이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개진과 토론, 그리고 의제 선정이나 핵심 정책 개발은 물론 기본소득당에 대한 홍보와 지지를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총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기본소득당의 향후 계획과 주요 일정을 알려달라.

- 11월 30일, 12월 1일 서울, 경기 창당대회가 열린다. 12월 14일에 인천시당, 12월 19일에 광주시당 창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부산시당 창당대회 일정은 부산에서 조율하고 있는 중이고,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그 창당대회에서 당의 기본 골간인 핵심정책과 당헌까지 함께 만들고, 총선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을 적극 지지하면서 모인 만 명의 당원들과 함께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총선 이후에는 당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이 토론되고 소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걸 전 당원들과 논의할 거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선이 있다. 내가 보기엔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하고, 대선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전망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가 대선인데, 그 대선에서 기본소득당이 좋은 후보를 내고 기본소득을 핵심으로 한 미래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설레는 전망들을 잘 제시하는 것이 2022년까지의 일정이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소득당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20대여서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자격이 있는 대통령 후보를 내기가 곤란하다는 거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다.

이제 명실상부 정치가다. 개인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기본소득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되는 거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삶에 와 닿는 언어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전국에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기본소득이 뭔지 모르지만 들어 봐야지 하는 사람들과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현재의 목표다. 너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이미 목표에 근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꼭 목표에 도달하길 바란다. 이 좌담을 읽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몇 년 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기본소득의 실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치 세력화의 과정에 전국 곳곳에서 기본소득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고 있다. 이 힘들을 잘 모아서, 2010년 대선이 무상급식 선거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 총선이 기본소득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려 한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혼자 울 수 있도록 - 오래된 기도 2

이문재
시인

혼자 울 수 있도록
그 사람 혼자 울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보기로 한다
모른 척 다른 데 쳐다보기로 한다

혼자 울다 그칠 수 있도록
당신 혼자 울다 웃을 수도 있도록
나는 여기서 무심한 척
먼 하늘 바라보기로 한다

혼자 울 때
부디 억울하거나 초라해지지 않도록
혼자 웃을 때
부디 교만하거나 배타적이지 않도록

저마다 혼자 울어도
지금 어디선가 울고 있을 누군가를
어디선가 지금 울음 그쳤을 그 누군가를
어디에선가 나를 기다릴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혼자 있음이 크고 깊어질 수 있도록
멀리서 그리워하는 생각들이
짐짓 모른 척하고 옆에 있는 생각들이
서로에게 맑고 향기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때로 모른 척하고
결을 지켜줘야 할 때가 있다

발바닥이 간지러워

윤성희
소설가

지난 달, 집에 가는 길에 지갑을 주웠다. 중간 고사를 망쳤고 그래서 일찍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았다.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날에는 나는 걸었다. 배가 고플 때까지 돌아다닌 후 집에 돌아가 밥을 먹으면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기 때문이었다.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익숙한 길에 들어섰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잠깐 친하게 지내던 정민이랑 온 적이 있던 골목이었다. 정민이랑 짝이 되던 달에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와 말을 해봤다. 짝이 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민이가 자기 집에 김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언니가 소풍을 가서 아침에 김밥을 썼다는 거였다. 집에 가보니 식탁 위에 김밥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여있었다. 스무 줄은 되어 보였다. 정민이 말에 의하면 정민이 엄마는 육남매의 첫째여서 손이 무지 크다고 했다. 잡채를 하면 사십 인분을 한다고 했다. 정민이네 김밥은 끝내주게 맛있었다. 잡채를 할 때도 불러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나는 김밥을 세 줄이나 먹었다. 한 줄을 더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정민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끊더니 싱크대 서랍에서 쿠키호일을 꺼내 김밥 다섯 줄을 썼다. 옆동네에 이모할머니가 사는데 엄마가 거기에 김밥을 가져다 주라고 했다고 정민이 말했다. 나는 정민을 따라 김밥 배달을 갔다. 정민의 이모할머니네를 갔더니 때문에 아기보살이라는 깃발이 달려 있었다. 이모할머니는 뚱뚱했고 무섭게 생겼다. 눈썹이 앵그리버드 같았다. 어디에 아기보살이 들어있는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이모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그 농선하게 생겼구나, 하고 말했다.

지갑을 주웠던 날, 나는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정민이의 이모할머니네 집 앞까지 갔다. 대문이 열려 있어 안을 살짝 보니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보였다. 아기보살이라는 깃발은 여전히 달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당에 냉장고가 버려져 있었다. 미닫이 문을 열어보니 거실 한가운데 칼을 들고 있는 불상이 있었다. 불상과 눈이 마주쳤는데 순간 등이 오싹해졌다. 나는 밖으로 나와 한참을 달렸다. 그러다 숨이 가빠져 어느 공원의 벤치에 앉았는데 거기서 지갑을 주웠다. 열어보니 오만원짜리가 스무장은 넘게 들어 있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휴대폰이었다. 이 돈이면 휴대폰을 바꿀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하자 거실 한가운데 있던 불상이 떠올랐다. 칼이 아주 컸다. 선하게 생겼구나, 하고 말하던 정민의 이모할머니의 목소리도 떠올랐다. 그래서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주었다. 정말이지 아까워 죽을뻔했다. 집에 돌아오면서 오만원짜리 한장만 뺄 걸 하고 후회했다.

며칠 후 조회시간에 담임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였다. 나는 표창장을 받았다. 중학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상이었다. 그렇다고 초등학교 때 상을 받아봤다는 건 아니지만. 담임선생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무리가 있었는데, 써클 이름이 작은아씨들였다는 거였다. 원래는 사총사로 이름을 지으려 했는데 같은 반에 삼총사로 이름을 지은 남자아이들이 있어서 작은아씨들로 지었다고 선생님은 말했다. 네 명의 자매들. 학교 앞 영분식의 벽에 ‘영원한 우정, 작은아씨들’이라는 낙서도 했다. 소풍 때 똑같은 티셔츠를 사서 입기도 했다고 담임선생님은 말했다. 거기까지 말을 한 다음 담임선생님은 한참을 말없이 우리들을 쳐다보았다. 침묵 끝에 뭐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다시 입을 연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 “2학년이 되어서 반이 달라졌을 때 부둥켜안고 울기도 했단다. 그랬는데 말이지.....” 넷이 완전히 갈라진 것은 아니고 두 명씩 같은 반이 되었다고 했다. 그랬는데, 학기초에 반에서 누군가 지갑을 잃어버린 사건이 생겼다. 하필이면 체육시간에 혼자 교실에 남은 사람이 있었고, 그 아이가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작은아씨들의 한 멤버. 담임선생님과 같은 반이 된 멤버였다. 그 친구가 선생님에게 결백을 호소했을 때 선생님은 대답을 못했다고 했다. 고개를 숙이고 책상만 바라보았다고. 며칠 후 영분식 벽에 누군가 새롭게 낙서를 했다. 영원한 우정에 가위표를 그리고 그 아래에 엇먹어라, 라고 써놓은 것이다. “그 후로 영분식 앞을 지나가지 못했지. 게다가 떡볶이도 못 먹게 되었어.” 선생님은 여중생이 떡볶이를 못 먹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느냐고 우리에게 물었다. 그러고는 내가 앉아 있는 자리까지 걸어와서는 다시 한 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게 평생 자기를 따라다닌단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발바닥이 간지럽기 시작했다. 예취. 기침을 하고 나니 오줌이 찹금 나왔다.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오줌이 마렵기 시작했다.

표창장을 받은 다음 날, 하교를 하는데 옆반 담임선생님을 교문 앞에서 마주쳤다. “니가 백만원이 든 지갑을 주었다며. 잘했다.” 선생님이 말했다. 오줌이 찹끔. 나는 손등을 꼬집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정미를 만났다. 학원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정미는 내게 백만원을 찾아줬는데 보상은 받았느냐고 물었다. 내가 그런 건 없었다고 하자 나를 바보라고 했다. “원래 십퍼센트를 돌려받는 거야.” 나는 속으로 십퍼센트를 생각했다. 십만원이라니. 그 돈이면 사고 싶은 운동화를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정미한테는 다르게 말했다. “그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니야.” 그러자 정미가 대단하고 대답했다. “나 같으면 섭섭했을 거야. 넌 대단하다.” 정미의 말을 듣자 또 발바닥이 간지럽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줌이 마렵기 시작했다. 정미와 삼거리에서 헤어진 뒤 나는 집까지 뛰었다. 횡단보도 파란 불이 두 칸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뛰었다. 중간에 빨간 불로 바뀌었고 어디선가 경적 소리가 들렸다. 횡단보도 끝까지 왔을 때였다. 신호를 기다리던 어린 아이가 횡단보도 아래로 내려왔고, 트럭이 우회전을 했다. 나는 속도를 줄일 수 없어 그대로 아이와 부딪혔다. 횡단보도 앞에서 전단지를 건네 받는 바람에 아이를 손을 놓쳤던 엄마가 소리쳤다. 나는 아이를 안고 넘어졌다. 하필이면 그 장면을 옆 반 반장이 목격했는데, 그 아이의 말에 의하면 내가 어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날랐다고 했다.

나는 일주일 후에 또 표창장을 받았다. 도대체 뭐가 뭔지. 어리둥절. 그 후로, 담임선생님은 나를 용감

한 수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자, 용감한 수지. 발표해 볼까.” 이런 식이었다. 다른 친구들도 선생님을 흥내내며 그렇게 불렀다. 그때마다 발바닥이 간지럽고 오줌이 마려웠다. 오줌이 마렵다는 생각이 들면 참아 지지가 않았다. 세상에나. 용감하다는 말을 들 때마다 오줌이 마렵다니. 나는 오줌싸개가 될까봐 두려웠다. 엄마 아빠가 또 말다툼을 하던 날 나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칭찬 받고 컸으면 오줌싸개는 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울었다. 울면서 우는 게 부끄러워서 울었다.

* * *

막내이모가 며칠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엄마가 말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집을 구하는 동안 당분간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설명을 했다. 그 말은 내가 이모랑 같은 방을 써야 한다는 말이었다. “너 사고 싶어한 운동화 있잖아. 그거 사줄게.” 엄마가 내게 말했다. 내가 운 뒤로 부모님은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밥 먹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밥 먹을래?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다. 무뚝뚝한 아빠는 카톡 메시지를 하루에 다섯번씩 보냈는데, 마지막에 꼭 하트를 넣었다. 세상 불편해 죽겠던 참이라 막내이모가 오는 게 좀 반갑기도 했다. 우리 집안의 골칫덩어리. 엄마는 막내이모가 속만 안 썩어도 외할아버지가 오래 사셨을 거라고 말하곤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을 시도한 뒤로 막내이모는 일곱 번이나 집을 나갔다. 그런데도 놀랍게 공부는 그럭저럭해서 대학에 합격을 해서 외할아버지를 잠깐 기쁘게 했다. 그리고 돈이 아깝다며 일 년 만에 때려치우더니 유명 칼국수집의 주방에 취직을 했는데, 비법을 배워 칼국수집 사장이 되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했다. 그 후로 막내이모는 다섯번 가게를 차렸고 다섯번 망했다. 재작년, 마지막으로 망한 가게에서 엄마랑 둘째이모랑 막내이모는 술을 마셨다. 엄마는 막내이모한테 정신차리라고 잔소리를 했다. 결혼하더니 성미가 괄괄해진 둘째이모는 미친년이라고 욕을 했다. 그때 막내이모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망했어도 언니들한테는 손 안 벌렸다고. 한푼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왜 화를 내냐고. 그리고 막내이모는 동남아로 떠났다. 그 이모가 이 년만에 돌아왔다.

이모는 돌아오자마자 사흘을 내리 잤다. 나는 가끔 이모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숨은 제대로 쉬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나더니 돼지고기묵은지찌름을 했다. 그리고 달걀말이까지. 아빠가 저녁밥상을 보더니 막걸리를 사왔다. 이모의 음식을 먹다보면 이모가 영원히 우리집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방안 하나 더 있다면. “이렇게 숨씨가 좋은데 왜 망했는지 난 도통 모르겠네.” 아빠가 말했다. “처제, 그렇다고 김치찌개 가게를 하라는 건 아니야.” 아빠와 엄마가 연애를 할 적에 이모가 아빠에게 이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엄마 이름을 성까지 붙여서 부르지 말라고. 엄마의 이름은 장도레. 노래를 잘 불러 시대를 잘 타고 났다면 유명한 성악가가 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외할머니의 피를 이어받으라고 외할아버지가 큰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둘째 이모의 이름은 솔라. 막내 이모의 이름은 도도였다. 하지만 불행히 엄마는 외할아버지의 음치를 이어받았고, 친구들에게 장독대라는 별명으로 평생 불리게 되었다. 그 별명을 몹시도 싫어했던 엄마는 누군가 장도레, 라고 부르면 저절로 장독대, 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가 되었다.

막내이모는 매일 요리를 했다. 다음 날은 아빠가 좋아하는 골뱅이 무침을, 그 다음 날은 빼에야라는 스페인 음식을, 또 그 다음 날은 비지찌개를. 그러고는 밤새 지난 2년 동안 못 본 한국드라마를 보았다. 아침에 일어나보면 이모는 리모컨을 손에 든 채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이모의 배 위에 살짝 앉아서 소파가 왜 이렇게 물컹거리냐고 농담을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이모는 새 직장을 구했다고, 직장 근처에 방도 구했다고, 말했다. 각 나라들의 향신료와 소스들을 수입해서 파는 무역회사라고. 그러면 서 내게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다. 나는 김밥이라고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식탁에 김밥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이모가 소풍 가는 기분으로 먹어보자고 해서 우리 둘은 김밥을 들고 학교까지 같이 걸어갔다. 학교 가는 길에 내가 지갑을 주웠던 공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밥은 맛있었다. 내가 하나를 먹고 엄지 손가락을 들었다. 김밥을 한 줄 먹은 다음 나는 이모에게 물었다. “근데 이모, 이모는 왜 가출을 했어?” 이모가 한참 내 얼굴을 보다 대답을 했다. “친구가 잘 못 되었는데 이모가 그걸 막지 못했거든.” 그러면서 이모는 엄마가 왜 장독대란 별명을 싫어하게 되었는지를 들려주었다. 예전에 외갓집은 대문 옆에 따로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 위가 장독대였다고 한다.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그 장독대 올라가 고추장을 푸다 그만 미끄러져 떨어졌지, 니 외할어머니가. 그때 크게 다쳐 자리보전을 하시다 돌아가셨거든.” 고추장을 넣은 장떡을 부쳐 달라고 조르던 것은 엄마였다. 나는 이모에게 칭찬만 들으면 부끄러워 오줌이 마려워진다고 고백을 했다. 사실 몇 번이나 오줌을 지렸고 그래서 학교 가는 게 무섭다고. 그 말을 하는 데 목이 메었다. 이모가 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었다. 이모는 동남아를 떠돌아다니는 동안 종종 죽은 친구가 찾아오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슬퍼하기 싫어서, 미안해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는구나. “그래서 돌아왔지. 그래서 취직도 했고, 니 엄마는 장독대란 별명을 싫어해도 여전히 장떡을 잘 먹는단다. 놀랍지?” 그러면서 이모가 김밥 하나를 내 입에 넣어주었다. 내가 다시 한번 엄지 손가락을 들었다니 이모가 진짜 맛있는 음식들은 숨겨진 비법이 없단다, 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오늘 학교 땡땡이 칠래?” 이모가 물었다. “정말?” “응. 그냥 이모랑 하루 놀자.” 우리는 김밥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놀 것인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목시록적 징후들과 정치개혁의 원리로서의 기본소득

류보선
문학평론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1.

웃음소리·벌름거리는 코·다짐·손사래와 줄행랑 ; 목시록적 징후들 1

여전히 목시록이 대세다. 당연한 지도 모르겠다. 세계 구석구석이 위기적 징후로 어두운데 우리를 구원할 반딧불은 그 미광조차 희미한 까닭이다.

토드 필립스의 <조커>를 봤다. <조커>에 대해서라면 이야기할 것이 많다. 역대 ‘조커’들과의 동일성과 차이가 그렇고, 호아킨 피닉스의 미친 연기가 그렇다. 하지만 토드 필립스의 <조커>에서 무엇보다 특이했던 것은, 다시 말해 토드 필립스의 <조커>를 토드 필립스의 <조커>로 만든 것이 있다면, ‘조커’의 반복되는 웃음 소리였다. 토드 필립스의 <조커>에서 나중에는 ‘조커’가 되는 ‘아서’의 웃음소리가

자주 클로즈업된다. 그렇게 ‘아서’가 웃을 때마다 그의 삶은 급전직하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행하는 악한 행동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즐기는 악마인 ‘조커’로 진화, 아니, 전락한다. 때문에 관객은 ‘조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웃음소리가 가져올 불행에 불안해하며 숨죽이는 상태가 되고 만다.

이런 점에서 토드 필립스의 <조커>는 참신한 발상의 영화 존 크래신스키의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연상시키는 데가 있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에는 몸 전체가 청각기관인 괴물체가 등장한다. 그 괴물체는 작은 소리에도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어떤 소리가 날라치면 그 소리를 낸 그 생물체를 본능적으로 파괴한다. 그래서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상영 내내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음악도 없고 대사도 없으며 오로지 수화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절대 정적의 세계라고나 할까. 그러다 어느 순간 미세한 소리라도 날라치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 미세한 소리 하나에 참혹한 죽음이 뒤를 잇는다. 작은 소리 하나에 영화관 전체가 숨죽이는 침묵에 빠져드는, 그리고 관객들을 살짝 소름돋게 만드는 기이한 영화, 그게 바로 <콰이어트 플레이스>다.

토드 필립스의 <조커>는 ‘조커’의 웃음소리가 그 역할을 한다. <조커>의 핵심 서사는, 신성한 디테일이 넘쳐나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놓치기 쉽지만, 간단하다. 어릴 땐 ‘해피’로 불렸다가 현재는 ‘아서’로 살아가는 인물이 ‘조커’가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일종의 반성장 플롯을 가진 영화라 할 수 있다. 아서는 불우하게 출생한다. 원하지 않은 아들을 받아든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들을 낳은 한때의 연인을 과대망상 환자로 만들어 아들과 동시에 내친다. 그렇게 내쳐진 어머니는 오로지 아서 아버지와의 행복한 그때로의 귀환을 꿈꾸며 아들에게 해피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런 이름을 붙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강요한다. 하지만 어린 아서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어머니가 아서 아버지와의 생애 최고의 순간에 붙잡혀 있는 동안 아서는 의붓 아버지들의 폭행에 시달린다. 이 부조화 탓에 아서는 ‘병적 웃음’ 혹은 ‘웃음의 병’이라는 증상을 얻게 된다. 상황과 관계 없이 충동적으로 웃는다. 말하자면 웃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도 병적으로 웃는다. 이 병적 웃음 때문에 아서는 수시로 곤경에 빠진다. 또한 그는 행복해야 한다는 주입된 강박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특히 어머니를 웃게 해야 한다는 역시 주입된 의무감 때문에 코미디언을 꿈꾸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웃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코미디언을! 『운수 좋은 날』이 생애 최악의 날의 기록이듯,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난장이 일가가 사는 곳이 낙원구 행복동이면 그곳에서 그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듯, 별명에 맞게 항상 웃으면서 살고자 한 <조커>의 해피 역시 전혀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을 겨우겨우 이어간다.

힘든 삶 속에서도 아서는 강요된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을 웃을 수 없는 아서는 광대 분장을 하고서라도 항상 웃고



자 하며 남을 웃기고자 한다. 하지만 그가 열심히 살고자 하면 할수록 그의 생활은 더욱 곤두박질치고 그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다. 그리고 터져 나오는 병적 웃음 때문에 많은 경우 노골적인 폭력의 대상이 된다. 가진 자들은 일하지 않아도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열심히 살면 할수록 점점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달는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세상 속에서 가혹한 멸시의 시선을 견디며 나름 웃으며 살고자 했던 아서는 급기야 통제하지 못하는 웃음 외에는 웃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반복되는 편견과 멸시와 학대의 경험은 그를 점점 더 절망에 빠뜨리고 끝내는 세상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게 한다. 그리고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아버지는, 큰 기대도 아닌 ‘그냥 한 번만 안아 주면 안 돼요?’ 정도를 바랐건만, 안아 주기는커녕 ‘내 아들 다시 건들면 죽이겠다’며 주먹을 날린다. 이 순간 ‘아서’의 들끓고 있던 분노가 폭발한다. 아서는 분노의 화신을 넘어 복수의 화신이 되고 급기야는 악마가 된다. 더 나아가 극도의 불평등 구조에 고통 받던 대중들이 ‘내가 조커다’라며 ‘조커’를 영웅으로 떠받들자 아서는 아서를 버리고 오로지 ‘조커’가 된다. 발작적으로 웃던 아서가 악을 행하고도 웃는, 그러니까 악마가 된다.

이런 까닭에 <조커>를 보는 내내 우리는 조커가 웃는 장면마다, 처음에는 발작적으로 웃다가 나중에는 의지적으로 웃는 조커를 볼 때마다 불편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조커>가 그려낸 ‘고담’과 우리 사회가 너무 닮아 있는 때문이고 그런 까닭에 지금과 같은 불평등 구조가 혁신되지 않으면 조만간 우리 앞에서 조커 같은 악마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리고 수많은 민중들이 ‘내가 조커다’라며 그를 떠받들 우울한 상황에 대한 예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커>를 보고 나면 <조커>를 보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주변에서 누군가 웃고 있으면, 그것도 멈추지 않고 웃고 있으면, 그 웃음소리에서 희망의 징후 대신 파멸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주변의 웃음에서 ‘일망의 희망’을 느끼던 우리들에게 그 웃음소리에서마저 묵시록적 징후를 읽게 만든, 기분 나쁘게 잘 만들어진, 그래서 정말 우울한 영화, <조커>다.

<조커>가 조커의 발작적인 웃음소리로 관객을 긴장하게 만든다면 알리아바시 감독의 <경계선>은 주인공인 ‘티나’와 ‘보레’가 코를 벌름할 때마다 손을 잔뜩 움켜쥐게 만든다. ‘티나’의 코야말로 이제까지의 영화가 그려낸 가장 자연스럽고도 완벽한 이방인 혹은 절대 타자의 얼굴이다. ‘크롤’족이라 불리는 ‘티나’는 동유럽 신화에 기반해 만들어진 인물로 인간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나 그러나 전혀 다른 종이다. 외모부터 인간과 다르고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가 다르며, 생식의 메카니즘도 다르다. 특히 ‘티나’는 후각으로 인간이라는 종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식물은 물론 자연 전체와 교감한다. 특히 전자의 능력을 인정받아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녀이면서도 동시에 그’인 ‘티나’는 세관에서 근무하며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걸러낸다. 그런 까닭에 ‘티나’가 코를 벌름거릴

때마다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풍경 혹은 우리의 상상 밖의 실재들과 충격적으로 조우한다. ‘그녀 혹은 그’가 코를 벌름거릴 때마다 정상적인 것에 갇든 비정상성을 보게 되고 문명에 억압된 야만성의 맨얼굴을 보게 된다. 아니면 인간이 자부하는 인간성 안에 잠재된 폭력성을 목격하게 된다. ‘그녀 혹은 그’는 자신이 가진 자신만의 재능으로 인간 사회에서 나름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행복을 느끼며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자신들과 다른 외모를 지녔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인간으로부터 편협과 멸시를 받는 까닭이고, 자신의 특이한 신체적 구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괴물로 학대하며 살아오고 있던 터였다.

바로 이때 ‘티나’와 같은 종족이면서 욕망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보레’가 나타난다. ‘티나’가 ‘그녀이면서 그’라고 한다면 ‘보레’는 ‘그이면서 그녀’이다. 둘은 운명적으로, 같은 종끼리만 맛볼 수 있는 친밀성 때문에 격렬한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티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인간과 다른 존재일 뿐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철저하게 은폐한 (양)아버지에게 분노를 맛보기도 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희열에 생애 최고의 순간을 누린다. 하지만 생애 최고의 순간은 오래 가지 못한다. ‘티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보레’의 실체를 확인하면서부터이다. ‘보레’는 ‘크롤’종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보레’가 인간들에게 받은 것은 ‘절대적 환대’가 아닌 ‘절대적 경멸’일 뿐이었다. 이 누적된 인간에 의한 모멸 때문에 ‘보레’는 ‘티나’ 모양 다른 이종과 교감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대신 자신을 경멸했을 뿐만 아니라 생체 실험으로 ‘크롤’종을 거의 멸종 단계에 빠뜨린 인간에 대한 혐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레’는 인간의 아기와 유사한 ‘크롤’종의 난자와 인간의 아기를 바꿔치기해서 소아성애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간에게 복수한다. ‘보레’는 인간에 대한 복수의 행진에 ‘티나’를 동참시키려 하며, ‘티나’가 ‘보레’의 길을 거부함으로써 이 둘은 이별한다. 인간의 오만이 ‘보레’의 복수를 낳았지만 ‘티나’는 복수 대신 인간이라는 타자와의 공존 혹은 공생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경계선>이 ‘티나’의 벌름거리는 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며 지구를 오로지 현재의 인간을 위한 지구로 마구 개발하고 있는 인간 때문에 지구 전체가 ‘자연의 복수’라는 묵시록적 상황 앞에 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그중에서도 특히 ‘쓸모없는 실존으로 격하된 존재’들 그러니까 하위계급이나 이방인 그리고 타자적 존재들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조만간 인간 사회는 혐오와 피가 넘치는 복수의 경연장이 될 것이라는 것. <경계선> 역시 <조커> 모양 보고 나면 이 영화를 보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게 하는 힘이 있다. <조커>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참혹한 아픔과 슬픔이 깃들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면, <경계선>은 주변



의 생명체의 별름거리는 코를 통하여 인간이 인간 자신의 자기성에 매몰되어 인간과 다른 타자를 적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거칠게 정리하면 <경계선>은 인간이 아닌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별름거리는 코에서 현재 인간이 행하고 있는 생태적 파괴를 읽게 하는 바로 그런 영화이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무조건적 복지의 바람직성을 감동적으로 전달한 적이 있는 켄 로치의 <미안해요, 리키> 역시 어떤 특정 장면이 관객 전체를 긴장과 불안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조커>, <경계선>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미안해요, 리키>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이후 제작 중단을 선언했던 켄 로치 감독의 변심이 아니었다라면 하마터면 볼 수 없었던 작품이다. 한 노대가의 변심 덕분에 우연히 받아든 축복 같은 영화, <미안해요, 리키>가 나에겐 그런 영화였다. <미안해요, 리키>의 ‘리키’는 택배회사에 근무하는 그러나 자영업자로 등록된 일종의 가짜자영업자다. 플랫폼 노동 혹은 깃 노동Gig work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나 할까. 하여튼 택배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자영업자로 등록된 그런 노동자이다. 잠시만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하건만 점점 더 생활이 막막해지던 중 리키는 친구의 권유로 택배배달업자가 된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말에 이끌리고,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다는 말에 그러니까 많이 일하면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리키는 덜컥 할부로 고급 밴을 구입한다. 그리고 한 시도 쉬지 않고 일한다. 그러나 리키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 부조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공평하지 않은 계약 때문이다. 회사 관리자는 ‘당신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말에 속에는 리키를 거둬들여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회사는 리키에게 고용인에게 행하듯 권리를 행사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예컨대 소비자가 요청한 시간에 물건을 전달하지 못하면 벌금을 물리지만 리키가 노상강도를 당해 물건도 잃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땐 전적으로 리키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이 구조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는 이윤은 물론 잉여이윤까지 독점하게 된다. 회사는 리키가 일하는 덕으로 리키가 일한 만큼 이윤을 취한다. 그리고 리키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을 땐 벌금을 물려 또 이윤을 취한다. 그런데 어떤 뜻밖의 상황, 곧 산업재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손실을 입을 염려가 없다. 거대 플랫폼만 만들어내면 그 이후부터 회사는 오로지 노골적으로 부를 축적하기만 하면 된다. 이 자본친화적 불공정 구조 속에서 리키가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하는 기계가 되거나 기계처럼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리키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인 지라 그럴 수 없다. 피로가 누적되어 더 이상 노동의 강도를 견딜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기계로 사는 리키 때문에 가족의 안정이 깨지기 시작한다. 리키의 아들은 열심히 일할수록 거의 모든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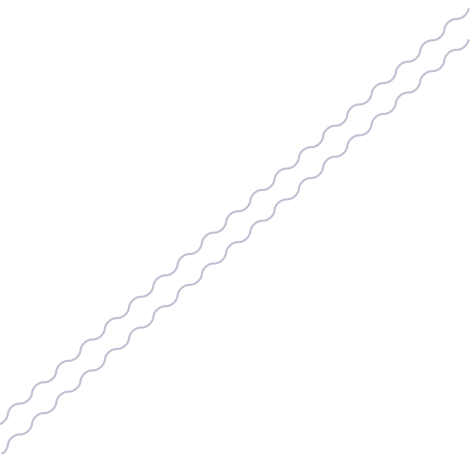
중의 삶이 열악해지는 데도 오로지 열심히 일하라는 대타자의 명령을 거부하기에 이르고 급기야 상징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런저런 말썽을 부린다. 그때마다 리키는 불려가고 그렇게 뺏긴 시간만큼 벌금은 늘어간다.

그런데 이런 곤경에 빠질 때마다 리키는 더 열심히 하자고 결심하는 것으로 이 곤경을 헤쳐 가고자 한다. 하지만 이 결단이 리키 가족의 상황을 개선시키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리키가 결단할 때마다 당연 리키 가족이 처한 상황은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진다. 이 때문에 <미안해요, 리키>의 관객들은 리키가 더 열심히 하자고 결심할 때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다. 리키의 결심은 노상강도 때 당한 폭력으로 한쪽 눈이 감긴 상태로 차를 몰고 나갈 때 정점을 찍는데, 그 장면에서 관객들의 안타까움도 최고조에 이른다. 열심히 일할수록 더욱 더 미래가 어두워지는 사회, 켄 로치의 <미안해요, 리키>가 그려낸 우리 시대의 초상화이다. 리키가 굳게 결심하는 장면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미안해요, 리키>를 통해 켄로치 감독이 전달하고자 했다던 그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김병기의 <삽질> 역시 반복되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장면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으며 시행한 4대강 사업을 다룬 이 다큐멘타리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병존해 있다. 하나는 4대강 사업 이후 4대강의 현장에 찾아가 현재 4대강 주변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오염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주역들을 찾아가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생각을 듣는 것이다. 문제의 장면은 두 번째 이야기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지금의 생각을 묻는 감독에게 그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전국토의 녹색 생태계를 복원시킬 것으로 주장하며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는 데 앞장섰던 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보여준 장면은 카메라를 치우라는 손사래이거나 줄행랑이다.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카메라 앞에서 서지 않는다.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효과분석을 하지도 않는다. 반성 은커녕 변명도 없다. 다만 손사래 치고 줄행랑친다.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지구생태계에 새 역사를 쓸 거라고 호통치던 그들이 말이다.

그래서 그들의 손사래와 줄행랑은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한다. 아니, 분노하게 만든다. 대체 뭐지? 하는 기분을 떨칠 수 없다. 4대강 사업을 하고자 한 최고책임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인가, 그걸 적극적으로 보좌했던 이들이나 실무책임자들은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그저 한 것인가, 인간이 아닌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했다는 것인가. 도대체 목적은 없고 합목적적 형식논리만 있는, 아니면 목적과 합목적성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정책이 시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그런 영혼도 없고 미래에 대





한 상상도 없이 그저 인류 역사가 해오던 바를 관행적으로 반복하던 그런 자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된 일이며, 그런 실정, 아니 실정 정도가 아니라 자연 전체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온 인민들에게 테러를 가한 그들 대부분이 아직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대강 사업으로 쌓인 녹조가 피부에 닿으면 곧 피부에 심각한 손상이 오고, 그 녹조 밑에서 가장 강력하고 우호적인 생존 조건을 얻는 큰빛이끼벌레를 소량이라도 먹으면 극심한 통증으로 하루 종일 뒹굴러야 하는데도, 4대강 사업은 결코 실패한 사업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삽질>은 2019년 5월 2일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6선 국회의원 김무성이 행한 연설을 틀어주면서 끝난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말한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 …… 다 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고. 이 장면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 상황을 견디어야 하는가. 그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조커> <경계선> <미안해요, 리카> <삽질>은 통제되지 않는 웃음과 벌름거리는 코, 리키의 반복되는 결단, 그리고 자연을 파괴한 자들의 손사래와 줄행랑을 통해서 우리를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데려다 놓는다. 지금과 같은 불평등 구조를 계속 견디며 악마가 탄생하고 복수의 화신들이 양산되고 매일매일 목숨 건 노동이 반복되고 자연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는 현장을 눈앞에서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이 지독하고 견고한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선택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만약 당신이 내가 한 선택과 같은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어느 한 순간도 견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잠시만 견뎌보자 하는 순간 우리가 선택한 그 길 자체가 끊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계속 견디다 보면 급기야는 견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파국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너무도 분명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2.

‘백한 번째 이력서와 첫 번째 출근길’·‘당신들의 천국’; 묵시록적 징후들 2

소설의 시대가 끝났다는 소리가 높다. 소설이 시대의 모순을 직시하고 정치적 상상과는 다른 상상으로 민중들을 위한 공동체를 도래시키는 아방가르드적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이리라. 또한 한때 소설이 했던 그 역할을 영상매체 등 다른 장르가 행하고 있고 그 결과 소설은 근대 이후 누려왔던 특권적 위치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할 터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해야 한다. 근대 초창기 소설은 중세에는 하층은 존재했던 시민들을 중심으로 민족 구성원 전체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묶어내는데, 그러니까 민족국가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근대 형성기가 아니더라도 소설의 사회적 역능은 대단했다. 소설은 그 출발부터가 하층은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여서 근대 형성기 이후에도 쓸모없는 실존으로 격하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고, 그 결과 소설은 우리 사회가 완성된 사회가 아니라 여전히 소외된 존재들이 다수 존재하는 사회이며 그러므로 소외된 존재들을 위한 사회적 개혁과 혁신을 위해 여전히 더 분발해야 함을 알려주는 반성적 거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한 시대를 결정하는 통치성의 원리가 시대의 모순을 은폐하고 치명적 증상들을 사회적 진화의 상징으로 왜곡할 때 소설은 통치성의 그 천재적인 은폐와 왜곡을 균열시키고 그 통치성의 논리에 가려 보이지 않은 모순과 증상들을 재현해 왔다. 비록 예전처럼 한 편의 소설이 당대의 사회구성원들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묶어내는 근대 초창기의 소설과 같은 위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렇게 소설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데도 소설은 여전히 씹어지고 있다. 여전히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맹렬하게 씹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저 위로는 노대가들의 활동이 끊이지 않고 중견 작가들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이전과는 전혀 낯선 문법과 혁신적인 이야기를 들고 새롭게 문학동네에 진입하고 있는 신예들도 많다. ‘쓸모없는 실존으로 격하된 존재들’의 고통과 불안이 여전하다는 말이리라. 아니, 이전보다도 ‘하층은 존재’들이 더욱 더 다수가 되고 있고 그들이 앓고 있는 증상은 가일층 치명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리라. 하여튼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는 세상 안에서 소설은 그 본분을 잃지 않고 상징질서에 의해 은폐, 왜곡된 ‘하층은 존재’들의 실존적 조건과 탈존의 가능성을 치밀하게 읽어내고 있는 중이다. 마치 또 한 차례의 ‘소설의 시대’를 만들어낼 기세다.

이렇게 소설판 전체가 소설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터에, 그중에서도 한국 소설판에 전혀 새로운 영역을 들고 등장하여 문학판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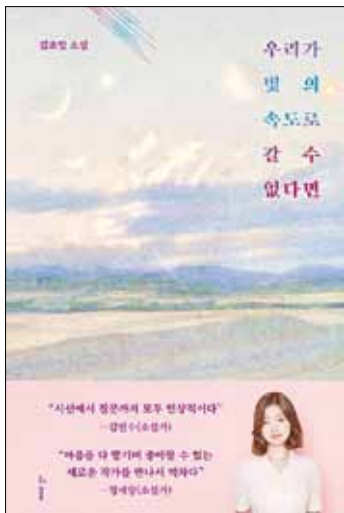
신예들이 있다. 바로 장류진과 김초엽이다.

먼저 “한국문학사에서 ‘회사소설’이라는 장르를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놓았다”(인아영)는 평가를 받은 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창비, 2019)은 소위 90년대생들의 실존형식을 중핵으로 삼는다. 그들은, 특히 그녀들은 하나같이 불안정하다. 그녀들은 백한 번째 이력서를 내서 첫 출근을 한다. 어렵게 얻은 직장이므로 안정감과 자부심을 느낄 만하건만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불안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녀들이 어렵게 들어온 직장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까닭이다. 언제 대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러므로 어떻게든 견디어야 한다는 결단은 그녀들의 일상적인 감각이다. 그래서 그녀들은 회사 대표가 그를 거슬리게 했다는 이유로 월급을 포인트로 지불해도 견디고, 같이 입사했는데 남자 직원보다 앞자리 숫자 하나가 차이가 나도 견딘다. 인생의 장기적인 계획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이런 계획을 세워볼 뿐이다.

연봉도 많이 올랐다. 2,663만원. 그러면 이제 세후 월 201만원. 월세 50, 관리비 7, 공과금 10, 인터넷 1, 핸드폰 요금이란 할부금 7, 남친은 없지만 혹시 모를 언젠가를 대비한 결혼자금용 적금 55, 그리고 이번에 취직 축하 겸 오랜만에 만난 학교 선배를 통해 가입한 환급형 보험과 실비보험이 12, 새 블라우스랑 구두, 치마, 바지 하나씩 해서 17, 마트에서 식재료랑 생활용품 이것저것 장 보면 7, 이렇게 쓰고 나면 남는 게 35, 앞으로는 교통비 포함 하루 만천원씩 쓰는 게 목표였다. (장류진의 「백한 번째 이력서와 첫 번째 출근길」의 일절)

장기계획이 불가능한 삶, 그런 까닭에 ‘소확행’을 강요당하는 삶, 상상하기 힘든 비인간적인 대우나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도 오로지 견뎌야 하는 삶. 장류진의 소설은 우리 시대 젊은 그녀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해놓는다. 그래서인지 장류진의 소설을 읽으면서는 <미안해요, 리카>를 보면서 느끼는 그 불안감을 같이 느끼게 된다. 그녀들이 결심하고 다짐할 때마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 희망을 징후를 볼 때마다 그녀들이 소모되고 소진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그녀로 대체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 이처럼 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은 우리 시대의 노동자들은 그/그녀들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어도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예외 없이 프레카리아트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프게 환기시킨다.

한국문학사의 가장 심각한 결여 지점으로 일컬어지는 SF 장르로 무장하여 한국문학사에 진입한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허블, 2019)은 그것만으로도 한국문학사의 특기할 만한 사건이라 할 만하다.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그만큼 한국문학사의 별종이자 돌연변이다. 이 돌연변이는 과학이 초고도로 발전한 미래의 삶을 집중적으로 그려낸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따르면 머지않아 인류는 원홀을 발견, 손쉽게 또 다른 우주로 진출하기도 하고, 사람의 기억과 감정을 데이터로 축적해 죽은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기도 하고, 아름답고 유능하며 질병이 없고 수명도 긴 ‘신인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완벽한 존재들이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지구 밖에 ‘마을’이라는 인공적인 유토피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초고도 최첨단 과학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실존형식의 근본적인 변화, 이것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류의 미래상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한 미래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살까.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실행할 기술을 갖추게 될 것이므로 그 미래에 인간 모두는 행복할까. 하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서 그려진 미래상은 현재 인류의 삶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하고 그중에서도 젠더적 차별은 특히 치명적이며 그래서 미래의 그/그녀들 역시 견디기 힘든 삶을 견디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아니 미래의 불평등 구조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그것, 감출 수 없는 현실이 된다. 가진 자인가 없는 자인가에 따라 외모에서부터 생존 기간, 그리고 주거 시대까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그려낸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통치성의 구조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선한 쪽으로 바꿀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환기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첨단 과학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최첨단 과학의 방향을 결정할 통치성의 구조를 바뀌어나가는 것이라는 것. 통치성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그 먼 미래에서도 오로지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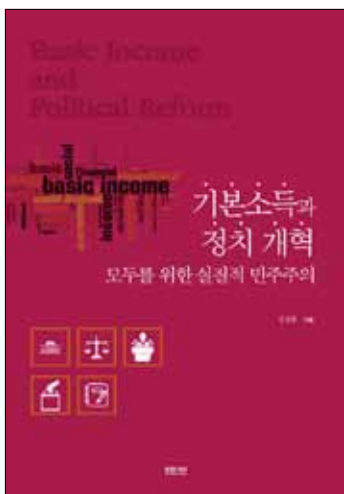
정치개혁의 원리로서의 기본소득과 ‘공동선 기본소득’의 잠재성;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에 대한 짧은 생각 몇.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장 냉정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열렬한 시선으로 읽어낸 6편의 작품을 읽고 봤다. 그런데, 아, 이게, 웬일. 세상을 전혀 다른 시선과 방법으로 읽어내고 있는 작품들이건만 이 작품들이 읽어낸 세계상은 거의 유사하다. 예컨대 이런 것. 현재 우리는 현존재 거의 대부분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그러니까 수많은 존재들이 이미 죽음을 향해 질주하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괴물이 되거나 자기가 행한 악을 즐기는 악마로 전락하고 있는 극한 상황

을 경과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거의 대부분의 현존재들이 복수의 화신이나 악마가 될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 모두가 ‘내가 조커다’를 외치며 잔혹한 복수를 펼치는 파국의 장소로 바뀔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지금 이대로여서는 안 된다는 것. 앞서 인용한 켄 로치의 표현법을 빌어 말하자면 “더 이상 견딜 수조차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서둘러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우리 시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은 여러 작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어두운 자화상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본소득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라도 떠올려야 한다고 말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기본소득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희망의 원리만이 이들 작품이 읽어내고 있는 세계상에서 출발한 정치적 상상인 때문이고, 기본소득이라는 패러다임만이 이들 작품이 진단한 사회적 증상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기본소득이라는 노선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이제 세상을 바꾸려는 모든 정치적 상상은 현재의 기본소득 운동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의 기본소득 운동이야말로 현실을 바꾸려는 모든 논의의 로도스이며 딛고 올라서야 할 ‘거인의 어깨’인 까닭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본소득이라는 희망의 원리가 지금의 세상을 바꿀 거의 유일한 희망의 원리인데, 여기에 또 기본소득이라는 패러다임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파국을 향해 치닫는 세상을 선순환의 나선형 운동으로 반전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책이 나와 주목된다. 강남훈의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진인진, 2019)가 그것이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은 이전에 출간된 『기본소득의 경제학』(박종철출판사, 2019)의 속편이다. 『기본소득의 경제학』이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와 모순의 기원인 극심한 경제 불평등 구조를 혁신할 정책적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제시하고, 기본소득이라는 거의 유일한 대안을 가로막는 편견과 장벽을 논리적으로 통계적으로 해체시키고 기본소득의 바람직성을 증명하는 한편 더 나아가 비임금노동, 공유부 등 개념을 동원하며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비판하는가 하면 그를 기초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다변화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입증한 책이라면,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은 기본소득을 입법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과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그냥 오지도 않고 기본소득 그 자체가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모순을 한순간에 해결하지도 않는다. 오려면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또 기본소득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을 선순환의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역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당연히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은 그 정치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과 치밀한 전술을 제시한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전략과 전술도 눈여겨볼 만하지만,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에서 보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책이 제시한 정치개혁의 원리이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은 정치개혁의 원리로 기본소득의 정신을 제시한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에 따르면 이 땅의 정치제도 역시 불평등, 불공정의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론 이 땅의 정치제도는 형식논리적으로 보자면 민주주의적이다. 그것도 너무나 민주주의적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회구성원들이라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한 표씩 주어진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정치제도는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그 불평등 구조는 더욱 더 교묘한 형태로 관철되고 있다고 해야 하리라.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자면 민주주의적이지만 이 땅의 정치제도는 가진 자들을 위한, 가진 자들에 의한, 가진 자들의 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가진 자들은 피선거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또한 선거권에 있어서도 한 표 이상의 영향력, 아니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정치제도 자체가 가진 자들의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까닭에 이 땅의 대다수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기본소득을 입법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을 제도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이 그 정치개혁의 원리로 기본소득 정신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땅의 소외된 대다수의 존재가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오로지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인간적인 활동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모두에게 모두의 자산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듯이,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위해 정치적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은 ‘주권자 정치배당’이라고 부른다. 즉 모든 주권자에게 동등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모든 주권자가 각자의 정치적 이념을 대변해주는 정당 혹은 정치인에게 이 정치자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은 이 ‘주권자 정치배당’이 시행되면 정치권은 주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정치권이 지금처럼 가진 자들에 의해 휘둘리는 대신 이 땅의 대다수의 소외된 존재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한다. 한마디로 ‘주권자 정치배당’이 현재의 민주주의의 탈을 쓴 금권정치를 넘어서서 이 땅에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도래하게 할 바로 그 통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은 ‘주권자 정치배당’ 혹은 ‘주권자 언론 배당’의 역사철학적 근거로 ‘공동부 기본소득’ 개념 외에 ‘공동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은 ‘공동부의 공동소유자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소득을 공동부 기본소득’이라고 하고, ‘참정권 때문에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바로 공동선 기본소득'이라고 하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질 때 인간 모두가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선 기본소득이 균등하게 지급되어야 하고, 주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정치인들이 유능하게 예산과 관료를 다룰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공동선 기본소득은 공동부 기본소득의 도입을 용이하게 만든다. 반대의 힘도 작용한다. 공동부 기본소득이 낮은 수준에서 실현된다면 공동선 기본소득에 대한 합의가 쉬워질 것이다.

공동선 기본소득은 주권자별로 정치적 자원을 균등하게 갖고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공동부 기본소득은 주권자별로 공동부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자원을 균등하게 나누어 갖고 경제를 하자는 것이다. 포용적 경제와 포용적 정치의 선순환 구조는 주기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자원을 균등하게 나눔으로써 만들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하나는 경제에 사용할 공동부 기본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에 사용할 공동선 기본소득이다.(강남훈,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의 일절)

이렇게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은 기존에 논의되던 '공동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공동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추가하는데, 이 '공동선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내겐 대단히 흥미롭게 다가온다. 어떻게 보면 '공동부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주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존을 위해 비인간적이고 강요된 노동 대신에 의미 있는 인간 활동을 하며 보다 자유롭게, 보다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는 추상적인 기대지평에 기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은 여기에 '공동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하나 덧붙여 '공동부 기본소득'과 '공동선 기본소득'을 동시에 구현하자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기본소득의 범위를 조금 확장해서 인간이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까지도 만들어내자는 것인 바, 여러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기본소득은 현재적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고 해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또 다른 냉엄한 구별짓기의 메커니즘은 작동할 개연성이 높다. 다시 말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이 주어진다고 해도 실질적인 자유와 실질적인 평등은 요원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도 절박하지만 기본소득 이후

의 정치개혁을 상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이 제안하고 있는 ‘공동선 기본소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가 아니라 망설여 지긴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공동부(혹은 공통부, 공유부)라는 개념이 기본소득이라는 패러다임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듯, ‘공동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역시 기본소득 운동에 있어 하나는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최근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냥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당연해 보인다.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파국적 상황을 해결할 거의 유일한 대안이 기본소득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올 것이고 또 저만치 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현실화되고 제도화될 경우 기본소득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변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늬만 기본소득인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진정한 기본소득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기본소득인지에 대한 질문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질문에 기초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 사회에 적합한 기본소득 방안을 발명해야 할 것이다. 복잡한 얘기 같지만 간단한 이야기다. 기본소득은 조만간 올 것이지만 그냥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며, 도래할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안길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적합한 기본소득 방안을 발명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때,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은 그에 충분히 값하는 구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방금 우리 앞에 기본소득을 한 단계 도약시킬 굳건한 디딤돌이 놓였다고. 그걸 딛고 뛰면 된다고. 멋지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기본소득인가 일자리보장인가

* 본고의 일부 내용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제작한 팟캐스트 이컷타 143회와 148회에서 소개된 바 있음을 밝힌다. 현대화페 이론을 주창하는 대표 논자들은 2018년 상반기에 일자리보장의 설계와 실행을 구체화된 형태로 제안하고 그것이 갖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도 제시한 바 있는데(Tcherneva, 2018; Wray, Dantas, Fullwiler, Tcherneva, and Kelton, 2018; Wray, Kelton, Tcherneva, Fullwiler, and Dantas, 2018), 이에 대한 상세한 평가는 별도의 과제로 남겨둔다.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1. 열며: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중 진정으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

‘때를 만난 아이디어’^{the idea whose time has come}라고 자처하는 두 가지 주요한 정책구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이다. 여기서 일자리보장^{job guarantee; JG}이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상을 말한다(Harvey, 2005; Tcherneva, 2003; 레이, 2017 등 다수).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일자리보장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판 파레이스, 판데르보흐트 2018, p. 111).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은 각각 자신이 우리 시대의 당면 문제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비자발적 실업, 불안정 비정규 노동 등에 적실히 대처하기 위한 더 나은 구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합해왔다.¹

본고는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중 무엇이 위에서 열거한 우리 시대의 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적합한지를 따진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자리보장의 개념, 수단과 목표를 소개하고, 일자리보장 제안의 두 가지 버전을 구분한다. 다음으로 일자리보장 제안의 두 가지 버전 중에서 주류라 할 수 있는 MMT^{Modern Money Theory} 또는 ^{Modern Monetary Theory}(현대화페이론)론자들의 기본소득 비판을 체르네바(Tcherneva, 2003)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기본소득과의 비교 맥락에서 이에 대해 반비판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일자리보장이 아니라 기본소득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1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일자리보장 지지자들의 첫 번째 주요 논쟁은 ‘Rutgers Journal of Law & Urban Policy 2(1)(Fall 2005)’의 특집논문들에서, 두 번째 주요 논쟁은 ‘Basic Income Studies 7(2)(December 2012)’의 특집논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일자리보장의 개념, 수단과 목표

위에서 정의했듯이, 일자리보장(job guarantee; JG)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상을 뜻한다(Harvey, 2005; Tcherneva, 2003; 레이, 2017 등 다수). 일자리보장은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에 빗대는 용어로서 ‘최종 고용자(employer of last resort: ELS)’,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완충재고’ 기능을 한다는 점에 착안한 용어로서 ‘완충재고고용(Buffer Stock Employment; BSE)’, 이 프로그램이 주로 공공서비스 영역에 집중된다는 점에 주목한 용어로서 ‘공공서비스고용(Public Service Employment; PSE)’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Tcherneva, 2003, 2018; Wray, Dantas, Fullwiler, Tcherneva, and Kelton, 2018; Wray, Kelton, Tcherneva, Fullwiler, and Dantas, 2018 등 다수).

일자리보장의 수단과 목표를 요약하자면, ‘최저임금(또는 생활임금) 수준에서 무한탄력적인 노동 수요(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공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과 일자리보장을 개념적으로 뚜렷이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보장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일자리보장은 민간 부문에서 노동인구를 모두 고용하지 못하여 생긴 일자리 갭(job gap)을 완전히 메울 만큼, 즉 노동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흡수할 만큼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충분히, 그것도 경기불황기뿐만 아니라 경기호황기까지 포함하여 항상적으로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완전고용 또는 강한 완전고용을 달성하겠다는 매우 야심찬 형태의 정책 구상이다. 따라서 일자리보장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나 공공사회서비스 확충, 공공인프라 확충,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일반에 대한 반대로 결코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3. 일자리보장 제안의 두 가지 버전

일자리보장 제안에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 하나는 미국 러트거스대학(Rutgers University)의 법학 교수인 필립 하비(Philip Harvey)의 제안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y Theory 또는 Modern Monetary Theory; MMT)을 주창한 학자들이 제안하는 일자리보장 제안이다. 둘 다 일자리 보장의 초기 주창자인 하이먼 민스키(Hyman Minsky)를 따르고 있다는 점,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할 의사가 있지만 현재 일자리를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부문(공공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에 관해서는 공통된다.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필립 하비(Harvey, 2005 등 다수)가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유사한 일자리에 지급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decent wage’, MMT론자들(Tcherneva, 2003; Wray, 2017 등 다수)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의 동시 달성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minimum wage’ 또는 기껏해야 생활임금(‘living wage’)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보다 일자리보장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필립 하비가 비용이 상대

적으로 적게 든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MMT론자들은 공공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부의 자원 조달에 관한 독특한 시각을 드러내면서 공공프로그램의 ‘비용’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대신 인플레이션 등의 면에서 일자리보장이 기본소득보다 더 우수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일자리보장 제안의 두 가지 버전 중에서 주류라 할 수 있는 MMT론자들의 기본소득 비판을 체르네바(Tchemeva, 2003)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4. MMT론자의 기본소득 비판 내용 소개

MMT론자들은 필립 하비와 같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식으로 기본소득을 비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MMT론자들은 자국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어떠한 정부도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발권력을 이용하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Tchemeva, 2003; 레이, 2017 등 다수). MMT론자들은 정부는 자국통화에 대한 유일한 발행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출^{spending}이 우선이고 과세^{taxation}는 지출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MMT론자들은 정부는 지출하기 전에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MMT론자들은 화폐는 국가의 창조물이며 정부는 정부가 발행한 화폐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과세한다고 본다. 국정화폐의 주요 기능은 정부가 지출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즉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으로 실물 재화 및 서비스가 이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곧 MMT론자들은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이 되었던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되었던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어떠한 ‘재정적’ 제약도 없다고 본다(물론 그들은 ‘정치적’ 제약은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MMT론자들은 기본소득과 비교해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①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은 화폐의 가치에 대한 닛^{anchor}을 제공한다. ②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은 보편적 소득지원 프로그램들보다 경기변동을 훨씬 더 잘 안정화시킨다. ③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은 물가 안정성을 높인다.

첫 번째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화폐의 가치에 대한 닛을 제공한다는 MMT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조세가 화폐를 추동한다는 관점^{taxes-drive-money approach}에서 보자면, 통화의 가치는 주어진 조세채무^{tax liability}를 지불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조세채무를 지불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requirement}이 없다. 따라서 통화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에서는 통화의 가치가 공공 부문 임금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조세채무가 동일한 수준이고 물가도 안정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종고용자 프로그램 참가자의 시간당 임금이 두 배로 상승한다면, 노동자들은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얻기 위해서 절반의 시간만 일해도 된다. 따라서 통화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반대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 참가자의 시간당 임금이 절반으로 하락한다면, 노동자들은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얻기 위해서 두 배의 시간 동안 일해야 한다. 따라서 통화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은 자국화폐의 가치에 대한 안정적인 기준점^{benchmark}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은 보편적 소득지원 프로그램들보다 경기변동을 훨씬 더 잘 안정

하시킨다는 MMT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공공 부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경기조정적으로 *countercyclically* 변동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기에는, 민간기업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데 해고된 사람들은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게 된다. 그 결과로, 정부지출은 자동적으로 증가하며, 필요한 경기부양을 제공한다. 반대로, 경기가 개선되고 민간 부문이 팽창하면, 노동자들이 공공 고용 풀에서 빠져나가며, 이로 인해 정부지출이 줄어들고 적자도 감소한다.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정부지출이 완전고용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수준에 있도록 보장하게끔 작동하는 강력한 자동 안정화 장치 *automatic stabilizer*로 기능한다.

기본소득은 만약 그것이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타기팅하거나 개인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식으로 작동한다면, 경기대응적 안정화 장치 *countercyclical stabilizer*로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 기본소득은 경기변동에 대한 안정화 효과를 갖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나 고용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은 물가안정성을 높이지만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다는 MMT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최종고용자 프로그램과 기본소득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요측 정부 프로그램들이라고 비판받는다. 하지만 하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저소득계층만을 타기팅하는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나 기본소득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위와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낳지 않을 것이다. 소득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은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은 그것의 실행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낳지 않으며 실제로는 물가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근거가 있다. 첫 번째는,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fixed price/floating quantity rule’(임금 수준은 고정시키고, 노동공급량은 일자리 갭 *job gap*에 따라 변동시킨다는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하나의 완충재고 프로그램 *bufferstock program*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공공고용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떠한 정부적지출도 항상 ‘정확한 *right*’ 수준에 위치할 것이라는 점이다.

먼저 ‘fixed price/floating quantity rule’에 따라 작동하는 완충재고 프로그램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아이디어는 노동을 완충재고 상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며, 어떠한 완충재고 상품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이 상품의 가격을 안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공공 부문 피고용인들에게 제공되는 임금은 외생적으로 고정되며 민간 부문의 임금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것은 민간 부문에서의 노동 수요가 증가할 때 임금은 상승하며 노동자들이 공공 부문 일자리로부터 빠져나온다는 것을 보장한다(완충재고가 “팔린다 *sold*”). 반대로, 민간 부문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때, 그들은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는다(완충재고가 “구입된다 *bought*”). 다른 말로 하자면, 완충재고의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이 있을 때 그 상품은 팔리며, 완충재고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힘이 작용할 경우 그 상품은 구입된다. 따라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은 공공 부문에서의 임금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물가에 대한 대항 압력 *countervailing pressure*과 강력한 경기대응적 기제 *counter-cyclical mechanism*를 제공한다.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은 ‘fixed price/floating quantity rule’에 의해 작동된다. 왜냐하면 완충재고의 가격(공공 부문 임금)은 고정되어 있고, 그 상품의 양(공공 부문 고용)은 변동하도록 허용되기 때문이다. 외생적인 공공 부문 임금은 완벽하게 안정적이며, 노동은 (다른 모든 종류의 상품의 생산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본상품 *basic commodity*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은 다른 모든 상품

가격에 대한 완벽한 기준점benchmark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 부문 임금은 특정한 경제에서 물가에 안정적인 닻anchor을 제공한다.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중요한 특징이 내장되어 있지만, 소득보장 제안들에서는 이에 비교가능한 대응물counterpart이 없다.

다음으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적자지출이 항상 정확한 수준에 위치할 것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자.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서 정부적자지출의 ‘정확한right’ 수준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최종고용자 프로그램 옹호자들에게서 그것은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의 경기대응적 설계countercyclical design는 또한 적자지출이 인플레이션적인 또는 디플레이션적인 압력에 대응할counteract 것임을 보장한다. 소득 보장 프로그램들에서는 그러한 대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은 총수요가 총공급이나 경제의 생산능력에 비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압력을 상쇄시키기 위한 열쇠는 소득과 지출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완전고용일 때의 산출물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정확히 소득과 지출을 부양하는 것이다.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은 설계상, 예산적자가 결코 너무 많거나 너무 작지 않게끔 보장한다. 정부지출은 실업이 제거 될 때까지 증가할 것이며, 그 지점에서 적자는 증가하기를 멈출 것이며, 이는 총수요가 총공급의 완전 고용 수준을 상회하지 않게끔 보장한다. 반대로, 만약 실업이 다시 증가한다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균형을 이루게끔 적자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동안정화 장치로 기능하는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의 특징은 지출이 너무 작을 때에는 완전고용 수준의 산출물이 도달할 때까지 증가하게끔 보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본소득 프로그램들은 물가변화에 대응하는 힘countervailing force을 작동시킬 수 없다.

이외에도, MMT론자들은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교육, 훈련, 재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인적자본 유지 및 개발 면에서 기본소득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공공서비스와 공공인프라를 향상시킴으로써 민간 부문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5. MMT론자들의 최종고용자 프로그램 구상 비판: 기본소득과의 비교를 겸하여

이 절에서는 최종고용자 프로그램과 기본소득을 다각도로 비교하면서, MMT론자들의 일자리보장 구상을 비판한다.

첫째, 엄격한 형태의 균형재정론을 비판한다는 점, 균형재정론에 입각한 긴축정책을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MMT론자들과 뜻을 함께 한다. 하지만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이 되었던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되었던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어떠한 ‘재정적’ 제약도 없다는 MMT론자들의 주장은 지나치거나 그릇된 것이다.

물론 특정 시점에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자원조달액수보다 클 수도 있지만, 특히나 막대한 액수의 지출인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과세를 통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특히나 막대한 액수의 지출인 경우에, 자원마련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에 수반되는 ‘정치적’ 제약은 상당할 수 있다. MMT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를 경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특정 프로그램 또는 사회 전체의 조세-급여 체계(tax and transfer system)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롯한 각종 효과 분석의 유용성마저 모두 폐기할 위험성이 있다.

MMT론자들은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을 실시하다가 설령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증세를 통해서 통화를 흡수하면 된다고는 주장하지만(예를 들어, 스테파니 켈튼Stephanie Kelton교수; 한광덕, 2019. 5. 7), 세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는 경기변동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정책변수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정치적' 제약은 상당할 수 있다.

둘째,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화폐의 가치에 대한 닛을 제공한다는 MMT론자들의 주장, 그리고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은 물가안정성을 높이지만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다는 MMT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조세채무를 지불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없으며 “따라서 통화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MMT론자들의 비판은 잘못되었다. MMT론자들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은 총수요가 총공급이나 경제의 생산능력에 비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때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최소소비수준 이하 액수의 기본소득 지급이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공급을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소소비수준 이하 액수의 기본소득 지급이 총공급이 경제의 생산능력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MMT론자들은 생계수준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사람들의 노동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로 인해 경제 전체의 생산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부당전제의 오류이다.

다음으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에서는 통화의 가치가 공공 부문 임금과 연결되므로 이것이 사회 전체의 물가에 대한 일종의 닛(anchor) 내지는 기준점(benchmark)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MMT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fixed price/floating quantity rule’에 따르면, 최종고용자 프로그램 부문에서 흡수해야 하는 노동의 양은 민간 부문 및 기존 공공 부문의 일자리 현황과 경기변동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만약 최종고용자 프로그램 부문에서 흡수해야 하는 노동의 양이 매우 작을 경우, 그것이 전체 경제의 고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을 것이고, 따라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 부문에서의 임금 수준이 사회 전체의 물가수준은커녕 사회 전체의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조차도 미미할 것이다. 2) 만약 최종고용자 프로그램 부문에서 흡수해야 하는 노동의 양이 매우 클 경우, 그것이 전체 경제의 고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겠지만, 이 경우에는 최종고용자 프로그램 부문에서 수행되는 노동의 질과 노동생산성이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당 임금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에서 수행되는 노동의 질과 생산성이 형편없을 경우(실제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에서 수행되는 노동의 질과 생산성이 형편없을 확률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에서 흡수해야 할 노동력 풀이 커질수록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임), 시간당 임금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질적 측면까지 고려된 노동공급은 급감하고 총공급 역시도 급감하여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 즉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 동시에 발생할 위험이 있다. 최저임금 내지 생활임금 수준에서 시간당 임금을 고정시킴으로써 물가안정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성격, 즉 노동시간 동안 노

동자의 노동력을 얼마만큼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의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된다는 점을 전적으로 도외시한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buffer stock employment’에서 노동(력)이라는 완충재고 상품은 여타의 완충재고 상품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다). 실증적으로 보더라도, 물가 또는 임금과 관련하여 닷(anchor)과 기준점(benchmark)이 있으면 또는 더 많이 있을수록 물가안정성 또는 임금안정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들의 물가 및 임금 상승률보다 낮고 더 안정적이라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은 보편적 소득지원 프로그램들보다 경기변동을 훨씬 더 잘 안정화시킨다는 MMT론자들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적이지 않다.

통상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를 비교하는 면에서 중요한 이슈를 이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책‘시차’의 문제이다. 정책시차란 “경제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채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르는 시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 정책 실행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시차가 짧을수록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좋은 정책이다. 정책을 집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측면에서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재정정책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지만, 통화정책은 매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의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책 실행 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어렵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난다”(한진수, 2009. 11. 4).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보편적 소득지원 프로그램들보다 경기변동을 훨씬 더 잘 안정화시킨다는 MMT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정책시차”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물론 MMT론자들은 자신들의 구상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합한 것이므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에서 정책시차의 문제는 별로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갖는 행정적 복잡성 자체가 막대한 행정부담과 행정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노동의사도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과정, 2) 그들 각자에게 제안할 구체적인 일자리를 매칭하는 과정, 3) 만약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 재훈련 등이 필요할 경우 그것을 연결시키는 과정 등은 모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기 상황과 일자리 현황은 이미 변화했을 것이다.

설령 정책시차 문제가 큰 이슈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민간 부문과 기존 공공 부문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또는 ‘않아야 한다’는 MMT론자들이 갖고 있는 전제 자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MMT론자들이 ‘않아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을 경우 이론상으로 in theory 그리고 문서상으로 on paper 정합적인 자신들의 이론체계가 현실에서 들어맞지 않고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MMT론자들이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는 주로 공공서비스와 공공인프라 분야에서 창출될 것인데, 현실의 경제와 사회는 ‘폐쇄체계’가 아니라 ‘개방체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민간 부문과 기존 공공 부문과 경쟁할 것이고, ‘일자리’에 국한하더라도 확실히 경쟁할 것이다. 만약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민간 부문과 기존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조금 또는 상당히 구축된다면, MMT론자들이 옹호하는 ‘완전고용’을 실제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민간 부문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MMT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은 오히려 민간 부문의 경제를 둔화시키거나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MMT론자들이 말하는 ‘fixed price/floating quantity rule’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경제가 노동시간, 고용형태, 노동의 안정성/불안정성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단일하거나 비교적 균질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경제는 노동시간, 고용형태 등 여러 면에서 복잡다기하다. 농업의 시간, 산업의 시간에 이은 제3의 시간(영시간 계약² zero hour contracts과 다양한 형태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을 떠올려볼 것)²이 점점 더 지배하게 될 21세기 경제(스탠딩, 2018, pp. 192-193, 223-224)에서는 ‘전일제 노동’을 보장받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그러므로 유사한 직종의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부문으로의 이직 현상은 동일한 시간당 임금률에서조차도 상당할 수 있다. 이는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에서 최저임금 내지 생활임금으로 고정되어 설정된 시간당 임금을 하에서, 호황일 경우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에서 민간 부문으로의 노동 유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MMT론자들의 가정이 불안정노동이 만연한 현실의 경제에서는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호황, 불황과 관계없이, 유사한 직종의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부문으로의 이직 현상은 동일한 시간당 임금률에서조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MT론자들은 경기변동에 따라 민간일자리 수가 등락하는 ‘순환’적 측면에만 주목할 뿐, “기술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고 있다(이건민, 2017, p. 105). 그들은 “현재의 실업의 성격이 구조적 기술적이라는 점”을 도외시하고 있다. MMT론자들은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주장한 밀튼 프리드먼을 비롯한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에 빗대어 “모든 실업은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하는데(레이, 2017), 이는 오늘날의 실업 문제에 대한 MMT론자들의 순진무구한 시각을 잘 드러낸다.

MMT론자들은 ‘조세형 기본소득’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조세형 기본소득’만으로 국한하더라도, 기본소득의 지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지할 수 있는 소득바닥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안정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경기상황에 관계없이 생필품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모두에게 부여함으로써 소비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조세형 기본소득’은 시장소득을 많이 벌 경우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시장소득을 적게 벌 경우에는 기본소득이 중요한 소득원천으로서 지지해주기 때문에, 경기변화에 따른 또 한 한 개인의 소득변화에 따른 소득변동성을 줄이고 이에 따라 소비변동성도 줄임으로써 경기변동의 진폭 자체를 줄이는 기제를 작동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기본소득에는 ‘조세형 기본소득’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최근 주목하

2 “21세기는 이른바 ‘제3의 시간’이 지배할 것이다. 여기서 ‘일’과 ‘노동’ 활동의 경계는 흐려지고 공식 작업장의 경계와 정해진 노동시간의 경계도 흐려질 것이다. 이렇게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에 노동의 측정도 점차 자의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일부분을 회사, 직업소개소, 노동브로커들로부터 지불받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에게 (지불받는) 노동에 대한 (지불받지 못하는) 일의 비율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불받지 못하는 일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실제로 매우 확장된 형태의 착취를 통해 지대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런 사태는 기본소득을 다른 측면에서 정당화한다. 기본소득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띠는 일에 대해 보상하고자 모두에게 지급되며, 이득을 보는 개인 기업의 지대소득에서 재원을 마련한다. 앞서 말한 착취에 의도가 없을지 모른다. 다만 제3의 시간에 수반되는 ‘노동을 위한 일’을 모두 측정하고 적절하게 보수를 주는 것이 불가능할 뿐이다”(스탠딩, 2018, p. 193).

고 있는 구상으로서 화폐의 민주화를 동반한 기본소득 지급방안이 존재한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일본의 경제학자 이노우에(2019)는 가이 스탠딩(2018)이 제안한 안정화 급여(stabilization grant) 구상,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적은 액수로, 경기가 불황일 때는 많은 액수로 지급됨으로써 경기안정에 기여하는 변동형 기본소득 구상을 더욱 정교화한 바 있다. 그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고정 기본소득’, 화폐발행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변동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면서, 고정 기본소득과 변동 기본소득으로 구성된 ‘이중 구조의 기본소득’을 제안한다(pp. 90-93). 이 중에서,

“변동 기본소득은 스탠딩이 말하는 안정화 급여 보조금과 유사하다. 단, 내가 말하는 변동 기본소득은 화폐발행 이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표현을 달리하면 헬리콥터 머니를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이다. ...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 물가상승률보다 낮으면 국채의 매입액수를 늘리고, 높으면 매입액수를 줄이는 것이다. ... 정부는 매입액수를 국민의 숫자로 나눠서 빠짐없이 변동 기본소득으로서 지급한다. 그러려면 화폐발행 이익을 군비증강과 도로건설 같은 다른 용도로 허비하지 않도록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 국채의 매입액수는 철저히 중앙은행이 결정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라서 변동 기본소득의 액수는 저절로 정해진다. 결국은 중앙은행이 변동 기본소득의 액수를 변경하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지킬 수 있다. ... 나는 이러한 변동 기본소득에 따른 경기통제가 거시경제정책의 주축으로서 기존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격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 화폐제도의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pp. 91-92).

궁극적으로는, 이노우에 교수는 ‘100퍼센트 지급준비제도’(100퍼센트 완전지급준비제도)로의 전환까지도 요청하고 있다(pp. 124-129). 이러한 형태의 기본소득은 화폐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경기변동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적시에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과정과 절차를 필요로 하는, 그리하여 정책시차를 수반하는 최종고용자 프로그램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넷째, 정부적자지출의 적정 수준과 인적 자본 개발 관련한 MMT론자들의 주장에도 문제가 많다.

현실에서는 정부적자지출을 일부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대체로 기본소득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정부적자지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누진적인 소득세제로의 개편과 동반한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물론 생태세, 토지보유세 등에 기반 한 기본소득 모델, 공통부기금에 기초한 기본소득 모델, 화폐제도 개혁을 동반한 기본소득 모델 등도 존재한다). 한편으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적자지출이 항상 정확한 수준에 위치할 것이라는 MMT론자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위에서 ‘fixed price/floating quantity rule’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충분히 논의되었다. 오늘날의 실업 문제가 순환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기술적 실업의 성격이 강하고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완전고용을 달성하려는 목적의)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정부적자지출의 수준은 계속해서 증가해야 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실업이 완전히 제거되지도 않을 것이다. 민간 부문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공서비스 및 공공인프라의 개발이 왜 기존의 공공 부문에서 담당하지 않고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에서 담당해야 하는가도 의문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fixed price/floating quantity rule’에 입각한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주장이 허구적이라면 말이다.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교육, 훈련, 재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하긴 하지만, 애초에 최종고용자 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offer 일자리 자체가 각 사람의 선호, 숙련도 등에 적합한 것인지 자체가 크게 의문시된다. 만약 각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일자리라면(실제로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한 교육, 훈련, 재훈련 프로그램은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클 것이다. 반면에

“기본소득이 있으면 누구든 시간제로 일하거나 일을 쉴 수도 있다. 이를 통해서 더 나은 기술을 획득하고, 자기에게 더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휴식이 절실한 이들은 그냥 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숙련된 노동자가 은퇴 연령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소진’되거나, 그가 지닌 기술이 퇴물이 되는 위험을 줄여주게 된다. 교육 시스템을 평생 교육의 방향으로 재정립한다면, 좀더 탄력적이고 느긋한 노동시장이 젊은 학생들과 경력직 노동자들을 칼같이 구별하는 노동시장보다 훨씬 더 21세기에 걸맞은 인적 자본 개발이다. ...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현재 노동 인구의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인적 자본 과도 관련되어 있다. 가구 소득을 좀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다른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기본 소득 또한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실업 함정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면, 어려서부터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탓에 노동 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아동들의 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이 있으면 부모들도 시간제 직업 선택을 덜 두려워하게 되고, 한결 수월하게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을 크게 필요로 할 때 좀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된다. ... 일자리, 교육, 돌봄, 자원봉사 등의 여러 활동 사이를 쉽게 이동하는 자유를,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 기본소득이 제공하는 더 큰 경제적 안전과 바람직한 형태의 탄력성 확장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인 것이다”(판 파레이스, 판데르보흐트, 2018, pp. 63-65).

6. 나가며: 진정으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일자리보장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다

끝으로 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이 일자리보장보다 우월한 이유, 향후 전망 등을 종합 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fixed price/floating quantity rule’에 따를 경우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경기변동 상으로 경기침체 국면인지 공황 국면인지 호황 국면인지 등에 상관없이, 또한 자동화 추세의 진행과도 관계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손쉽게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여러 지점들(민간 부문과 기존 공공 부문과의 경쟁 대체 관계,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유사 직종의 민간 부문과 기존 공공 부문으

로부터의 노동인구의 이동 가능성, 행정 부담 및 비용과 모니터링 문제, 자동화 추세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일자리보장론자들의 약속은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동안은 일자리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일자리 자체에 본질적 가치, 다양한 비화폐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자리보장론자들이 아메리코AmeriCorps와 같은 현존하는 시민서비스 프로그램 civic service program(Wray, 1999; 2000), 현존하는 공공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public service employment program(Wray, Dantas, Fullwiler, Tcherneva' and Kelton, 2018; Wray, Kelton, Tcherneva, Fullwiler' and Dantas, 2018)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참여소득과 결합하는 방식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점(Tcherneva and Wray, 2005; Tcherneva, 2007)을 고려해볼 때, 실제 시행 및 그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자리보장론을 현실화하라는 요구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일자리보장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셋째,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일자리보장(최종고용자) 프로그램이 'workfare' 프로그램이 아니라 'fair work'(경기침체, 공황, 자동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실업자가 된 'deserving' poor를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을 포함함) 프로그램이며, 강제노동과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fair work'를 가장한 'workfare', 노동의 권리 보장을 가장한 강제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완충재고 노동자들은 '산업예비군(실업자)'의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가짜 일자리 bogus job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Sawyer, 2003).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전일제노동의 전면화'라고 하는 헛된 약속이 아니라, 불안정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고 노동 및 사회 보호 수준을 높이며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기본소득이 요청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이룬다.

넷째, 일자리보장 구상은 '노동능력이 있는 자'와 '노동능력이 없는 자', '자격(가치) 없는 빈민 undeserving poor'과 '자격(가치) 있는 빈민 deserving poor'이라는 허위의 구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승인하고 강화한다는 문제를 지닌다. 반면 기본소득은 이러한 허위의 구분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각종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개인(특히나 사회취약계층)의 자유, 기회, 선택, 역량 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다섯째, 근본적으로 일자리보장 구상의 근저에는 '전일제 완전고용'에 대한 집착이 자리하고 있으며, 일자리보장론자들의 '전일제 완전고용'에 대한 집착(노동주의에 대한 집착이자, 부분적으로는 경제성장주의, 생산주의에 대한 집착)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우리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현실부합성과 실천적합성을 담보한 진정으로 해방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대 추구 행위의 강화와 불평등 심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일자리보장론자들이 주장하는 형태의 'fair work'가 아니라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fair share'

이고, ‘workfare’가 아니라 ‘commonfare’이다.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최)상위 소득자 및 자산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득과 부를 벌어들이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침묵하는 대신에,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보장 정책이라고 하는 강제적 성격이 강하고 가부장주의적인 개입을 강요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자리보장은 오늘날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정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의 자유를 제약하고 침해한다는 점에서 해방적인 정책도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창출된 부를 (일정 정도) 공유하는 시스템인 기본소득은 오늘날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특히나 사회취약계층의 기회와 자유를 확장시키는 해방적인 정책이다.

일급제, 생태, 젠더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도 기본소득이 일자리보장보다 우월하다.

일자리보장론자들은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이 생태 환경 보전 사업, 그린 뉴딜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자리보장이 기본소득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Tcherneva, 2007), 일자리보장은 생태 환경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일자리 창출은 거의 필연적으로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생태 환경 보전 사업, 그린 뉴딜 등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사후적으로 그것도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조치일 뿐이다. 반면 기본소득은 “빈곤 문제를 경제성장과 개발로 대처하고자 하는 성장주의와 개발주의의 압력을 유의미하게 낮춤으로써 생태적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생태세와 생태배당을 결합한 구체적인 정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상황을 이전보다 개선시키면서도 이들의 에너지 사용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한다”(이건민, 2018. 9. 20). 당연한 말이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이 에너지전환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책을 가로막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떠한 형태의 기본소득(기본소득 정책패키지)이냐에 따라 그 정도는 매우 상이할 수 있겠지만, 경제성장주의, 생산주의, 노동주의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오히려 생태적 전환에 친화적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급박한 생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태적 전환을 명시적으로 지향하면서 이를 촉발하는 형태로 기본소득을 도입 배치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일자리도(그것이 아무리 저임금의, 낮은 질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일자리라 하더라도) 모든 형태의 복지보다(그것이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관계없이) 우선시되고 우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자’와 ‘노동능력이 없는 자’, ‘자격(가치) 없는 빈민(undeserving poor)’과 ‘자격(가치) 있는 빈민(deserving poor)’이라는 허위의 구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승인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 일자리보장론은 젠더평등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젠더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상당한 규모의 노동시간 감축, 아동, 노인 돌봄 영역 등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확대, 젠더평등 지향적인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마련 및 조직문화 개선 등과 동반될 경우, 기본소득은 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등에서의 젠더평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생애주기상의 특정 시점에서 각 개인의 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노동시간 배분이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측면을 줄이고, 각자의 형편과 선호에 따라 노동시간 배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시킨다”(이건민, 2018. 9. 20).

종합하자면, “빈곤과 불평등을 가장 효율적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리얼 유토피아’로의 ‘거대한 전환’을 추동할 수 있는, 진정으로 다른 사회를 가져올 수 있는 큰 정책”은 일자리보장이 아니라 바로 “기본소득”이다(이건민, 2017, p. 112). 기본소득은 “자본과 노동 중에서 자본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자본주의적 기업과 노동자 소유 기업 중에서 자본주의적 기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노동과 활동 중에서 노동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생산과 재생산 중에서 생산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성장과 복지 중에서 성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개발/발전과 생태/환경 중에서 개발/발전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기존의 사회적 기울기 *social gradient*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이건민, 2019, pp. 3-4).

참고문헌

- 레이, L. 랜덜. (2017).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홍기빈 역). 서울: 책담. (원서는 2015)
- 스탠딩, 가이. (2018).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효상 역). 파주: 창비. (원서는 2017)
- 이건민. (2017). ‘고용크레딧 거래제도’의 문제점: 강두용의 구상에 대한 비판. 녹색평론, 156, 102-112.
- 이건민. (2018. 9. 20). [대전환의 밑그림 - 녹색전환연구소 5주년 기념 기획연재] ③ 삶 전환의 열쇳말, 기본소득. 프레시안. [2019년 10월 4일 최종접속]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11429>
- 이건민. (2019).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코드와 흐름의 잉여가치”에 대한 토론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10월 26일]
<https://alternative.house/wp-content/uploads/2019/10/191026-session6-discussion-Gunmin-Yi.pdf>
- 이노우에, 모모히로. (2019). 모두를 위한 분배: AI 시대의 기본소득. (김소운 역). 파주: 여문책. (원서는 2018)
- 판 파레이스, 필리프, 야니크 판데르보흐르. (2018).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홍기빈 역). 서울: 흐름출판. (원서는 2017)
- 한광덕. (2019. 5. 7). “완전고용 수단” “지속 불가능”... ‘현대통화이론’ 논쟁 후끈.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2974.html [2019년 10월 4일 최종접속]
- 한진수. (2009. 11. 4). [click 경제교육]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1042 [2019년 9월 27일 최종접속]
- Harvey, P. (2003). The Right to Work and Basic Income Guarantees. Paper presented at the 2nd Congress of the USBIG Network. New York City. [February 2003]
- Harvey, P. (2005). Right to Work and Basic Income Guarantees: Competing or Complementary Goals. Rutgers Journal of Law & Urban Policy, 2(1), 8-63.
- Sawyer, M. (2003). Employer of Last Resort: Could It Deliver Full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Journal of Economic Issues, 37(4), 881-907.
- Tcherneva, P. R., & Wray, L. R. (2005). Common Goals-Different Solutions: Can Basic Income and Job Guarantees Deliver Their Own Promises. Rutgers Journal of Law & Urban Policy, 2(1), 125-166.
- Tcherneva, P. R. (2003). Job or Income Guarantee?. C-FEPS Working Paper, No. 29. Center for Full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August 2003]
- Tcherneva, P. R. (2007). What Are the Relative Macroeconomic Merits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Direct Job Creation and Basic Income Guarantees?. Levy Working Paper, No. 517.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October 2007]
- Tcherneva, P. R. (2018). The Job Guarantee: Design, Jobs, and Implementation. Levy Working Paper No. 902.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April 2018]
- Wray, L. R., Dantas, F., Fullwiler, S., Tcherneva, P. R., & Kelton, S. A. (2018). Public Service Employment: A Path to Full

Employment. Research Project Report. New York: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April 2018]

Wray, L. R., Kelton, S. A., Tcherneva, P. R., Fullwiler, S., & Dantas, F. (2018). Guaranteed Jobs through a Public Service Employment Program. Policy Note, No. 18-2.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Wray, L. R. (1999). Public Service Employment-Assured Jobs Program: Further Considerations. *Journal of Economic Issues*, 33(2), 483-490.

Wray, L. R. (2000). The Employer of Last Resort Approach to Full Employment. C-FEPS Working Paper, No. 9. Center for Full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July 2000]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

백승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편집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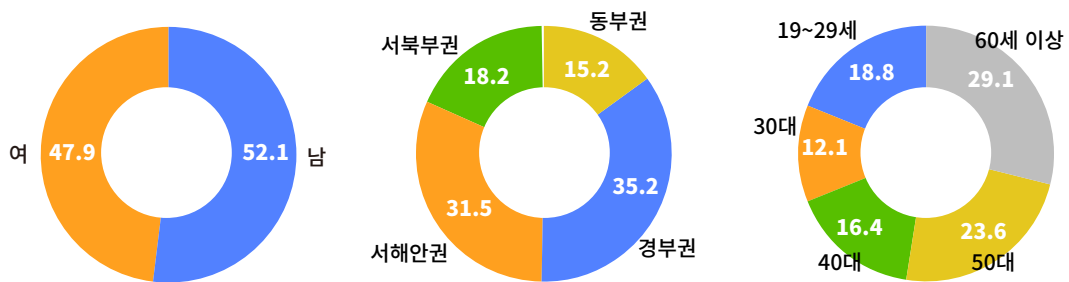
2019년 8월 31일에서 9월 1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가 진행되었다.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는 경기도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여 ‘직접민주주의’ 정책 결정 과정을 구현하고, 전문가 발표와 분임 토론 등 속의 과정을 거쳐 여론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 공론화 조사는 제안된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 확대와 합의 및 정책대안 도출이 목적이며, ‘열린 토의 방식’을 지향하고 참여자의 합의에 기반 한 정책 권고와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의 성찰적 판단이 가미될 수 있는 공론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론화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2019년 5월에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론화 의제 및 모델을 확정하였다. 경기도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의제는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이었으며, 세부적으로 4세션으로 구성되었다(<표 1>).

<표 1> 2019년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의제

구분	내용
의제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
1세션	우리 삶의 현재와 미래
2-1 세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2-2 세션	기본소득의 필요성, 대상, 효과
3 세션	기본소득 재원
4세션	기본소득 실행방안

다음으로 2019년 7월, 1차로 2,549명에 대한 1차 여론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1차 조사 표본 중 선정된 165명의 숙의토론회 참석 도민참여단 165명이 10일 동안 사전에 숙의 자료집을 학습하였다. 도민참여단 165명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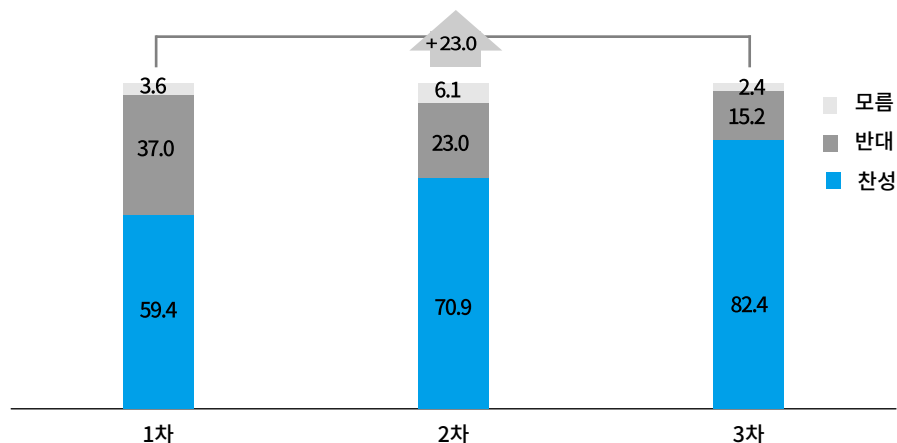


세 번째로 도민참여단 165명을 대상으로 8월 31일 숙의토론회 시작 전에 2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후 <표 1>의 의제들에 대해 전문가발표, 분임토론(약 8-9명으로 구성된 20개 분임 조) 등 숙의과정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네 번째로 9월 1일 4세션 종료 후 1인당 총 5개의 표가 있다고 전제하고 도정정책에 대한 모바일 다중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의제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한다면,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준비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였다. 마지막으로 숙의토론회 종료 시에 도민참여단 165명 전체를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론화 조사 체계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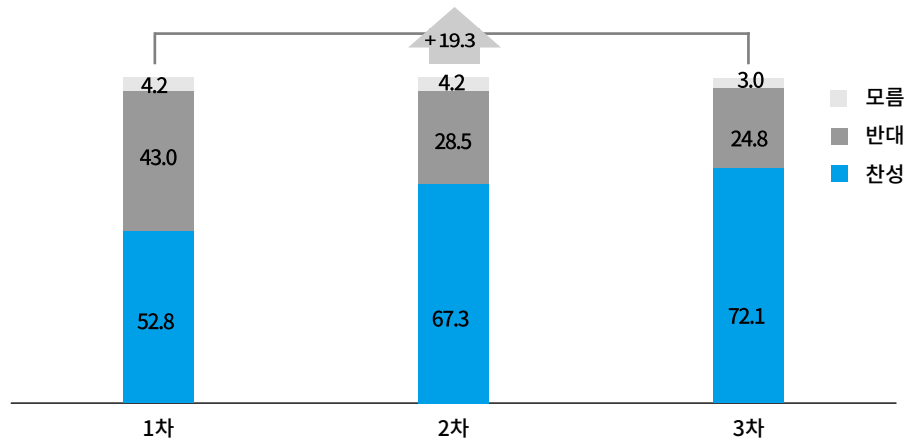
공론화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재원이 현재보다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기본소득 재정 확보를 위한 토지세 증세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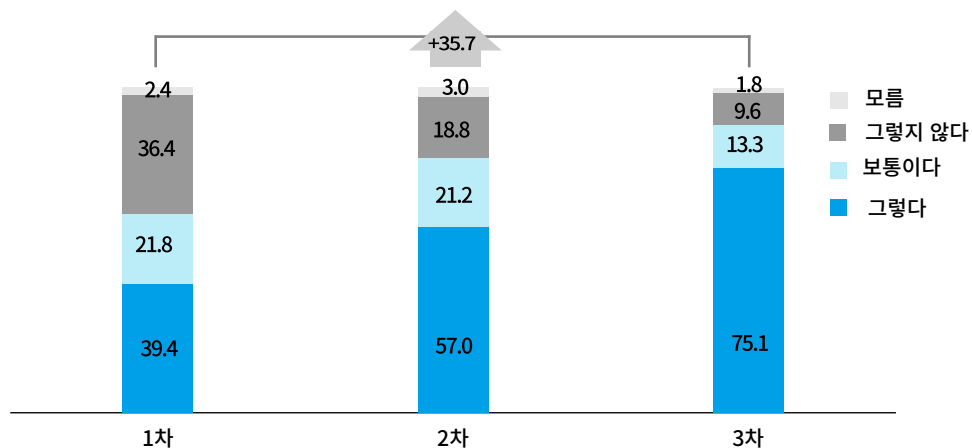
첫째, 토지세 증세에 대해 대해서는 숙의토론 이후에 찬성 비율이 23% 포인트 증가하였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재원이 현재보다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기본소득 재정 확보를 위한 소득세 증세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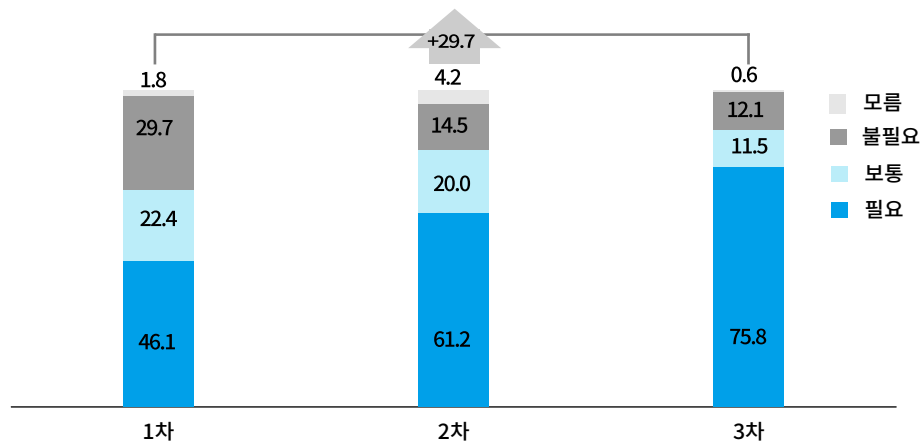
둘째, 소득세 증세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19.3% 포인트 증가하였다.

만일 기본소득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귀하는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습니까?



셋째, 추가세금 납부의향은 35.7% 포인트 증가하였다.

귀하는 앞의 기본소득의 개념, 긍정적·부정적 측면, 재원마련 등의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29.7% 포인트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1차 조사 이후에 진행된 숙의자료집 학습, 2차 조사 이후의 숙의토론 과정에서 토지세, 소득세 및 추가적인 세금 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20-35% 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놀랍다. 단순히 찬반 의견만 묻는 기존의 여론조사와 달리 공론화 조사를 통한 숙의과정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세금납부 의사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숙의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기본소득 정책의 정당성과 의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숙의과정을 통해 의견을 바꾼 참여자들은 의견이 변화한 이유에 대해 “숙의토론과정에서 기본소득 개념 및 장점과 우려되는 점을 논의하면서,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장점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졌다”, “기본소득 효과에 대해서 특히 삶의 여유증가 및 삶의 질 향상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등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물론 “기본소득제가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제도이고 그 효과성에 공감하지만, 재원확보방안, 조세저항,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그리고 도민참여단은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한다면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내용으로 첫째, 세출/세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20.6%), 둘째,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수행(17.9%), 셋째, 기본소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실시(16.8%), 다양하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15.9%)의 순으로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기본소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 조사 과정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공론화 과정은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의 이해도를 높여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요소를 해소해줌으로써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한국기본소득 포럼 “우리 사회의 현실과 기본소득”

이관형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한국기본소득포럼은 기본소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지, 기본소득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주제로 말할 수 있는지, 기본소득으로 얼마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자리이다. 이 자리는 기본소득이 '때를 만난 아이디어'를 넘어 현실의 정책으로, 미래를 가리키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연단이다. 이를 위해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대회 시작을 알리는 김주온 기본소득청'소'년 네트워크 대표



본 행사 전, 자리에 모인 청중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고 있는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원재 LAB2020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조금 서두른다. 9시 30경 포럼장소인 ‘동교동 청년문화 공간 JU’ 5층 홀에 도착한다. 포럼 준비로 벌써부터 부산하게 움직인 듯하다. 준비는 이미 끝난 것 같다. 책상, 의자 나르는 일을 잠시 돕는다. 10시가 조금 지나자 기본소득청‘소’년 네트워크 김주온*의 사회로 이틀 동안 이어질 포럼의 막이 오른다.

그동안 “한국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해온다. 올해부터는 이름을 “한국기본소득 포럼”으로 바꾼다. ‘기본소득’은 이미 “학술”의 영역을 넘어선다. 한국사회의 변혁전망과 결부된 “운동”으로 고양된다. 행사명이 바뀐 데는 이런 현실인식이 자리한다.

“포럼”은 17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총 8개 세션, 23개의 발표로 구성된다. 연인원 250여 명이 참여하여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 사회정치적 운동 현황 등을 공유한다. 5개 언론사가 후원하고 방송사에서도 취재에 나선다.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와 관심이 뜨겁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가 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강남훈*은 전날 있었던 민주당토론에서 앤드루 양이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환영사를 이어간다. 양은 트럼프의 당선 이유로 러스트 벨트를 중심으로 4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음을 꼽았다고 한다. 또한 환경위기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면서 지구온난화로 물에 잠길 뉴올리언스 등 미국 저지대에 대한 이주계획과 탄소배당 정책 등을 밝혔다고 한다.

축사에 나선 조희연*은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퇴조하고 있으나 한국만은 촛불혁명을 통해 오히려 고양되고 있다고 말한다. 국민들의 평등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 축사자인 이원재*는 기본소득 운동과 관련한 자신의 소회를 밝힌다. 그동안 김이 나지 않는 포트가 끓기를 기다리는 심정이었는데, 이제 끓는 소리가 나는 듯하다고.



세션 1. 기본소득의 자원마련(왼쪽) 세션 2. 플랫폼자본주의와 기본소득(오른쪽)



세션3. 기후위기시대의 기본소득(왼쪽) 세션 4. 지방자치단체와 기본소득(오른쪽)

세션1은 ‘기본소득의 자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신종화*가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곽노완*은 커먼즈(공동부)와 공공재를 개념구분하고, 커먼즈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음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을 공유지의 희극으로 되돌리자고 주장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남기업*은 기본소득의 자원과 복지 재원을 분리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천연물 불로소득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인공물 불로소득은 복지의 재원으로 각각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우파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 R. Nozick의 소유권 이론 원칙인 취득의 원칙, 이전의 원칙, 교정의 원칙이 복지 재원과 관련한 정당성의 이론적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독특한 해석을 내놓는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원재*는 최근 내놓은 국민기본소득제를 소개한다. 새로운 세제가 아니라 기존 세제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당장 실시 가능한 기본소득제를 내놓음으로써 눈길을 끈다.

세션2는 ‘플랫폼자본주의와 기본소득’이다. 김승연*이 진행을 맡는다. 첫 발표를 맡은 금민*은 빅데이터 혹은 플랫폼으로 상징되는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데이터가 공통부 common wealth이며,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해야 함을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주장한다.

이다혜*는 19세기 말에 시작되어, 20세기 초중반에 형성된 산업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현존 노동법의 ‘근로자(노동자)’ 개념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나 이미 고전적인 의미의 ‘근로자(노동자)’ 개념에서 벗어나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을 포함시키려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근로자 -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소득자 - 자본소득자의 구분이 보다 현실적이며, 자본소득



포럼 현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

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소득자의 소득을 보완하는 기본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식론적 편견이 아니냐고 되묻는다.

세션2의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강남훈*은 인공지능 가치의 공정한 분배방식을 제시한다. 새플리 가치에 따른 분배방식에 의하면 플랫폼 기업의 기여분과 데이터 제공자인 다중의 기여는 각각 1/2에 수렴한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분배되는 것이 공정하다.

세션3은 ‘기후위기시대의 기본소득’ 제하의 라운드 테이블이다. 백희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첫 발표자인 이 유진은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의 현실임을 지적한다. 인류가 기후위기나 환경재앙을 피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는 도리밖에 없으며 그 방법으로 그린 뉴딜에 바탕을 둔 기본소득제도의 시행을 제안한다.

이상헌*은 한국사회의 특징을 ‘피난사회’로 규정한다. 질서와 원칙보다는 이익 추구하고 목숨 보전에 여념이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형 발전프로젝트는 개

발 비용은 사회화시키고 개발이익은 사유화시켰다고 비판한다. 그는 한국형 그린 뉴딜 모델을 만들어 추진함으로써 환경위기에 대처함은 물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강상구*는 생태적 이동(걷기, 자전거타기, 대중교통 이용)시민에게 기본소득(참여소득)을 주자고 제안한다.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는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국민소득의 증가를 결과할 것이므로, 기후에 대한 대안을 낼 수 있어야 하며, 녹색기본소득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

세션4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본소득’이다. 김교성*이 진행을 맡는다.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의 기본소득 관련 연구나 실행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다.

정한울*은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와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을 토대로 “한국사회의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동향과 변화”를 발표한다. 유럽과 한국의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다. 유럽이 한국에 비해 훨씬 높다.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1차 2,500명의 경기도민 상



세션 5. 기본소득의 가능성: 신진연구자 기획 세션(왼쪽) 세션 6. 기본소득으로 “가족”의 정상성 질문하기(오른쪽)



세션 7. 2020년 총선과 기본소득(왼쪽) 세션 8. 기본소득운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전망(오른쪽)

대 여론조사에서 165명의 도민참여단을 모집한 후,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2차와 3차 조사결과를 실시한다. 1차 조사에서는 기본소득 필요성(단위: %)에 대해 필요 46.1, 보통 22.4, 불필요 29.7, 모름 1.8의 결과가 나온다. 2차에서는 필요 61.2, 보통 20.0, 불필요 14.5, 모름 4.2로, 3차에서는 필요 75.8, 보통 11.5, 불필요 12.1, 모름 0.6으로 변화한다.

장익현*은 서울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과 관련한 이론적 검토과정을 알려준다. 유영성*은 경기도가 실행한 청년 기본소득 정책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한다.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의 만족도는 80.6%에 달한다. 분기당 25만원, 1년 100만원이라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이,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한 줄 기 빛’과 같았다는 말이 아프다.

아무리 좋은 말과 관심 있는 주제가 이야기되어도 하

루 종일 듣고 있는 것은 쉽지 않다. 보상처럼, 위로처럼 저녁 식사자리가 이어진다. 작년과 같이 채식위주의 식단을 함께 하면서 담소를 나눈다. 식사 후, 술이나 한잔하 자고 유혹한다. 적어야 하기에, 그러려면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하기에 애써 뿌리친다.

둘째 날은 두 층을 내려와 3층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참가 예정인원이 첫날보다 적다. 홀의 규모가 조금 작아져서(진짜로 3층 홀이 작은 지는 확인 안 해 봤음) 그런지, 인원이 줄었다는 느낌이 들진 않는다.

가장 좋았던 세션을 꼽으라면 세션5이다.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다른 세션 참가자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신진연구자 기획세션으로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서정희*의 진행으로 1인 연구,

2인 연구, 단체 연구의 결과를 선보인다.

고태은*/김지선*은 페미니즘기본소득 논의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모색한다. 기본소득에 대해 여성주의자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저해와 성별분업 강화 가능성, 남성 가장에 의한 종속심화 및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동등한 기회가 축소될 것 등이 우려의 내용이다. 기본소득은 이런 우려에 대해 ‘정말’ 해방적 제도가 될 수 있는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조민서*는 제임스 퍼거슨의 말을 인용하여 ‘청년에게 물고기를 줘라?’는 질문을 던진다. ‘청년’, ‘물고기’, ‘줘라’가 지니는 각각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로서의 ‘청년 기본소득’제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전반의 문제를 제기한다.

김수연*/김지현*/이지은*/조민서*/홍은경*/유영성*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수급자 6명에 대한 ‘FGI(집단 심층면접)’결과를 분석하여, ‘기본소득이라는 돈의 사회적 의미와 감각’을 이야기한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느낌을 청년들은 ‘공돈’, ‘여유’로 표현한다. 정책 만족도는 매우 높았지만 기본소득의 원칙에 대해서는 낮은 동의 수준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전무했던 ‘사회’, ‘권리’, ‘국민’, ‘행복’과 같은 언어들로 포착할 수 있는 씨앗을 발아한다.

세션5가 신진연구자들의 무대였다면, 세션6은 “기본소득청‘소’년 네트워크”의 장이다. 김주은*이 첫날 개최식에 이어 다시 사회자로 나선다. 주제는 기본소득을 통해 “가족의 정상성에 대한 질문하기”이다. 남성 가부장과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가 한 가족을 이루는 ‘정상적(?)’ 가족유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한다.

김신아*는 ‘기본소득과 가족구성권’을 통해 가족의 구성에서부터 가족으로 살아가기, 가족 해체의 모든 상황에서 불평등과 부정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제도로 포섭하려 한다. 기본소득과 생활동반자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실현된다면

전통적인 ‘결혼’이 아니라 다른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다.

김혜미*는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과 정책간의 괴리를 지적한다.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가족(가구)중심이다.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묻고 있으며 복지정책들은 모두 신청주의다. 노인빈곤율은 50%에 이르는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없는 사회가 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전정례*는 기본소득의 관건이 가족구성권에 있다는 독특하면서도 의미 있는 주장을 내놓는다. 기본소득의 핵심은 자율성이며 자율성은 관계망에서 온다고 할 때,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있도록 가족구성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션 7은 ‘2020년 총선과 기본소득’이며 이창곤*이 진행한다. 고광용*은 정의당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말한다. 정의당 정책의 키워드는 ‘확대재정’이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아동, 노인기본소득, 청년 기본자산 소득, 농민기본소득, 녹색기본소득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백희원*은 녹색당의 정책 중심을 기후위기와 불평등, 정치개혁, 페미니즘으로 정했음을 밝힌다. 녹색당은 사교육을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일자리를 얻고, 정규직이어야 소득의 안정성이 보장되며, 아파트 구입은 손해 보지 않으며, 결혼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한국사회의 가설들을 기각하는 정책을 펴고자 한다.

기본소득당은 단일의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한국 최초의 정당이다. 용혜인*은 기본소득당이 총선 표어가 ‘조건없이 매월 60만원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 시민배당, 토지배당, 탄소배당과 더불어 민주주의 배당과 데이터 배당 등을 내세운다. 각각의 자원 확보 방안도 제시한다.

세션8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창립 10년’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기본소득 운동 전반에 대해 돌아보는 자



폐회를 앞두고 백승호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장이 양일간 진행된 포럼 전반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의 성사를 위해 준비부터 진행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참가자들

리이다. 류보선*의 재기와 유머 넘치는 사회로, 안효상*이 ‘기본소득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안효상은 한국 기본소득의 역사를 87년 체제에서 97년 체제에 이르는 전사,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창립과 초기활동, 2014년에서 현재에 이르는 회원조직으로의 전환과 두 방향(연구 및 사회활동)의 활동의 세 시기로 나누어 소개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향후 과제로서 자기 재생산이 가능한 정도로 회원조직을 확대할 필요성과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를 내세우는 대중조직의 필요성을 든다.

폐회식에서 백승호는 이틀간의 포럼을 종합·정리한다.

사진촬영을 끝으로 포럼은 막을 내린다.

* * *

올해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창립 10주년이다. 장소를 바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주년 기념식, ‘한 끼의 식사와 함께하는 10년의 기억’이 이어진다.

10주년을 기념하여 유명을 달리한 권문석, 김종훈 두 기본소득운동 동지들에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 추모사 낭독과 묵념으로 진행된다. 류보선의 추모사는 웃음으로 시작하여 울림으로 남는다.

10주년을 기념하여 기본소득 운동에 기여한 세 분(이선배, 김찬휘, 박경철)에 대한 감사패 시상이 진행된다.

자리가 파한 후 기념식만으로는 모자랐던지 긴 뒷풀



이가 새벽까지 이어진다.

*행사참가자(진행순서에 따름)

김주온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원재 LAB2050 대표

신종화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곽노완 한신대 연구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금 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이다혜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백희원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이상헌 한신대 지역발전센터장

강상구 정의당 전 교육연수원장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

장익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태은 가톨릭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지선 가톨릭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민서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김수연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김지현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이지은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홍은경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김신아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보스턴 피플팀

김혜미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전정례 은평주거복지센터

이창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준) 대표

류보선 군산대 국문과 교수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사진으로 보는 “국제기본소득행진”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동시에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행진을 벌였다. (물론 ‘동시’는 불가능하다. 지구 자전은 해 뜨는 시각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기에, 각자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의 ‘10월 26일’이었다.) 호주 허비베이, 대한민국 서울, 불가리아 소피아, 터키 이스탄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베를린, 가나 쿰분구, 캐나다 토론토, 미국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등, 13개 나라, 30개 도시에서 참여한 이번 행진은 “Basic Income March”라 불렸고, 한국에서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 Seoul)”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참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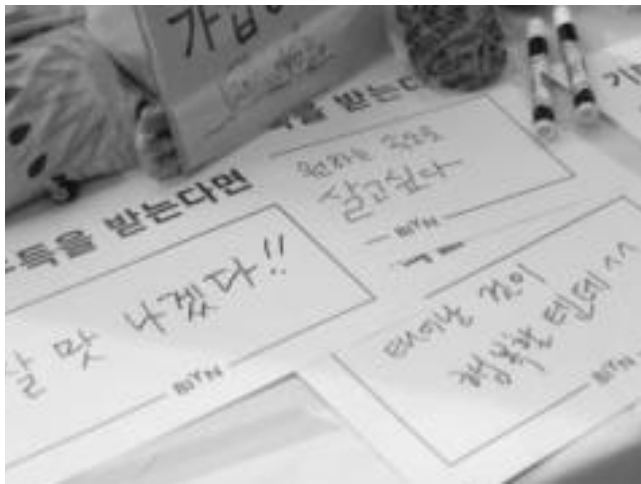


한국의 국제기본소득행진은 10월 2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서울 대학로 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에서 사전집회를 하고, 대학로부터 보신각까지 행진을 벌였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제안으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당(준), 녹색당,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LAB2050, 기본소득정치연대,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인천사람연대, 가톨릭평론 독자모임, 라이더유니온 등 12개 단체들이 함께했고, 150명가량의 시민들이 행진에 참여했다.

그리고 전 세계 기본소득 행진 참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호주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메시지 글을 출력해서 나눠줬고, 그 밖의 여러 도시들에서 행진 동안에 우리의 메시지를 낭독했다고 한다. 그리고 독일의 행진 참가자 올라프 오스터탁(좌파당 기본소득연구그룹 공동창립자)에게서 한국의 참가자들과 이번 행진의 의미를 공유하고 연대하는 메시지를 받았다. (뒤의 메시지 글들을 참고.)

전 세계 기본소득운동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2019년 10월 26일 국제기본소득행진”을 몇 장의 사진들로 그려보았다.

참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웹사이트(<https://basicincomekorea.org/basic-income-march-seoul-2019/>)와 페이스북 페이지(@BasicIncomeMarchSeoul)에 그날의 기록들이 더 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준비한 참여 프로그램. 사전집회 동안 참가자들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고 싶은지를 적었다. ©BIYN



창당을 앞둔 기본소득당(준)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정당”의 탄생을 알렸다. ©BIYN



참가자들은 “BASIC INCOME MARCH 모두에게 기본소득” 문구가 적힌 손수건과 “모두에게 기본소득” 손피켓으로 국제기본소득행진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양희석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 가이드북 <당신의 삶에 기본소득이 생긴다면>을 참가자들과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기본소득당



대학로에서 보신각까지 ‘기본소득 행진’ ©기본소득당



참가자들 ©양희석



MESSAGE TO BASIC INCOME FRIENDS ACROSS THE GLOBE

We here in Seoul are delighted to feel that we are marching in a common cause, Basic Income for All, with friends across the world.

Basic income idea was a kind of symptom which showed the crisis of the time. Whenever people's life collapsed, it rose. In the present, we witness the same situation as before. Human beings are faced with the climate crisis, increasing inequality and brutal atrocities from which the most suffer. Increasing concern for basic income just demonstrates how extreme the present crises are.

Basic Income is also a solution which indicates the way we should take. It can not only reduce social inequality but also empower people to explore the measures to solve the challenges of our time. In this sense, basic income is not a policy but a source of inspiration.

Basic Income March is a channel through which variegated voices can flow. Basic income movement can march only if it succeeds in assembling lots of individuals and groups who want to be free.

Basic Income March is also an expression of our will. We don't want that our time will end in tragedy. Instead, we try to build a society more democratically and more environmentally. Basic income would play a significant role on the road.

We give our best regards to all of you marching today – best wishes and truly unconditionally yours,

YOUR FRIENDS FROM THE BASIC INCOME MARCH SEOUL
(SOUTH KOREA)

서울의 국제기본소득행진 참가자들이 전 세계 행진 참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Message To Basic Income Friends across the globe

We here in Seoul are delighted to feel that we are marching in a common cause, Basic Income for All, with friends across the world.

Basic income idea was a kind of symptom which showed the crisis of the time. Whenever people's life collapsed, it rose. In the present, we witness the same situation as before. Human beings are faced with the climate crisis, increasing inequality and brutal atrocities from which the most suffer. Increasing concern for basic income just demonstrates how extreme the present crises are.

Basic Income is also a solution which indicates the way we should take. It can not only reduce social inequality but also empower people to explore the measures to solve the challenges of our time. In this sense, basic income is not a policy but a source of inspiration.

Basic Income March is a channel through which variegated voices can flow. Basic income movement can march only if it succeeds in assembling lots of individuals and groups who want

to be free.

Basic Income March is also an expression of our will. We don't want that our time will end in tragedy. Instead, we try to build a society more democratically and more environmentally. Basic income would play a significant role on the road.

We give our best regards to all of you marching today – best wishes and truly unconditionally yours,

Your friends from the Basic Income March Seoul (South Korea)

전 세계의 기본소득 친구들에게,

서울에 있는 우리는 기본소득이라는 대의 속에 전 세계의 친구들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매우 기쁩니다.

기본소득은 시대의 위기를 드러내는 징후 같은 것입니다. 민중의 삶이 무너질 때마다 기본소득은 부상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기후 위기, 커지는 불평등, 잔혹 행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현재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해결책입니다. 기본소득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영감의 원천입니다.

기본소득 행진은 다양한 목소리가 흐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본소득 운동은 자유롭기를 원하는 수많은 개인과 집단 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때에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행진은 우리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가 비극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더 민주적이고 더 생태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본소득은 이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행진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무조건적인 진심을 담아.

서울 기본소득 행진에 참가하는 친구들이

Olaf Michael Oetering

Co-founding member
of the Basic Income Working Group
within the party DIE LINKE

DIE LINKE.
BUND GEGEN REICHENTUM

Message To Basic Income Friends In Seoul

From Basic Income Friends In Berlin

Dear friends,

we here in Berlin are delighted to hear that the Basic Income Movement of today is able to show that there is a common cause to unite us in times of massive division.

Basic Income in itself is more than a way to organize a community. It is a refusal to accept man-made misery as a given. It is a pledge to welcome every human being regardless where he or she is born on this planet. It is proof that progress is still thinkable, not only technological or economical, but social as well.

Many powers that be force us to believe that there is not and will never be enough for everybody. But as Mahatma Gandhi once put it: "The world has enough for everyone's needs, but not everyone's greed." In fact, the way modern societies are organized benefits the destruction of the very basics that human beings need, actually that humankind needs to sustain.

Landgrabbing deprives people in rural areas from being able to support themselves. The abuse of drinking water for industrial manufacturing takes away any perspective at surviving in the mountains. Yes, some people have to leave their countries because of global warming. But even more are forced to become refugees because of actual war – and the war that is performed on them labeled as economic progress.

The lack of social security makes the latter kind of war so effective, but only in a certain way. It serves centraliza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all the wealth there in only a few hands. So, since this is being performed on a global scale as seen never before in history, the answer must be an idea that provides social security also on a global scale.

We feel that we share the belief that Universal Basic Income can be that idea. It serves not only as a "freedom dividend" or the most equal way of civilization – as it is often referred to around here –. It really gives power to the people and enables them to say no to all the methods that destroy the natural resources beyond their recreational capacities.

It seems to us that the youth has now detected that there is a responsibility for nature that goes beyond the scale of former political movements. The demand of "freedom for future" or "extinction-rebeller" is that there is enough air to breathe and water to drink for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That is in fact the most basic goal. But to achieve that goal we must teach our societies to stop depriving people from their basic needs for unsocial practices.

In fact, to stop forcing people to cut not only trees but whole forests, to dry not only wells but whole rivers, we must stop to poisonize them. Poverty is not a lack of character, it is a lack

of cash", said Rudolf Steiner both wisely and convincingly. "Only through the harmonization of a social environment where each and every job is better than no job we have seen it happen that people participate "solidarily" in their own demand.

So if we as humanity really set up the goal of keeping our planet earth a place where future generations can lead decent lives, we have to eliminate poverty first. Otherwise we will fail to convince people that the planet as a whole is at risk, as long as their lives are endangered too. Because people will always choose the wellbeing of themselves and their closest dear the wellbeing of larger entities such as the planet earth.

But, and that is what can give us hope, there already is an idea that has spread worldwide. Today there are marches in many cities in many countries, as far as we know on all continents but Antarctica, advocating for a Universal Basic Income as a human right, to be granted worldwide. That unity is strong. There is a new idea, and we can take that idea that leads us to a brighter, better future, being united as human beings, and sharing one common goal.

Guarding each other that very right to land – and to enjoy peace, freedom, company and prosperity together. There is only one planet to live on – and only so little time left. Let's start to share.

We give our best regards to all of you marching today – best wishes and truly unconditional yours.

Your friends from the Basic Income March Berlin (Germany)

On behalf:
Olaf Michael Oetering

독일 베를린의 기본소득 행진 참가자가 서울 행진 참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Message To Basic Income Friends In Seoul

From Basic Income Friends In Berlin

Dear friends,

We here in Berlin are delighted to hear that the Basic Income Movement of today is able to show that there is a common cause to unite us in times of massive division.

Basic Income in itself is more than a way to organize a community. It is a refusal to accept man-made misery as a given. It is a pledge to welcome every human being regardless where he or she is born on this planet. It is proof that progress is still thinkable, not only technological or economical, but social as well.

Many powers that be force us to believe that there is not and will never be enough for everybody. But as Mahatma Gandhi once put it: "The world has enough for everyone's needs, but not everyone's greed." In fact, the way modern societies are organized benefits the destruction of the very basics that human beings need, actually that humankind needs to sustain.

Landgrabbing deprives people in rural areas from being able to support themselves. The abuse of drinking water for industrial manufacturing takes away any perspective at surviving in the roundabouts. Yes, some people have to leave their countries because of global warming. But even more are forced to become refugees because of actual war – and the war that is performed on them cloaked as economical progress.

The lack of social security makes the latter kind of war so effective, but only in a certain way. It serves centraliza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all the wealth there is in only a few hands. So, since this is being performed on a global scale as seen never before in history, the answer must be an idea that provides social security also on a global scale.

We feel that we share the belief that Universal Basic Income can be that idea. It serves not only as a “freedom dividend” or the next logical leap of civilization – as it is often referred to around here – , it really gives power to the people and enables them to say no to all the methods that destroy the natural resources beyond their recreational capacities.

It seems to us that the youth has now detected that there is a responsibility for nature that goes beyond the scale of former political movements. The demand of “Fridays for future” or “Extinction rebellion” is that there is enough air to breathe and water to drink for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That is in fact the most basic goal. But to achieve that goal we must teach our societies to stop depriving people from their basic needs by unsocial practices.

In fact, to stop forcing people to cut not only trees but whole forests, to dry not only wells but whole rivers, we must stop to pauperize them. “Poverty is not a lack of character, it is a lack of cash”, said Rutger Bregman both simply and convincingly. Only through the hopelessness of a social environment where each and every job is better than no job we have seen it happen that people participate “voluntarily” in their own demise.

So if we as humanity really set up the goal of keeping our planet earth a place where future generations can lead decent lives, we have to eliminate poverty first. Otherwise we will fail to convince people that the planet as a whole is at risk, as long as their lives are endangered too. Because people will always choose the wellbeing of themselves and their closest over the wellbeing of larger entities such as the planet earth.

But, and that is what can give us hope, there already is an idea that has spread worldwide. Today there are marches in many cities in many countries, as far as we know on all continents but Antarctica, advocating for a Universal Basic Income as a human right, to be granted



worldwide. That really is saying: There is a way out, and we can take that road that leads us to a brighter, better future, being united as human beings, and sharing one common goal:

Guaranteeing each other that very right to exist – and to enjoy peace, freedom, company and prosperity together. There is only one planet to live on – and only so little time left. Let's start to share.

We give our best regards to all of you marching today – best wishes and truly unconditionally yours,

Your friends from the Basic Income March Berlin (Germany)

On behalf:

Olaf Michael Ostertag

베를린의 기본소득 친구들이
서울의 기본소득 친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친구 여러분,

여기 베를린에 있는 우리는, 오늘의 기본소득운동이 대중 분열의 시대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대의를 보여줄 수 있다는 소식에 매우 기쁩니다.

기본소득은 공동체를 조직하는 방법 이상의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인간이 만든 고통을 그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기본소득은 그/그녀가 이 지구상의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을 기꺼이 환영하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기본소득은, 진보는, 기술적 경제적 진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진보 또한,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두를 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또 결코 충분할 수 없다고 믿도록 강요하는 많은 힘들 있습니다.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가 예전에 얘기했듯, “세상은 모든 사람의 필요에는 충분한 곳이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을 위해서는 충분치 않은 곳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들이 조직되는 방식은 인간들에게 필요한, 사실상 인류가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기본들의 파괴에 유용합니다.

토지를 빼앗긴 농촌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산업에 남용되면서 그 일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전망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실제 전쟁 때문에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경제적 진보라는 외피를 쓰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부족은 위와 같은 실제 전쟁을 매우 효과적이게 만듭니다. 오직 특정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사회 안전망의 부족은 오직 한 줌의 사람들에게 모든 부가 집중되도록 합니다. 이런 일이 역사상 유례없는 전 지구적 규모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답은 사회 안전망도 전 지구적 규모로

제공하는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바로 그 아이디어라는 믿음을 공유한다고 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자유배당(freedom dividend)”으로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기 베를린 주변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로 하자면, 다음 단계의 타당한 문명 도약에 기여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진정으로 민중에게 힘을 줍니다. 재창출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자연자원을 파괴하는 모든 제도들에 ‘안 돼’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보기에, 청년들은 지금, 자연에 대한 책임을 감지하고 있으며, 이전 정치운동들의 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기후행동에 나선 세계 청소년 연대모임)”이나 “멸종반란(Extinction rebellion, 기후변화시대에 맞서는 국제운동단체)”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숨쉴 충분한 공기와 그들이 마실 충분한 물입니다. 그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반사회적 실천들을 통해 사람들의 기본적 필수품들을 빼앗는 일을 멈추라고 우리 사회들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들을, 그리고 모든 숲을 बे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는, 우물들을, 그리고 모든 강들을 고갈시키지 못하게 막으려면, 그들이 굶주리게 놔두서는 안 됩니다. “빈곤은 인격의 결함이 아니라 현금의 부족이다”고 루트허르 브레흐만은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모든 일자리가 무직보다 나은 사회 환경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종말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우리의 행성 지구를 미래세대들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우리는 맨 먼저 빈곤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구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 또한 위험한 상태인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늘 행성 지구 같은 더 큰 전체의 안녕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녕과 가장 가까운 이들의 안녕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나라의 많은 도시에서 행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남극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여되는 인권으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행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밝고 더 나은 미래로 우리를 인도할 그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자, 서로에게 존재의 권리, 평화와 자유, 협동과 번영을 함께 누리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길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유를 시작합시다.

오늘 행진을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마음을 담아, 진정으로 조건 없이.

독일 베를린에서 국제기본소득행진을 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대신하여,

올라프 미카엘 오스터탁 드림

번역: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기본소득,

새로운 사회복지

송상호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대표

현재 일하는 곳은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과거 비장애인 야학에서 자원활동을 하다 장애인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인연은 청소년마을학교와 함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다사리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함께하던 장애인들이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면서 장애인의 ‘교육’과 ‘인권’ 그리고 ‘복지’는 15년간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기본소득? 미친 소리 아니야?”, “빨갱이야 빨갱이”

사실 기본소득은 사회당 활동을 하면서 2007년 금민 대표를 통해 한번 만났었다.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설명할 때마다 소스라치는 사람들에게 반응에 ‘너무 성급한 건가?’ 스스로에게 되문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사회변혁을 사명으로 하는 ‘진보적 활동가’들에게는 역으로 ‘개량’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복지’마저도 방해한다고 비판 받았다. 이후 다사리 기관 활동에 집중하면서 기본소득은 주된 관심에서 잠시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장애인복지를 고민하면서 ‘노동’에 기반하지 않는 사회복지는 기본소득과 이어지기도 했다.

2014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잠시 기억해 보자. 전 재산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기고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사람들. 큰딸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실직 상태였기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다. 가난을 증명하지 못한 이들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었다.

‘장애인’, ‘중증장애인’, 항상 가난을 증명해야 하며 대부분 노동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혹 노동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만큼 ‘기초생활수급비’가 잘려나가는 수급권자. ‘의료보호’ 혜택이 항상 필요했기에 ‘최저임금 정도의 노동’보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선택해야 하는 장애인은 항상 가난과 함께 했고, 혹 노동을 하는 장애인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그래서 어떤 조건과 심사를 하지 않는 ‘기본소득’은 장애인계에서도 매력 있는 제안이었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대결. 인공지능 시대라는 충격.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공지능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충격적 미래를 보여주었다. 이제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모색에서 현실을 위한 모색으로 전환되어야 했고

그렇게 기본소득은 나의 삶에 다시 돌아왔다.

2016년에는 11월 연속강좌로 ‘지역사회와 기본소득(서봉균)’, ‘불안전 노동과 기본소득(금민)’, ‘복지와 기본소득(이명현)’을 준비했다. 2017년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준비모임’을 구성하였고 기본소득캠페인을 12회 정도 진행하였다. 또한 11월에는 첫 대중 강연인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강남훈)’이 있었다. 2018년에는 대중 강연으로 ‘청년의 삶과 기본소득 (용혜인)’을 진행하였고 ‘장애인 기본소득’ (주발제 : 김찬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9년 9월 5일. 좀 느리긴 했지만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가 출범했다. 더 나아가 지역의 진보정당(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미래당, 정의당)과 함께 다양한 기본소득을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 대중강연으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오준호)’를 진행하였다. 후속사업으로 충북지역에서의 ‘기본소득연대모임’을 준비하고 있고 기본소득‘청년배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나에게 기본소득은 사회복지다. 사실 사회복지사나 장애인권활동가 중에서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를 축소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회복지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장애인의 경우 노동과 연계된 사회보험은 처음부터 소외된 경우가 많지만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수당이라는 공적부조제도는 취약한 장애인의 생계의 기반이며,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는 장애인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삶의 기반이다. 한데 30~4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대체한다면 이는 받아들이 수 없는 공포가 된다. 또한 기본소득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존재한다.

그래서인지 ‘장애인 소득보장의 원칙과 구상’이라는 김찬휘 ‘대안’ 부소장의 글은 특히 반가웠고 나의 생

각을 정돈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 공적 부조를 대체할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보편적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축소가 아닌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 심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은 개인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충북의 기본소득운동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다. 이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와 함께 기본소득운동을 본격화 하고자 한다. 2019년의 경험을 특히 소중히 살려 2020년에는 지역 진보정당의 기본소득공동정책을 준비하고자 하며, 기본소득‘청년배당’ 프로젝트를 2년 이상 진행, 2022년에는 기본소득이 지역에 중요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어떤 일이든지 항상 시작보다 그 다음 한발을 더 댈는 게 힘들었다.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있기에 중단하지 않고 그 다음 한발을 댈고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나아가고자 한다.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모두 함께…….

친절한 교성 씨의 기본소득 QnA

김교성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Q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용과 재원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재원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A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 사회가 기본소득을 실행할 만큼 충분한 '지불 여력'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의 이슈입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 사회보장 체계의 일부를 대체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사회부조 급여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소득공제의 범위와 수준을 완화하여 재원을 조성합니다.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하면 좋은 선택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 등 현행 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와 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체계에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구간에 대한 상향조정,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며, 가장 일반적인 구상입니다. 최근 LAB2050에서 세금의 신설 없이 기존 제도를 손질하여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셋째, 금융거래세, 국토보유세, 비트세, 인공지능세, 로봇세, 자연자원 배당, 탄소세, 환경세 등의 다른 재원을 신설하거나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자산과 공동의 유산, 지대소득을 이용하여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분배하는 평등권 사상에 기반한 제안들입니다. 실현가능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정당한 자원임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도 이 방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재정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실행되기 전 다른 모델 간 경쟁과 합의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에 관한 연구는 강남훈(한신대) 교수가 주도해 왔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약 290조원으로 추정하고, 자원 마련을 위해 연기금 운용수익의 활용,

부가가치세 인상, 환경세와 증권양도소득세 신설, 국방비 절감, 기본소득세 신설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강남훈·곽노완, 2009). 기본소득의 수준(30~40만원)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163~225조원으로 추계하고, 보편·누진증세, 불로소득 종합과세, 토지세, 생태세, 기본소득세 신설 등의 대안도 제시합니다(강남훈, 2015). 최근 발표한 총 180조원 규모의 새로운 기본소득 구상에 따르면,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정률의 시민세(10%)를 부과하고, 화석 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세와 원자력 안전세를 신설하며, 토지 보유자에게 보유세(0.6%)를 부과하여 시민배당(107조원)과 환경배당(30조원), 토지배당(30조원)의 재원을 충당하는 안도 있습니다(강남훈, 2017).

결과적으로 재정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도 상당한 수준이지만,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증세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원 마련 과정은 다분히 정치적 갈등을 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의 도입과 실행은 조세체계의 근간을 얼마나 진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며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담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의 문제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과 지지의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참고문헌

- 강남훈(2017).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강남훈(2015). 「한국에서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 모형」. 녹색전환연구소. 기본소득 포럼 발표문.
- 강남훈·곽노완(2009).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민주노동정책연구원.



기
본
소
식

2019 겨울

#003